

제 I 장 서 론

1. 연구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이후부터 추진되어 왔던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되었으며, 이로 인해 팽목할만한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전통적 가족구조, 기술집약적 산업·생산구조, 임금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구조적 변화를 겪어야 했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르기까지 물질만능주의와 학력제일주의 등을 우선적인 가치로 받아들이게 하는 역기능을 가져와 가치혼돈 상태에까지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매체의 무분별한 보급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외래문화와 저급문화에 언제든지 접촉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와 이로 인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 동안 청소년 문제는 가정과 학교의 일차적 책임으로 한정 지우고 사회적 책임은 등한히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패륜 청소년문제, 학교 주변 폭력문제, 성폭력 등 문제의 정도가 날로 심각해지고 확산되어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국민 모두의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중앙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데, 대표적으로는 청소년 육성정책의 총괄 부처(청소년기본법 제10조)인 문화체육부가 1995년부터 추진하였던 ‘바른 청소년육성 운동’을 들 수 있다. 문화체육부는 이 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도덕성회복운동, 청소년자원봉사운동,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운동,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운동, 소외계층 청소년 결연운동 등을 수행하여 왔다.

또 교육계에서도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청소년 관련문제의 적결을 위해서는 현행의 학교교육만으로는 그 처방과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진단을 내리고 지식중심의 도덕·윤리교육을 실천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난 1994년 2월에는 21세기에 대비한 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 교육의 장기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범정부적·범사회적 교육 개혁의 추진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동 위원회에서는 지난 '95년 5월 31일 교육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구축' 등 9개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들 과제 중에 '청소년 개인 또는 단체수련활동과 학내·외 자원봉사활동의 내용과 참가시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상급학교 진학시 이를 반영'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교육적 요청에 의해 청소년자원봉사가 제도화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증대되고 있다. 또 사회적으로도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원봉사관련 민간단체는 물론 지역사회내 여러 분야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은 청소년자원봉사제도가 정착해 나가는데 있어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성인중심 자원봉사활동에 비추어 볼 때 현행의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그 역사가 매우 짧아서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나 가치, 다루어야 할 내용과 수준, 방법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미정립된 상태에 있으며 성인자원봉사활동과 차별성이 거의 없는 상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자원봉사가 보다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청소년자원봉사 관련 정책추진수단과 정책목표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자원봉사 정책환경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자원봉사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행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 개선되어야 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동시에 여기서 도출되는 대안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의 모형을 구축하여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민간단체, 학교, 지역사회에 요구되는 역할과 지원형태는 어떠한지 하는지 등을 연구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청소년자원봉사 정책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외국의 청소년자원봉사 정책내용에 관한 조사를 병행하여 우리 나라 자원봉사 관련 정책의 전달체계상의 문제점들, 예컨대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의 중복 및 행·재정 지원체계상의 혼선, 예산과 인력운영의 문제점 등을 예견하여 중앙과 시·도, 시·군·구간의 효율적인 집행체계와 연계체계확립,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체계와 참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와 제도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자원봉사가 국가의 중요한 청소년정책의 하나로 인식되어지고 있음에 따라 현행의 청소년자원봉사제도가 갖는 문제점과 이의 개선책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정책모형을 개발·제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자원봉사는 그 활동이 지향하는 바, 청소년의 인성개발과 공동체의식 함양, 민주시민정신 등을 체득케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어 지금까지의 일반성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미 청소년봉사활동을 제도화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사회차원에서도 이의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나의 교육의 장(場)으로 제공하여 진학이나 취업시 이러한 활동경력들을 나름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우리 나라의 청소년자원봉사 역시 봉사활동의 자발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실천교육의 한 과정으로서, 동시에 건전하게 육성시키고자 하는 국가정책의 한 단면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청소년자원봉사가 청소년정책의 하나로서 당위성을 갖기 위해 정책일반에 관한 이론적 선행연구, 그리고 청소년의 영역과 관련을 갖는 제반 정책들, 예컨대 교육정책이나 육성정책, 광의의 공공정책들이 청소년자원봉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된 정책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정책 상호간의 관계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우리 나라의 청소년자원봉사정책에 대한 분석과 모형개발에 앞서 주요 선진국들, 예컨대 일본, 미국, 영국, 불란서 등의 청소년자원봉사 관련정책

이나 제도를 현지조사하고 이들 나라의 정책내용중 우리 나라의 정책에 적용 가능한 내용들을 탐색하여 이를 우리 나라의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청소년자원봉사정책을 어떠한 내용으로 분석할 것인가 하는 틀을 제시하고, 이러한 틀 속에서 현행의 청소년자원봉사정책을 진단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청소년자원봉사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과 장애요인, 현행 봉사활동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책, 정책대안의 개발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현지방문조사(국내의 정부 관련부처, 국외의 일본, 미국, 영국, 불란서 등의 자원봉사관련부처, 주요 자원봉사기관 및 활동현장), 자원봉사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한 정책 델파이(Delphi technique) 조사와 정책대안선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실시하여 대안의 탐색 및 선정과정을 거쳤다. 델파이 조사대상 전문가 집단의 구성은 <표 I - 1>과 같다.

<표 I - 1> 조사대상 전문가 집단분포

구 분	선정인원	응답인원	비 고
교수	18	15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청소년학과
공무원	7	6	문화체육부, 내무부, 교육부, 교육청, 보건복지부
자원봉사단체	11	11	대구광역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대구광역시 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연합회,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삼성사회봉사단, 불런티어 21, 대전광역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한국자원봉사 능력개발연구회, 중앙일보자원봉사사무국
학교교사	4	4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단체	3	3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연맹, 수서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기관	3	3	녹변종합사회복지관, 한국복지재단,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연구기관	4	3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계	50	45	

특히 본 연구에서 조사방법의 하나로 정책델파이 조사를 택하게 된 배경은 전문가들의 주관적·직관적 판단을 이용하여 정책대안의 개발·창출뿐만 아니라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즉 익명성과 반복성, 합의를 도출해 내는 일련의 과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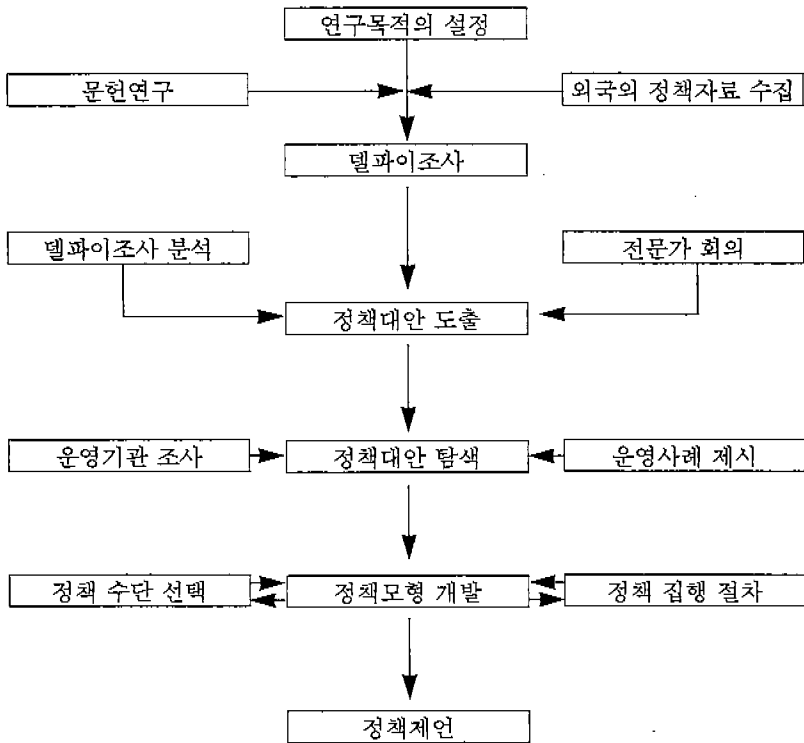
델파이 조사의 주요내용은 우리 나라 '청소년자원봉사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 과 '현행 학생봉사활동제도' 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책, 마지막으로 '정책대안의 개발' 을 알아보기 위한 주관적 의견조사로 구성하였는데, 조사항목에서 응답자의 직관적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 연구진이 기존의 문헌을 토대로 응답할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예시함으로서 가능한 짧은 시간에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개방형 의견조사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동시에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델파이 조사결과 각 주제별 이슈(issue)가 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토의를 거쳐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모형개발을 위한 대안의 탐색작업을 시도하였다. 특히 대안탐색과정에서는 자원봉사담당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확보하고자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는데, 이의 목적은 기존의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 자원봉사기관들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조사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의 13개소를 포함하여 총 37개 기관이다.

동시에 국내 일선 학교와 미국이나 일본의 봉사활동운영사례를 참고함으로써 대안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의도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진이 최종적인 정책수단을 선정, 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을 종합하는 청소년자원봉사정책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수행된 연구의 절차는 <그림 I-1>과 같다.

〈그림 I-1〉 연구 절차도



제Ⅱ장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환경

제Ⅱ장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환경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며, 어떠한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가? 이러한 질문에 앞서 먼저 정책의 개념적 정의와 우리나라에 있어서 청소년정책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대체로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 (정정길, 1990, pp.37-38)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이며, 정책은 행위 지향적이며 문제 지향적인 의미로 사용' 된다고 한다(Titmuss, 1974, p.24).

위와 같은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책은 우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권위 있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보통의 경우에 공식적으로 천명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은 정책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정책대상집단(policy target group)까지를 포함하여 정책의 3대 구성요소라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자원봉사'는 그 자체로서 최소한 정책을 구성하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대상집단을 명확히 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청소년자원봉사가 하나의 정책으로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자원봉사는 어떠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들을 가지고 있고 정책의 객체가 되는 대상집단을 누구로 하고 있는지, 동시에 정책을 결정할 권한(정부기관의 장관, 국회, 대통령 등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있는 관련 정부기관의 기본방침은 무엇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권한을 가지는 정부부처의 정책환경들과 이들 환경들이 청소년자원봉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동시에 그 동안의 기존 정책과의 상호 관계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정책이 어떤 변수들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환경과 정치체제, 정책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고 한다(정정길, 1990, p.85.).

여기서 환경은 정치체제와 정책에 영향을 주며 정치체제는 정치체제의 환경인 사회 문화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제니 퍼어시 스미스(Janie Percy-Smith)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요구(needs)에 관한 정보(information)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 예컨대 취해야 할 행위나 어떠한 서비스(services)가 제공되어야 할 것인지, 누구에게, 어떠한 수준으로, 또 누구에 의하여 그러한 서비스가 전달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동시에 요구를 바탕으로 한 정보는 정책과정에 있어 수많은 상이한 지점들에서부터 사용될 수 있는데, 가령 다양한 서비스들과 정책영역들, 또는 지리적 영역들과 인구의 집단크기 사이에 자원을 어떻게 할당(allocation)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Janie Percy-Smith, 1996, p.8).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 결정의 구조적 틀 속에서 청소년자원봉사정책이 결정되는데 영향을 미친 요구들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환경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교육적 환경으로 상정할 수 있다. 즉, 열악한 사회·교육적 환경이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정치체제가 이의 해결을 위해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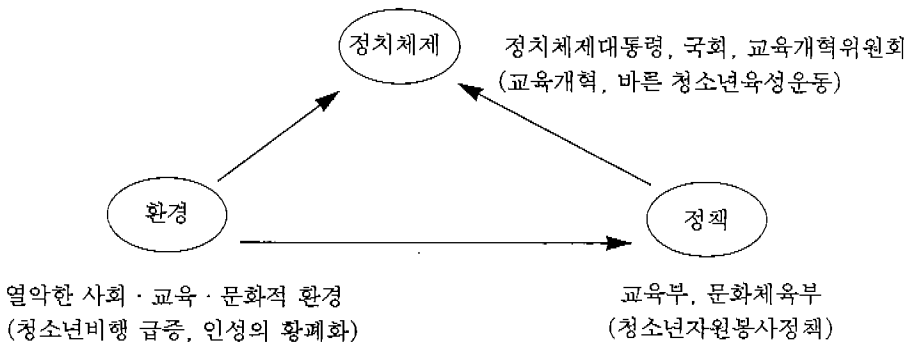
이를 보다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 동안 우리의 학교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하여 전인교육을 기대하기는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의 문제는 심각한 정도를 넘어 주요한 사회문제로까지 발전되어 청소년문제라고 하는 환경들이 결국 정치체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994년에는 교육개혁을 위한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교육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해당 정부부처는 법과 제도를 제·개정하거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결정 변수들간의 상관성을 도표로 보면 <그림 II-1>과 같다.

다른 한편, 기존 정책 상호간의 상·하위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위정책은 일반적으로 하위정책에 비해서 보다 근본적인 가치문제, 이념문제 등이 많이 포함되고 이를 구체화한 하위정책에 대해 정책지침이나 정책방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초정책결정의 핵심적 내용이 될 수 있다. 또 정책구조에서 보았을 때도 상위목표의 구체화는 하위목표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상위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현상이다. 예컨대 교육정책(상위정책)속에는 교사(教師)인력에 대한 수급정책이나 사교육비(私敎育費)억제를 위한 정책(하위정책)을 포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정책목표 역시 상위목표와 하위목표로 나눌 수 있으며, 하위목표가 상위목표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의 하위목표의 정책수단 역시 상위목표로서 또 다른 하위목표를 들 수 있다.

〈그림 Ⅱ-1〉 정책결정 변수의 상관도



이와 같은 목표-수단간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계층제(ends-means hierarchy)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자원봉사 정책 역시 교육정책이나 육성정책, 나아가서 공공정책의 정책수단으로, 때로는 자원봉사 그 자체로서 하위정책이 될 수 있으며, 이경우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을 가질 수 있다.

1. 교육정책과 청소년자원봉사

가. 자원봉사 정책배경

교육정책은 공공정책, 예컨대 주택, 보건, 문화, 사회, 경제, 국방정책 등과 같은 국가의 중요 정책의 하나로 존재하는 동시에 교육정책 그 자체로서 상위

정책으로 존재하여 수많은 하위정책들을 가질 수 있고, 각각의 상·하위정책들은 정책목표에 따라 수많은 정책수단들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우리의 교육정책은 많은 정책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과정에서 지난 1994년에는 대통령의 교육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교육개혁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고, 동 위원회에서는 한국 교육의 현안문제를 진단하고 이의 해결책으로 새로운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는 교육개혁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신(新)교육체제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먼저 그 동안의 한국 교육이 국가가 발전하는데 있어 원동력이 되었음을 성과로 평가하면서, 현안문제로 제일 먼저 '암기위주의 입시교육'을 지적하고, 창의성의 부재, 과중한 사교육비, 획일적 규제의 교육행정,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도덕교육의 상실, 세계 최고의 교육열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난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제2차 보고서인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는 첫째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구축', 둘째,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셋째,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구축', 넷째,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다섯째,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 여섯째,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일곱째, '교육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여덟째,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육성', 마지막으로 '교육재정의 GNP 5%확보' (1998년까지)를 교육개혁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p.29).

이들 9개 정책과제는 그 자체로서 교육정책의 내용과 수단이 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목표·수단의 계층제를 적용할 때 이러한 내용이나 수단 자체가 하위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상기한 9개의 과제중 봉사활동과 관련된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네번째의 정책과제인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은 우리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에 의한 물질만능주의, 상업적 대중매체와 유해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이 증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입시위주의 암기교육과 획일적인 평가체제로 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이 무시된 채 규격화된 인간만이 양산되고 있다는 데에 과제선정의 배경을 두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사회적·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교육개혁 정책과제의 세부내용으로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확립’,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방법 확립’, ‘세계화 교육 및 외국어 교육강화’를 들고 있다. 이 중에서 첫번째의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의 추진사항으로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봉사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청소년 개인 또는 단체 수련활동과 학내·외 자원봉사활동의 내용과 참가시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상급학교 진학시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실천위주의 인성교육강화’의 주요 추진과제에서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별「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문화체육부에서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참여 프로그램 및 기회를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기록유지를 위해 학교, 복지시설, 청소년단체간 협조체제를 구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 pp. 46-47. 52).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내용으로는 교육부 중등장학관실에서 시·도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회의를 통하여 시달한 「학생봉사활동 운영지침」(장학자료 제112호)과 '96년 2월 장학자료 제113호로 「학생봉사활동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자를 발행하여 보급한 바 있다. 「학생봉사활동의 이론과 실제」는 시·도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지도방향과 봉사활동계획 수립, 봉사활동 유관 집단과의 협조체제 구축,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절차 및 방법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터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학생봉사활동 대상기관을 편람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질 높은 학생봉사활동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Ⅱ-1〉은 교육부가 지정한 봉사활동 시범학교로서 교육부는 1997학년도부터 2년간 시·도 교육청별로 1개교씩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토록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1개교당 4백만원)에 상응하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는 등 봉사활동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표Ⅱ-1〉 교육부 지정 학생봉사활동 시범학교 현황

시범지역유형	시범봉사활동영역			
	위문활동	캠페인활동	환경·시설보존	일손돕기
대도시	서울 원목중 대구 수성중 인천 구월여중 경남 마산 합포중	부산 동래중	광주 봉선중 대전 신탄진 중앙중	
중·소도시		강원 삼척여고	충남 천안여중 전남 순천고 제주 중문상고	경기 덕소중 경북 구미여고
읍·면지역			충북 진천상고	전북 임실동중

한편 교육부는 '96년 2월 시·도 교육청 장학관 회의에서 시달한 봉사활동 시수를 원칙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감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시·도별 연간 봉사활동 시수는 〈표Ⅱ-2〉와 같다.

〈표Ⅱ-2〉 시·도 교육청별 연간 봉사활동시수 현황

연도 시간대	'96 학년도	'97 학년도
40시간대	서울, 부산, 대구, 충북, 경남	부산
30시간대	강원, 전북	충북, 경남
20시간대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인천, 강원, 경북
10시간대	경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학교에 일임	전남, 경북, 제주	전남, 제주

(자료: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방안」, 1997. 9. 교육부)

※ 학생봉사활동 연간 시수는 시·도·교육청별 실정을 감안하여 시·도·교육감이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음('96. 2. 생활지도장학관 회의)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종전의 초·중·고등학교 종합생활기록부(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지침을 개정('96. 1. 20. 교육부 훈령 제527호)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봉사활동 결과를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봉사활동을 학교계획에 의한 활동과 개인계획에 의한 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장학자료(제113호)를 일선 교육청에 시달하였다.

아울러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측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사나 학부모의 근본취지 이해, 정부 관련부처 및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아직까지 정부부처(특히 문화체육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의 상호유기적인 협력체계, 역할분담 등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상태에 있고, 봉사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도 극히 낮아 실효를 거두기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

〈표Ⅱ-3〉 시·도 교육청별 고입선발 사정 현황

구 분	총 점	선발 고사	내신 성적	내신 항목별 반영 점수					교외상 수상자	비 고
				교과성적	봉사활동	행동발달	특별활동	출석사항		
서울	300	없음	300	240	24	12	12	12		
부산	300	없음	300	240	18	12	12	18		
대구	500	200	300	240	18	12	12	18		
인천	300	없음	300	240	15	12	12	21		
광주	300	없음	300	240	15	15	15	15		
대전	750	450	300	240	18	12	12	18		50% : 내신 50% : 선발 + 내신사정
경기	300	200	100	70	10			10	10	
강원	400	200	200	140	16	12	12	14	6	
충북	200	200	없음							
충남										고등학교마다 상이함
전북	200	200	없음							
전남	200	150	50	50						
경북	200	200	없음							
경남	200	200	없음							
제주	200	200	없음							

특히 중학생의 봉사활동 시간은 일정시간별로 이를 점수화하여 고등학교 진학시 내신성적에 반영하고 있으나 <표Ⅱ-3>에서 처럼 시·도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시 반영되는 비율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아예 봉사활동 시간 등을 내신에 반영하지도 않은 경우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동시에 고등학교의 봉사활동은 대부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대학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있는데 '98학년도 경우 봉사활동 횟수와 시간을 입시에 반영하고 있는 대학은 총 180개교중 58개교로 32%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교육부 중등장학관실에서는 '97년 3월 「초·중·고등학교 학생봉사활동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을 시·도 교육청 봉사활동 담당장학사와 시범학교 담당자들에게 시달하였는데 그 동안의 시행과정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 교 사

- 실천위주 인성교육차원의 근본취지 이해부족
- 업무량 증가 등의 이유로 학생지도 소홀
- 근무시간 초과 등의 이유로 토·일요일 현장동행에 소극적
- 학생봉사활동 자체를 시기상조라고 주장

○ 학 생

- 활동 대상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봉사활동 자청
- 활동현장에서의 기법 및 자세 미숙
- 봉사활동후 활동시간 과다기록 요구
- 시간때우기식 형식적인 활동전개

○ 학부모

- 인성교육 차원의 근본취지를 이해 못함
- 학생대신 봉사활동을 자청하고 확인증 발급 요구
- 형식적인 활동후 확인증 발급 및 활동시간 과다기록 요구
- 일부 학부모의 이기심 발동 등 비 교육적인 형태 표출

○ 학교행정

- 형식적인 교사연수 실시
- 실행 가능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미흡
- 업무부서의 형식적인 지정으로 전문성·책임성 결여
- 지역사회내 대상기관 홍보활동 미흡

-대 지역사회 홍보(교육)미흡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활성화 정착방안(대책)으로 우선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전담부서 및 교사배치, 학교단위 계획수립 철저, 교육연수 강화, 홍보방안 모색, 장학자료의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강화, 홍보 및 연수강화를, 교육부 차원에서는 학생봉사활동의 정착화를 위한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과 대학입학전형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생봉사활동 반영 권장(반영비율은 대학 자율), 행정지도 강화, 관련부처(산하단체 및 일반 각종 업소 등)에 협조요청, 자원봉사센터와 협조체제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부의 또 다른 전국생활지도담당장학관 회의자료(1997. 9. 5)를 보면 봉사활동의 문제점과 대책을 첫째, '97학년도 시·도 교육청 중학생 연간 봉사활동 시간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봉사활동 근본 취지 약화를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한 봉사활동 연간 활동시수를 20시간 내외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둘째로 학생들이 본래 취지를 망각하고, 시간 때우기식 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생교육 강화로 인식전환을 지도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를 강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제도 도입 취지를 견지할 것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셋째로 봉사활동 지도체제 미약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도계층 봉사활동 참여를 권장하고 시·도 교육청 전담부서 운영강화를 제시하였다. 넷째로 봉사 대상기관의 인식부족을 들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교급별에 맞는 봉사프로그램 개발 촉구와 학생을 단순 노동대용으로 활용하려는 자세전환을, 다섯째로는 교사의 인식부족과 업무부담의 증가로 인한 불만을 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지도 참여교사에 대한 적절한 우대를, 여섯째로 봉사활동의 입시반영에 따른 학부모의 비교육적 행태표출에 대해서는 학부모 교육강화로, 마지막으로 행정지도 미흡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 전담부서 전문직 연찬과 시·도 교육청 장학지도 확인점검 강화, '98학년도 시·도 교육청 자구노력 평가 반영을 추진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교육부 자체의 문제점 및 대책과는 별도로 본 연구진이 그동안의 현장업무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의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들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 담임교사나 봉사활동 담당부서(대체로 환경부) 교사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부족과 업무과다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담당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봉사학습의 경험과 인성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봉사활동거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내 기관(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이나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현장에 최소한 1-2회정도는 방문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어떠한 내용의 봉사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과연 적절한 봉사활동거리인지를 살펴보고 해당기관과 내용이나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임하는 안이한 자세이다.

학생들 자신이 단순히 내신성적 때문에 시간때우기식인, 형식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는 자세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학생자신은 물론 학부모와 학교에 있다고 보겠으며 일부 수요기관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 현장에서 지도자나 관리자가 지시한 일들을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의 경우 자녀들을 힘든 일에는 아예 포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요기관측에서도 적당히 개인적인 잔심부름 정도를 시키고 봉사활동 확인증을 발급한다거나 학생 역시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심지어는 부모가 대신 봉사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확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나 교사, 수요기관의 실무자들은 물론 학교장이나 교감 등을 대상으로 먼저 봉사활동의 의미, 가치 등에 대한 기본 이해교육이 이루어져 한다고 보며 학생들에 대한 기본소양교육도 반드시 병행하여 이루어질 때, 봉사활동의 귀중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봉사활동이 살아 있는 체험교육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의 미흡을 지적할 수 있다.

학생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한데 이러한 협력체계구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이는 학생봉사활동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학생봉사활동의 활

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참여의 문을 열어 놓고 있고 동시에 지역사회 유관기관(예컨대 봉사활동 수요기관 등)들을 체계적으로 운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봉사활동거리를 제공하려는 관련 비영리 조직체(자원봉사센터나 정보안내기관 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적 관계성이 극히 미미한 실정에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2. 육성정책과 청소년자원봉사

가. 자원봉사 정책배경

우리 나라의 청소년정책은 해방직후와 1950년대에는 의무적인 초등교육과 기아나 고아 등의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핵심을 이루었고, 1960년대에 들어서서 결손가정의 아동 등에 대한 복지정책과 비행 청소년에 대한 선도정책이 공고히 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비로소 청소년육성에 관한 정책으로 변화되면서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었고 1990년초에는 체육청소년부(현재의 문화체육부)에서 전체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그 동안의 청소년 정책이 일부 문제청소년 위주의 단기적·규제적·산발적 처방에 머물고 있어 대다수의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과 바람직한 한국 청소년상의 형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국민의식과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스스로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수련활동기반을 마련하는 장기적·조장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계획에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부문」, 물질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부문」, 국제화 시대와 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교류부문」 및 이를 뒷받침할 「법제보강부문」, 「재정확충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청소년활동부문」에서는 수련거리를 통하여 청소년의 창의적인 개인성 개발(수련지표 : 건강·정서·용기)과 상호적 사회성 개발(수련지표 : 예절·협동·금지)을 위하여 덕목중심의 수련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협동부문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질서를 지키고 이웃에 봉사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율적이고 근면, 검소한 생활습관을 길러 협동할 줄 아는 태도를 내면화시켜 주는 일을 중요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계획의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에는 준비기라고 할 수 있는 제 1단계 사업기간중에 '학생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연구'를 추진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봉사활동 담당 전문지도자의 양성방안 검토, 봉사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재원의 확보, 교육과정에 정규과정화 추진(교육부와 협조하여 시간확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봉사활동 모형개발 등을 세부내용으로 하고 있다(한국청소년기본계획, 1991, p.66).

더욱이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31일부터 제정·시행된 청소년기본법에는 동법 제3조(정의)의 3호에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육성정책의 하나로 '바른 청소년육성 운동'을 추진하면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96. 6. 29 개정, 공포)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법적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동안 문화체육부에서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난 '91년 이후부터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 수련거리의 개발·보급, 청소년선도활동 전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배치 등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95년 초에는 청소년의 인성과 덕성함양,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하여 청소년자원봉사운동을 바른 청소년육성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왔다.

문화체육부에서 추진하였던 청소년자원봉사운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계기는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문화체육부에서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전국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중앙을 비롯한 시·도 단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의 운영에 관한 지원계획을 시달하였다('96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지원계획 통보, 문화체육부, '96. 2).

나.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문화체육부는 1996년 2월 16일에 1차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5대 광역시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를 목표로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침」을 5대광역시에 통보한 바 있다. 이 지침에 의하여 서울을 비롯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토록 하였는데 지침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지원계획

1) 목적 및 추진경위

① 목적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체계적 정보제공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교육
- 청소년의 자아실현과 공동체 사회발전에 기여

② 추진경위

- '95. 3 바른 청소년육성 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자원봉사은행설치·운영 방안 마련(문화체육부)
- '95. 5 교육개혁방안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인성교육과제로 포함됨(교육개혁위원회).
- '95. 7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세미나, 공청회 등)
- '95. 8~12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자료수집
- '96. 2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원계획 수립·시행
- '96. 3~7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시범설치·운영(서울·광역시 등 6개소)

2)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방침

- ① '96시범 설치한 서울·광역시 등 6개센터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설치·운영
- '96 : 6개소(특별시·광역시)

- '97 : 15개소(시·도)
 - ※ 신규 설치지역 9개소는 '97하반기에 개설
- '98 : 16개소(울산광역시 추가)
- '98이후 : 시·군·구 확대 설치·운영
- ② 명칭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 함
- ③ 중앙센터의 운영재원은 국고로 지원하고, 지방센터중 광역센터(시·도)는 청소년육성 기금과 지방비 각 50%로 구성하며, 시·군·구단위 센터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각 50%로 구성함.
- ④ 중앙센터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운영토록 하고, 지역센터는 해당자치단체장이 능력있는 청소년관련단체에 위탁 운영
 -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구축(협의회구성 운영)
- 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교육개혁에 따른 학생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3)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기본계획

중앙 청소년자원봉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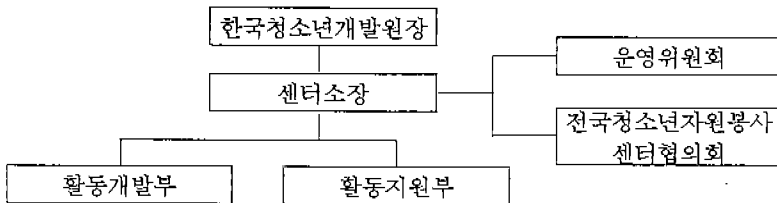
- ① 명칭 :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Korea Youth Volunteer Center)
- ② 운영기관 : 한국청소년개발원
- ③ 운영인력 : 10명(운영행정요원 6명, 자원봉사자 4명)
- ④ 주요기능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지원 중심역할과 관련사업 총괄기능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
 -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 청소년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활동 지도자 연수사업
 - 서울지역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수급정보 종합관리 및 지원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기록유지 관리 및 학교 등 관련기관에의 제공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유관기관·단체, 언론 등과의 협력사업 및 대국민 홍보
 - 기타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⑤ 연차별 운영목표(3개년 계획)

연 도	추진방향	비 고
1996년	자원봉사센터 운영기반 구축	시범운영
1997년	자원봉사센터 본격가동	보완발전
1998년	자원봉사센터 안정운영	운영정착

⑥ 조직체계

〈기본조직〉



〈조직별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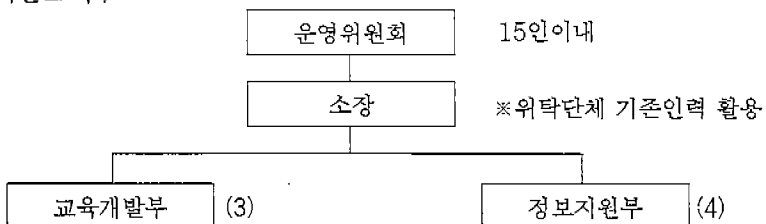
구분	인원	주요기능	비고
운영위원회	15	•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정책심의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학계, 청소년단체관계자 학부모등으로구성
활동개발부	4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기초조사, 연구·개발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 청소년자원봉사 관련 교재개발 • 청소년자원봉사자 및 지도자 연수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대국민 홍보	운영요원2 자원봉사자 2
활동지원부	5	• 서울지역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정보수급 종합관리·제공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기록유지, 관리·제공 •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행정업무지원 • 시·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	운영요원 2 행정요원 1 자원봉사자 2
소장	1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업무총괄·지휘	

지역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 ① 명칭 : ○○청소년자원봉사센터
- ② 설 치 자 : 시·도지사
- ③ 설치개소 : 15개소 ('96년 광역시 5개소, '97년 9개소, '98년 1개소)
- ④ 운영주체 :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관련 단체중 능력있는 단체선정, 위탁 운영
- ⑤ 운영인력 : 7명(운영·행정요원 5명, 자원봉사자 2명)
- ⑥ 주요기능
 - 시·도단위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수급 정보 종합관리·지원
 - 지역사회 청소년자원봉사자 연수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기록유지 관리 및 학교등 관련기관에의 제공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상담
 - 지역청소년자원봉사 관련기관·단체, 언론 등과의 협력사업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청소년육성 지역사회운동
- ⑦ 연차별 운영목표(3개년계획)

연 도	추진 방향	개소수	비 고
1996년	지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5	시범운영
1997년	지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14	보완발전
1998년	지역청소년자원봉사센터 본격 운영	15	운영정착

⑧ 조직체계
〈기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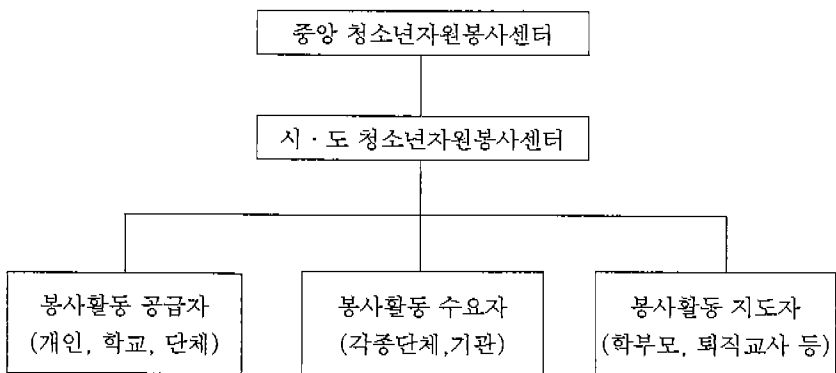


〈 조직별기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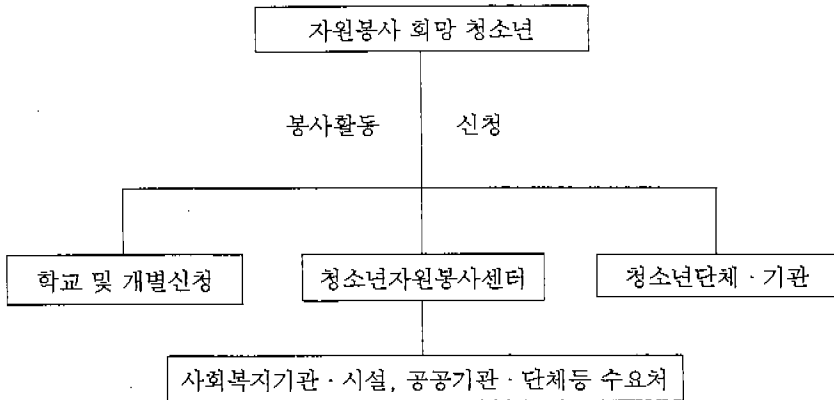
구 분	인원	주 요 기 능	비 고
운영위원회	15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정책결정 •지역사회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연계협력	지방청소년단체, 유관기관관계자, 학부모등으로구성
소 장	1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업무총괄·지휘	위탁단체 기존인력 활용
교육개발부	3	•청소년자원봉사자 및 지도자 교육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교재개발·보급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청소년육성운동 등	운영요원 2 자원봉사자 1
정보지원부	4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정보수급 관리·제공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행정업무지원	운영요원 2 행정요원 1 자원봉사자 1

4) 운영 및 관리체계

① 운영체계



② 청소년자원봉사지 관리체계



5) 운영단체 선정

- ① 가능한한 청소년단체를 우선
- ②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능력 반영
 - 인적·물적 자원능력, 사회봉사활동실적 등
- ③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검토·반영

6) 운영요원 선발

- ① 선발원칙
 - 지역사회내 청소년단체, 유관기관 등 추천자와 개별지원자를 대상으로 공개채용
 - 청소년업무 관계공무원, 청소년전문가 등 5인 내외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와 면접전형으로 선발
- ② 임용자격기준 및 선발기준(예시)

구 분	임용자격기준	선발기준
운영요원	▶ 청소년육성 관련분야(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사업학, 아동복지학, 정신의학, 보건학 등)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청소년육성분야 학사학위취득자 또는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으로서 청소년육성 관련 업무에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대함 - 자원봉사 또는 자원봉사활동 경력있는 자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경력이 있는 자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행정요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워드프로세서 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우대
자원봉사자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도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춘 자	▶ 대학생, 주부, 퇴직교사, 퇴직공무원중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지도에 평소 관심과 열의가 있는 자

※ 상기에 예시기준을 토대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지역별 특성과 센터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임용자격기준을 자율적으로 제정·운영

7) 중앙 및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① 중앙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사업추진

- 중앙청소년자원봉사센터내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협의회』(가칭)를 구성·운영 (비상설기구)
-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연간사업계획 수립시 중앙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전국적인 청소년자원봉사 지원사업의 효율

화 도모

- 중앙 센터는 시·도 센터의 추진실적을 매월 취합하여 문화체육부에 보고

②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간 연계·협력체제 구축

- 중앙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
- 타 부처 및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상기의 지침에 의하여 1996년도부터 설치된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현황은 <표Ⅱ-4>와 같다. 이 지침은 지방센터의 경우 센터의 설치자를 시·도지사라고 하고 운영체는 해당지역 청소년단체중 능력 있는 단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 위탁 운영케 하여 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원의 선발에 있어서도 청소년육성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청소년육성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청소년지도사 2급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청소년육성 업무에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임용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종사자의 전문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센터의 역할에 있어서도 서울의 중앙센터는 청소년에 관한 정책, 이론연구 및 지도자 양성 등의 국책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운영하도록 하여 전국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원봉사지도자 연수사업, 자원봉사관련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센터는 연구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앙센터와 비슷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 및 사업운영측면에서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시·도 센터의 경우 대부분 해당 지역 청소년단체에서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센터의 소장을 해당 단체의 직원 중에서 겸직이나 파견형태로 비상근으로 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센터 업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센터의 직원들이 해당 단체의 업무에까지 참여하게 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동시에 하위 부서장들의 업무 결정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해서 생기는 업무추진의 공백을 돌 수 있다.

〈표Ⅱ-4〉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현황

지역	운영단체	주소	개소일자	설치지역	비고
서울 특별시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8층	'96.6.27		
부산 광역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부산지부)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1393 수영만 요트경기장 본관 301호	'96.4.17		
대구 광역시	대구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	대구시 달서구 송현1동 702 청소년수련원 2층	'96.7.16		
인천 광역시	미추홀봉사단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582-1 가천인력개발원내	'96.3.15		
광주 광역시	홍사단(광주지부)	광주시 동구 수기동 5-4 홍사단회관	'96.3.16		
대전 광역시	대한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대전지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396 평송청소년수련원 2층	'96.3.20		
경기	한국보이스카우트 (경기연맹)	경기도 수원시 화서2동 436-3 한국보이스카우트 경기연맹 사무국내	'97.10.16	수원시	
강원	천주교 원주교구	강원도 원주시 인동 242-16 카톨릭센터내	'97.9.1	원주시	
충북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97.7.1	청주시	
충남	대한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논산지부)	충남 논산시 취암동 182-5 (화지산 신탐 2층)	'97.12.6	논산시	
전북	전북 청소년단체협의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가 108 전북은행 3층 302호	'97.10.31	전주시	
전남	목포YMCA	전남 목포시 무안동 5-52 YMCA회관 1층	'97.10.15	목포시	
경북	(사단법인) 경북청소년센터	경북 안동시 신안동 290-3 (구.명륜동사무소)	'97.12.9	안동시	
경남	홍사단(마산·창원지부)	경남 창원시 도계동 128-4	'97.9.30	창원시	
제주	(재)성지문화재단	제주시 일도 2동 141-4 기봉빌딩 3층	'97.9.9	제주시	

(자료 : 문화체육부 청소년기획과)

둘째, 인력과 예산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우선 센터의 구체적인 사업들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소양교육 실시(연중 4-5회 이상), 이들 청소년에 대한 활동터전예의 배치나 봉사활동 프로그램운영, 정보제공을 위한 소식지 발간(대체로 연간 2-4회), 컴퓨터 통신망 운영관리, 활동터전의 개발과 유지관리, 학교와 교육청과의 협조관계 유지 등을 수행하게 되는데 비상근 소장을 제외하면 5명이 이를 전담하게 된다. 예산 역시 개소당 연간 1억 1천만원 정도인데 이중에서 인건비나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20% 정도에 불과하여 사업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셋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미흡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유관기관이라 함은 교육청, 학교, 활동터전,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관련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러한 기관들과 센터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만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데 기관에 따라서는 배타적이며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강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의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해당 자치단체의 청소년자원봉사업무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과 인력, 유관기관과의 밀접한 상호협조체계 구축이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 공공부문과 자원봉사

우리 나라 자원봉사활동의 역사는 삼한시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노인을 위한 경노봉사(배장습속, 도구치레 등), 협동하는 공동체의식(두레, 향약 등) 등의 봉사전통을 이어 왔으며, 조선후기의 사회단체 등의 계몽적 성격의 사회봉사활동을 거쳐왔으나, 현대적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은 극히 최근의 일이라 하겠다.

6. 25전쟁 이후 고아, 미망인, 장애인 등이 대량으로 발생되면서 이 땅에 사회사업이 뿌리내리는 토양이 마련되었고, 영국을 비롯한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우리 나라에서도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극히 일부분

의 성인들에 의한 민간부문의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이후 국제적인 체육행사 예컨대, 86 아시안 게임이나, 88 서울올림픽대회 등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와 인식이 크게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분야나 체육행사 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 예술, 환경 등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민간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94년에는 중앙일보사가 자원봉사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자원봉사가 국민운동 차원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개혁방안으로 중·고등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도 자원봉사 학과목을 개설하고 있어 앞으로 국민 모두의 자원봉사활동 생활화가 기대된다.

이렇듯, 민간의 자원봉사 활동영역이 다양화되고 특히, 참여의 정도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이 요청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국가가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예산과 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자원봉사는 그동안 자원봉사활동의 분류에서 공공기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 또는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분야에서의 활동 정도로 서술되어 그 개념이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영역과 참여의 한계 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공공서비스는 공공정책(Public Policy)과 관계되어 있다. 공공의 정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쾌적한 환경과 풍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바탕으로 결정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결정되는 계획이나 지침, 방침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공공의 서비스는 이러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전달되어지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의 공공기관은 서비스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집행하는 공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공부문 자원봉사의 정의를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들 또는 공공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제공하는 제화나 서비스가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 또는 집행되는 기관에서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력하고자 참여하는 활동"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의 공공정책의 대상은 어떠한 부문들이며 어떠한 형태의 공공부문 자원봉사활동이 존재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공공정책의 부문은 나라에 따라 상이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정책의 대상은 산업화 이전의 절대빈곤층에 대한 생활보호, 직업훈련, 고용창출, 보건, 소득향상 등에 초점을 맞추다가 사회구조가 급속도로 도시화, 산업화로 진전되면서 발생하는 주택문제, 실업, 공적부조의 확대, 교통문제, 환경문제, 의료 등으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최근에 와서는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삶의 질과 관계되는 문화, 복지향상, 여가 등에 관심을 갖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문들에 대한 정책은 정부부처의 업무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공정책과 관련된 서비스활동에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참여는 사회복지부문을 제외하고 지금까지는 부처별로 산발적, 비조직적으로 운영되어 왔거나 극히 미미한 실정에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1995년부터는 정부부처의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내무부가 자원봉사운동의 주관부처로 되어 자원봉사지원 관련법안 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1995년 7월부터 지방자치제의 출범으로 시·도나 시·군·구 단위에서 자원봉사센터 설치를 계획하여 이에 대한 자원봉사업무 지원에 역점을 두고 행정조직도 사회진흥과 및 자원봉사계 등으로 개편하였거나 신설하고 있다.

이렇듯 자원봉사활동 관련업무를 내무부가 총괄·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부의 자원봉사 발전목표는 참여자수에 있어서 '91년도의 5%수준에서 2000년까지는 전체 국민의 10%수준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50%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참여계층과 봉사분야의 다양화(주부, 학생위주에서 직장인, 노인, 전문직 등으로 확대), 자조형 봉사, 학생봉사 등 우리문화에 맞는 실용적 자원봉사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원칙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단체에 대한 지원은 특정 종교나 정당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Non-Partisanment),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기존 취업 인력을 대체하는 목적이 되지 않도록(Non-Displacement) 하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자원봉사단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Non-Duplication)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

이러한 원칙 하에 주요 추진과제로는 첫째, 자원봉사단체활동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 지원근거를 둔 개별법의 제정추진, 둘째, 자원봉사 인프라로서 지역센

터 설치를 확대하고 중앙센터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를 구축, 셋째, 전국적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학생봉사활동을 지역센터와 협력관계 등을 형성하여 지원, 넷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계층 확대와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상제도 도입, 다섯째,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자원봉사관리 의 정보·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전국 자원봉사대회 개최, 여섯째, 선진국과 교류를 통한 정보 기술습득과 민간단체의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국제교류사업 개선, 마지막으로 정확한 기초자료에 의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국 실태조사와 연보 발간추진 등을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발전시켜야 할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이외에 중·장기 연구·발전과제로서는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사업중심체제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단체를 위한 '기금' 형태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설정하고 있다. 이렇듯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일차적 장기목표는 국민의 과반수가 자원봉사자로 참여수준을 높이는 양적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중요 정책대상의 하나가 초·중·고·대학생으로 하여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인구가 전국민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내무부가 추진하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정책의 또 다른 중점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자원봉사활동 지원법 제정추진을 들 수 있다.

이의 배경은 '88올림픽이나 삼풍재해 등을 계기로 자원봉사운동이 확산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또 다른 배경으로는 21세기에는 복지국가 및 지방자치시대의 전개로 자원봉사활동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함에 따라 이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제정의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94년 민자당의 "공익자원봉사진흥법"과 민주당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95년 여·야 철충안으로서 "공익자원봉사활동 지원법"을 14대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여기서 당시 제출되었던 법안의 주요내용중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국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봉사활동
7. 화재 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활동
8.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기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익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사활동의 범위는 실로 다양하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내무부장관이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제6조)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봉사진흥협의회”),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민간기구 별도 설치(중앙에는 내무부 장관이 인가한 재단법인 성격의 자원봉사센터를, 지방에는 지자체나 재단, 봉사단체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자원봉사 기금을 자원봉사재단의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관리 하되 재원의 조성은 정부출연금, 옥외광고 사업수입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 행·재정 지원조치로 자원봉사재단이나 센터는 정부출연금과 지자체보조금, 공공유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봉사단체는 조세감면, 사업비 보조 등의 혜택을 주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지급, 보험가입, 진학·취업시 혜택 등을 부여하고 기타 포상 등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무부는 법 제정추진과 병행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기반형성을 위해 표준모델을 개발, 인구 20만 이상의 지자체에 시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96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지방비 13억원)을 지원하여 부산 등 12개 시도에 20개소의 자원봉사센터를 시범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의 주요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모집(96년 총115천명 등록), 봉사활동 배치(96년 환경보호 111천명, 질서제도 55천명, 사회복지 52천명),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내무부는 '97년에도 54개소를 추가로 설치, 총 74개소로 확대 할 계획에 있으며(국비 총 10억원 지원) 센터의 운영방식은 지자체 직접운영 또는 민간단체위탁중 해당 지자체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지역단위로「자원봉사센터」를 설립, 민간부문의 자원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지역단위 자원봉사센터설치 현황은 <표Ⅱ-5>와 같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의 60%이상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필요성을 제기한 교육부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이렇다 할 시책 등이 부재한 상태에 있으며, 오히려 문화체육부나 보건복지부, 내무부가 일선 행정기관이나 민간기관을 통하여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수요를 일부 해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여온 사회복지부문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 내무부의 자원봉사영역과 중복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력과 예산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청소년자원봉사와 성인자원봉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전제로 할 때 청소년자원봉사업무 종사자는 단순한 자원봉사 관련 정보제공 업무보다는 봉사를 통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인성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자원봉사 관련업무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어 다양한 부처의 집행 관리기구들의 업무혼재로 인해 학생봉사활동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 관련 정부 부처들은 자원봉사와 관련 정책목표가 뚜렷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정책의 내용들로 인하여 부처별 고유업무를 침해하거나 상호 간 마찰과 중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조정·중재 또는 협력·연계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Ⅱ-5〉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설치현황

지역	운영단체	주 소	개소일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동구 초량3동 1195-2 신동양빌딩 303호	96.5
	부산시 제1자원봉사센터	중구 대청동 4가 81-1 카톨릭센터 6층	96.5
	부산시 제2자원봉사센터	부산진구 당감1동 282-11 동남은행 5층	96.5
	부산시 제3자원봉사센터	연제구 연산4동 578-3 노인종합복지관내	96.5
	부산시 제4자원봉사센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280-1	96.5
	서구자원봉사센터	서구 동대신동2가 231-1 동우빌딩 3층	97.6
	영도구자원봉사센터	영도구 남항동2가 236-4 상설재활용센터 5층	97.5
	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하구 괴정1동 486-14 15/3(3층)	97.6
	금정구자원봉사센터	금정구 구서2동 1013-5 45/7	97.5
	동구자원봉사센터	동구 수정2동 57-1	97.9

지역	운영단체	주 소	개소일자
부산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남구 문현3동 351-12	97.7
	수영구자원봉사센터	수영구 광안4동 776-18 동화빌딩 302호	97.7
	사상구자원봉사센터	사상구 모라2동 1362 우신프라자 4층	97.7
대구광역시	대구시종합자원봉사센터	달서구 두류1동 776-8	96.11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수성구 병어1동 238-3	97.4
인천광역시	인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남동구 만수5동 906	96.10
	남구자원봉사센터	남구 주안1동 75-180	
광주	서구자원봉사센터	서구 농성동 299	97.7
대전광역시	대전시종합자원봉사센터	중구 대흥동 499-1 대전광역시청내	96.3
	동구자원봉사센터	동구 원동 85-5	97.4
	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 용두1동 28-6	96.11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유성구 어은동 109	97.3
울산	울산시자원봉사센터	남구 신정5동 9-6 세명빌딩 4층	97.9
경기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96.7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269-1 시설품리공단 3층	96.10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307-37	96.8
	부천시자원봉사센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6-1석진상호신용금고 3층	96.10
강원	강원도종합자원봉사센터	춘천시 사농동 737-2	96.7
	원주시자원봉사센터	원주시 일산동 219-18	97.1
충남	천안시자원봉사센터	천안시 문화동 109-2 영덕빌딩 1층	96.8
	아산시자원봉사센터	아산시 권곡동 546-33	97.7
전남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순천시 장천동 53-1 순천시청 생활민원과자원봉사계	96.9
경북	포항시자원봉사센터	포항시 북구 용흥2동 115-3	96.12
	경산시자원봉사센터	경산시 옥산동 864-2 경일상호신용금고 3층	97.10
경남	창원시자원봉사센터	창원시 용호동 1	96.7
	통영시자원봉사센터	통영시 도천동 27-1	
	의령군자원봉사센터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61-1	97.7
	함양군자원봉사센터	함양군 윤림리 함양군청 내	97.7
	거창군자원봉사센터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97.8
제주	제주도자원봉사센터	제주시 연동 312-1	95.10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제주시 이도2동 1176-1	96.1

(자료 : 내무부 사회진흥과, 1997. 10월 현재.)

제III장 주요 외국의 청소년자원봉사정책

1. 일본의 청소년자원봉사정책

가. 자원봉사의 사회적 배경과 경향

일본의 경우 공익부문뿐만 아니라 국가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문제의 해결의 주체는 대부분 행정과 정치가 중심이 되어 담당하거나 해결하여 왔고 국민들 역시 그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가 다원화되어감에 따라 국민의 대다수는 생활의 만족도는 양적 기준에서보다는 질적 기준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가치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질적 기준은 행정에 진정하고 의존해서 기다림으로 만족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즉, 시민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문제를 풀어 나가 자신의 삶의 질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일본사회는 '고령자 사회로의 변화', '재택복지의 흐름', '가족기능의 저하'라고 하는 사회적 상황속에서 "복지8법"을 개정하여 재택복지를 법률화 시켰으며 이것과 병행하여 행정에 의한 시민의 볼런티어 활동을 복지 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행정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부나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고령자나 장애자를 지원하는 식사 서비스나 가사 원조 서비스, 이송 서비스 등 재택복지의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확대와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이나 복지공사, 사회복지협의회, 생협, 또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비교적 저액의 사례나 보수를 지불하는「유급서비스」도 전개되었다.

1993년에는 중앙 사회복지심의회 지역복지 전문분과회가 「볼런티어 활동이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세우고,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며,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를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복지공동사회의 형성을 위해 「공사 협동」·「주민의 참가」·「주민 상호 협조」를 강조했다. 또 주민 참가를 소홀히 했던 유상의 주택 서비스에 대해서도 「비영리성」에 기반을 둔 「볼런티어 활동」으로 적극적인 시민의 참가와 행정의 원조 등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의 볼런티어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시민(볼런티어)

의 주체성이 존중되고 명확한 역할 분담에 기초를 둔 파트너십의 확립이 전제되지 않을 때 불런티어 활동이 행정에 의해 조정되어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 행정시책의 보완에 이용되고 마는 위험성도 있다고 인식하고 불런티어 활동을 복지행정을 보완하는 노동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활동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방식 속에 교육의 장의 하나로 「함께 살아간다」라는 철학과 실천의 길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자각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일본의 '95년 국세 조사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1,830만 명으로 전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의하면 이것이 약 30년 후인 2025년에는 3,350만 명으로 인구의 27.4%를 차지하게 되고, 2050년에는 32.3%이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또 후생성의 「국민생활 기초조사」를 보면, 95년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중 12.6%(225만명)이 독신 생활자이고 그중 8할(178만명)이 여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0년에는 독신생활의 고령자는 31%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통계들을 통해서 미래에는 분명히 혼자 사는 사회가 오고 있다는 전망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이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 전반에 관한 인식-삶의 질의 중시와 고령자 싱글 시대화-을 토대로 일본사회는 자원봉사에 대한 필요성들을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나. 청소년자원봉사정책과 관련 근거

1) 정책수립의 기본배경

일본에 있어서 청소년자원봉사정책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현 일본 정부의 6대 개혁과제중 하나인 교육문제는 오늘날 일본 교육의 역기능 즉, 수험 경쟁의 과열과 「인간성 교육」의 경시풍조, 기업의 과도한 효율주의로 채용기준을 사실상 대학입시의 난이도(이콜 편차치)에 의존해 사회적 분위기를 초등 학생까지 학원에 다니게 하는 결과물을 낳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산업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은 일본사회내의 기존 전통구조를 파괴시키고 핵가족화와 소자녀화, 도시화 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역기능과 산업화의 폐해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증가와 그 결과물의

하나인 등교 거부나 이지매 문제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런 교육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중앙교육심의회은 「여유 있게 사는 힘」과 「살아가는 힘」이라는 교육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보다 나은 문제해결의 능력을 가진다. ② 스스로를 조정하면서 타인과 협조하고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등 풍요로운 인간성과 힘차게 살아가기 위한 건강과 체력”을 언급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의 인식으로 일본에 있어서의 교육은 정책방향의 변환을 모색하고 현재의 교실 위주 교육에서 새로운 변화와 시도를 모색하고자 경험의 교육인 자원봉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의 청소년 자원봉사제도는 크게 두가지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학습의 대상에서 자원봉사를 바라본다는 점이다. 청소년이 자신의 활동을 통하여 생각이나 의문을 가지고 문제해결의 방법을 스스로 구해 보는 것 또는 지역사회와 다양한 문제들(예를 들자면 자연보호나 노인시설 봉사, 자원 재활용 등)에 대한 접근으로 시작하여 나아가서는 이론과 경험 그리고 도덕적 가치의 체험까지 동시에 통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을 견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임하는 자세와 의욕 그리고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성급한 성과보다는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와 실천하는 마음을 길러 주겠다는 관점이다.

두번째 관점은 볼런티어 교육의 전개로써 「활동」을 보는 관점이다. 자원봉사의 장소를 불문하고 교육이 아닌 활동이기 때문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주체성, 자발성이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평가 역시 본인이 봉사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작성하여 평가를 하며, 교사의 의견이나 충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러한 교육적 관점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자원봉사 정책을 수립하게된 일본은 관이 주도적으로 지원·개입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관련부처가 바로 후생성과 문부성이다.

후생성과 문부성은 자원봉사에 관한 주된 행정기관으로서 자원봉사와 관련한 단일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관련법 및 행정고시·지도를 통해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사회복지 관련활동에 참여를 촉진하는 필요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간

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여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그밖의 사업은 사업별 모금과 기증금 등 자체 노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2) 관련 근거

후생성에서는 사회·원호국 지역복지과에서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관련 입법으로는 1951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동 법 제74조 6항은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주민의 참가를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후생성은 이 법 조항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인 전국사회복지협의회(전사협)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사협은 전국에 3천 4백 14개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고, 시·구·정·촌(市·區·町·村)에 2,272개의 볼런티어 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1992년 6월에 개정되어 동법 제70조의 2에서 후생대신으로 하여금 국민의 사회복지에 관한 활동에의 참가촉진을 도모하는 기본적인 조치에 관한 지침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93년 4월 후생성 고시 제117호에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관한 활동에의 참가 촉진을 도모하는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1993년 7월 중앙사회복지심의회 지역복지 전문분과의 의견 구신에 「볼런티어 활동의 중장기 진흥방책에 대하여」라는 답신 등을 통보함으로써 자원봉사 진흥에 보다 구체적인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행정고시로는 후생성이 '95년 발표한 '자원봉사 참가촉진 조치에 관련된 기본지침'을 꼽을 수 있는데 모두 7쪽인 이 고시는 자주성 자발성을 전제로 공적사회의 역할분담 및 복지 커뮤니티(Welfare Community)의 주축으로 자원봉사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문부성의 경우는 생애학습국에서 자원봉사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고교 및 대학입시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바 '93년 2월 각 교육위원회에 통지문을 내고 고교 입학생 선발에 있어 자원봉사활동이 적절히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문부성의 이같은 권고에 따라 '93년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중 42 곳에서 입학원서에 자원봉사활동란이 신설돼 입학사정에 반영되었고, '94년에

는 46곳으로 확대되었다.

1993년에 시행된 “고등학교의 입학자 선발에 대하여”라는 각급 교육위원회 등에 보내는 통지문에서 불런티어활동에 참가한 내용을 적절히 평가하라고 통지하였고 1993년 대학심의회 보고에서는 대학입학자 선발 실시요항에서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 스포츠, 문화활동, 불런티어활동 등을 적절히 평가할 것을 바란다고 기술하고 있다.

1996년 중앙교육심의회의 「21세기를 전망하면서 일본의 교육방향에 대하여」라는 답신에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을 충실히 하는 정책의 하나로 불런티어활동의 체험과 학습기회를 정비할 것을 제언한 바 있었고, 학교교육에서도 “불런티어활동에 관한 지도 통지 등”에서 사회봉사의 정신을 함양하고 공공의 복지와 사회의 발전에 있어 봉사활동을 중시하고 특별활동에 봉사적 활동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 사회교육에 관한 지원 추진책으로서 우선 생애학습 불런티어활동 종합추진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불런티어 사업에 관한 활동의 장을 개발하고 정보제공, 상담사업, 불런티어 양성 연수사업, 생애학습 불런티어센터의 개설사업에 대한 보조(현재 20개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둘째로 청소년불런티어 연수사업으로서 국립 올림픽 기념 종합센터에서 불런티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활동분야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립 청년의 집에서도 불런티어활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연구협의회와 지도자 양성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3) 주요 정책

가) 문부성의 청소년자원봉사정책

(1) 생애학습 진흥정책

생애학습은 급격한 사회변화, 즉 국제화, 정보화, 고령화 현상에 따라 평생의 평생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생애학습과 자원봉사는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로는 첫째, 자원봉사활동은 자기개발과 자아실현으로 이끄는 학습기초이며, 둘째, 불런티어 활동을 위해서는 학습을 해야하고 학습한 내용을 다시 활용한다는 점, 셋째, 평생교육자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들로 인해 생애학습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생

애학습은 볼런티어 활동을 통해서 더욱 가능하기 때문에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고령자까지도 볼런티어 활동에 참여케 하는 학습활동이다. 정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생애학습을 위한 체제의 조장'이다. 이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문화와 스포츠 등의 영역에서 생애학습 장려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 내에 생애학습국의 설치 등 정부의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일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0년 6월에 생애학습 진흥을 위한 최초의 법률인 "생애학습진흥법"을 제정하였다.

둘째, '인식제고와 정보제공'이다. 이는 자기자신의 교육에 대한 자발적 바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정신을 인식시켜 생애의 모든 단계에서 학습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하는 것이며, 생애학습 정보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학습과 관련된 정보와 상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학습기회의 확대'이다. 학교교육제도의 개선, 사회교육의 확대 및 교육시설을 개선시킴으로서 사회교육, 문화, 스포츠 활동을 고무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결과의 적용과 평가'를 정책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볼런티어 관련 주요 시책

볼런티어에 관련되는 주요 시책과 사업들로는 각종 심의회의 답신이나 통지 등으로 시달되는 데 주요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심의회 답신 요약

① 「사회교육 시설에서 볼런티어 활동의 촉진에 대해서」(보고)1986년 12월 3일

사회교육 심의회의 사회교육 시설 분과회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 생애학습과 볼런티어 활동, 사회교육 시설에서의 볼런티어 활동, 볼런티어 활동 촉진을 위한 조건 정비 등에 대해 기술.

② 「앞으로의 사회 동향에 대응한 평생교육의 진흥 방책에 대해서」 1992년 7월 29일

평생교육 심의회는 본 답신에서 「볼런티어 활동의 지원과 추진」을 당면 중점과제의 하나로 취급하고 그 이념이나 구체적 방책 등을 제

시험.

- ③ 「지역에서의 평생교육 기회의 충실 방책에 대해서」(답신) 1996년 4월 24일

평생교육 심의회는 본 답신에서 볼런티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 시책의 추진과 시설에서의 볼런티어 참가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수용제도의 정비에 대해 제언.

- ④ 「21세기를 전망한 우리 나라 교육의 자세에 대해서」(제1차 답신) 1996년 7월 19일

중앙 교육 심의회는 본 답신에서 「여유」속에서 아이들의 「살아가는 힘」을 키워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지역 사회에서 교육의 충실 방책의 하나로써 볼런티어 활동의 체험이나 교육 기회의 정비 등에 대해 제언.

(나)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관련 통지 및 추진사업

- ① 볼런티어 활동에 관한 지도·통지 등

- ⑦ 교육 지도 요령에 있어서 기술

사회봉사의 정신을 고양하고 공공의 복지와 사회의 발전에 힘쓰려는 태도의 육성을 중시하여 특별활동 등에서 봉사적인 활동을 명시

- ⑩ 고등학교의 입학자 선발에 대해서 (통지) 1993년 3월 22일

「고등학교 교육개혁의 추진에 대해서」(제3차 보고) (1993년 1월 26일)을 기초로 볼런티어 활동 등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각 도 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통지

- ⑫ 대학 입학자 선발 실시 요항에 있어서 기술

「대학 입시의 개선에 관한 심의의 정리」(대학 심의회 보고 1993년 9월 16일)의 제언 등을 기초로 입학자의 선발에 대해 「스포츠, 문화 활동이나 볼런티어 활동 등의 제 활동을 적절히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기술.

- ② 볼런티어 활동에 관한 추진사업

- ⑦ 볼런티어 체험 모델 추진 사업

아동·학생이 일정 지역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사회에 봉사하는 정신을 키울 수 있는 여러가지 볼런티어 체험 등을 하는

「볼런티어 체험 모델 추진 지역」을 지정하고 학교와 지역이 연대하고 협력해 볼런티어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실천적 조사·연구.

㉠ 볼런티어 교육 연구 협의회, 지도자료의 작성

볼런티어 교육의 자세 등에 대해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보호자, 볼런티어 단체, 시설관계자를 대상으로한 연구 협의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볼런티어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지도·실천예시 등을 게재한 지도 자료를 작성.

㉡ 근로 체험학습 통합 추진 사업

일정 지역의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 지역의 여러 가지 교육력자원을 활용하며, 근로나 봉사 등의 폭 넓은 사회참가의 제 체험을 하게 하는 실천 연구. (전국에서 9개 지역을 선정)

㉢ 과학 기술. 볼런티어 등록 명부의 작성 및 제공

과학기술에 관한 강연이나 실험·실연 등의 각종 사업에 있어서 강사 선정의 참고가 되도록 대학, 고등 전문 학교의 교원 등의 희망자를 「과학 기술. 볼런티어」로서 등록하고 교육위원회나 박물관 등에 그 명부를 배포.

㉣ 교사의 채용 선발에 있어서의 고려에 대해서 1996년 4월 25일

교사의 채용 선발에 있어서 볼런티어 활동 등이 적절하게 평가되도록 각 도, 지정 도시 교육위원회에 통지·지도.

(다) 사회교육에 있어서의 지원 및 추진사업

① 생애학습 볼런티어 활동 통합 추진 사업등 (1997년도 확충)

⑦ 생애학습 볼런티어 활동 통합 추진 사업 (169,000,000엔)

정부에서 각 도에 대해 볼런티어 사업에 관한 「활동의 장」의 개발과 정보 제공, 상담 사업, 볼런티어 양성 교과 과정등의 개발, 볼런티어의 양성·연수 사업, 생애 학습 볼런티어센터의 개설 등의 사업을 보조

① 생애학습 볼런티어 활동의 지원 및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1997년도 확충, 34,000,000엔)

지도자료의 작성과 전국 생애학습 볼런티어 활동 추진회의의 개최, 해외 볼런티어 활동 실태조사 및 활동 촉진을 위한 연대체제에 관한

연구 개발

㉔ 지역 교육 생활 센터 활동 추진 사업 (1997년도 신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연대 아래 지역의 학교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교육 생활화 센터」를 각 지역에 설치하고 여러 가지 볼런티어를 활용해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라) 스포츠·학술·문화 그외의 분야에의 지원과 추진책

① 스포츠 지도자뱅크 사업

각종 스포츠 지도자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기 위해 지도자 명부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사업에 대해 국고.

② 스포츠 프로그램 양성 사업

행정 직원 등을 대상으로 문부 대신 인정 사업인 스포츠 프로그램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내용을 갖춘 강습회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국고 보조.

(마) 기 타

① 1994년도부터 문부성 1종 직원 채용에 있어서 볼런티어 활동경력
의 평가를 실시토록 함

나) 후생성의 청소년자원봉사정책

(1) 기본시책

(가) 1992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 제 70조의 2 개정

「후생대신은, …(중략)… 국민의 사회복지에 관한 활동에의 참가 촉진을 도모하는 조치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침을 정한다」

(나) 1993년 4월 후생성 고시 제117호

「국민의 사회복지에 관한 활동에의 참가의 촉진을 도모하는 조치에 관한 기본적 지침」

① 지침의 목적

㉔ 「볼런티어 활동 등의 복지 활동에의 국민의 관심의 상승」

- 볼런티어 등록자수의 증가
- 비 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의 진전
- 기업 및 노동조합의 사회 공헌 활동의 활발화

- ① 「복지활동에의 국민의 참가를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평가하고 활동의욕에 따른 기반 정비」
 - 활동의 담당자 - 자기 실현, 지역 사회에의 참가
 - 활동의 수용자 - 다양한 복지 수요의 충족
 - 사회 연대, 상호 부조의 이념으로 이어져온 깊이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체제의 형성
- ② 참가를 촉진함에 있어서 기본적 사고
 - ① 자주성, 자발성을 최대한 존중
 - ① 기초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골드플랜 등의 추진에 의한 공적 서비스가 대응하는 것으로 하고 공적 서비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지 수요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보다 다양한 활동을 기대
 - ① 자유로우며 보다 계속적으로 한정된 활동을 해 나가기 위한 기반 정비 또는 지역복지를 총합적으로 추진
 - ② 자선 또는 봉사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서로 도우며 교류하는 복지지역사회 만들기를 추진
- ③ 구체적 조치
 - ① 복지활동에 대한 이해의 증진
 - 아동·학생을 시작으로 하는 평생을 통한 복지교육의 추진
 - 전국 대회, 홍보, 모델 사업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계발·보급
 - 각종 표창제도의 정비와 채용이나 입학 선발 등에 있어서 볼런티어 활동 실적의 고려 등 사회적 평가 시스템 구축을 검토
 - ① 복지활동의 조건 정비
 - 양성·연수의 충실 강화 및 볼런티어 보험의 보급
 - 전국 도·시·구·동 단계에서의 볼런티어센터의 정비와 기능의 충실
 - 모델 사업의 추진에 의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체제의 정비
 - ① 주민 참가형 복지 서비스의 추진
 - 회원제·상호보완성·유사성에 특색이 있고 복지활동의 다양함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이 필요
 - 활동이 보다 원활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각 단체의 연대

강화, 일손의 확보 등을 지원

㉔ 기업 및 노동조합의 사회 공헌 활동의 추진

- 관·민 공동의 조사·연구와 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각종 정보제공 등에 의한 지원
- 볼런티어 휴가제도와 세제상의 조치 등의 조건 정비

㉕ 지방 공공단체의 지원활동의 추진

- 지역 복지기금 등의 적극적 활용
- 각 시·구·동에 있어서 지원체제의 강화

(다) 1993년 7월 중앙사회복지심의회 지역복지전문분과 의견구신 -
볼런티어활동의 중장기 진흥방책에 대하여 (의견구신)

① 전국단계에서의 시책

- 전국볼런티어활동진흥센터의 운영(예산액 : 연간 74만엔)
- 실시주체 : 전국사회복지협의회
- 주요사업 : 홍보 및 계발활동사업, 정보제공사업, 양성 및 연수사업

② 도·도·부·현에서의 시책

- 도·도·부·현 볼런티어센터 활동사업의 충실
- 1현·시당 사업비 : 21,151천엔(국고 50%, 현 50%)
- 실시주체 : 도도부현·지정도시사회복지협의회
- 사업내용 : 복지교육 추진사업(이동 및 학생들의 볼런티어활동 보급 사업), 양성 및 연수사업, 홍보 및 계발사업 등

③ 시·정·촌 볼런티어 활동사업의 충실

- 총예산 : 552백만엔 → 608백만엔
- 실시개소수 : 413개소 → 443개소(30개소 증가)
- 선정방법 : 볼런티어활동에 열의를 가진 시·구·정·촌 사회복지협의회
- 1개소당 사업비 : 4,156천엔 → 4,190천엔(국고1/3, 현1/3, 시·구·정·촌 1/3)
- 실시기간 : 3년간
- 사업내용 : 볼런티어 정보지 발행, 상담 및 등록, 입문강좌개최, 복지구호 볼런티어 활동촉진사업 등

2. 미국의 청소년자원봉사 정책

가. 자원봉사의 사회적 배경과 발달과정

프로테스탄티즘에 입각한 엄격한 현세주의와 철저한 개인주의 사상을 토대로 하여 이룩된 미국사회는 일탈, 비행, 빈곤등과 같은 여러 사회문제들의 발생 원인을 사회구조나 문화적 차이에서 찾기 보다는 개인적 차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반대로 사회문제의 범주가 지역이나 국가의 차원으로 확대되면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국가나 지역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사회에서의 자원봉사의 특징적 일면은 자원봉사자가 기여하는 만큼의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사회봉사의 경력이 대학입학이나 승진 그리고 취직에 반영되어지고, 이후 자신들의 봉사경력이 자원봉사 은행에 저축되어 훗날 자신이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할 때 보상받을 권리로 부여받게 된다. 이처럼 미국사회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상을 해준다는 사회적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미국사회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시작된 것은 제인 아담스(Jane Adams)의 헐 하우스(Hull House)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헐 하우스는 시카고에 처음 생긴 지역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초기 미국으로 이민온 수많은 이민가족들에게 영어·기술·문화·교육등 미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이민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미국 사회복지기관의 효시이기도 하다. 세계 제1차 대전당시에는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부인들을 모아 “털양말 짜보내기 운동”, “전쟁미망인 돕기 운동”, “가난한 이웃 돕기 프로그램”등으로 확대되어 1926년에는 미국 최초의 보스턴 자원봉사센터를 창립하고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1932년에 전국자원봉사자협회가 결성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전국자원봉사자협회는 1941년 미국 연방정부 민간방위국에 통합되었고, 1943년에는 전국에 4,300여개의 민간방위 자원봉사 사무소에서 수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1945년 전쟁이 끝나자 민간방위국은 해체되고

미국공동모금 및 지역봉사 협의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이 기구안에 시민참여 자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주관하였다. 1951년에는 미국자원봉사협회를 두어 자원봉사국들 사이의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매년 미국 사회복지대회 개최시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자원봉사활동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왔다.

1960년대 초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뉴 프론티어 정책의 일환으로 평화봉사단을 조직하여 제3세계의 발전에 조력하였다. 그후 존슨 대통령은 미국내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대한 사회정책”을 제시하면서 지역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적극 지원하였고, 나아가 빈민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한 미국자원봉사활동단을 결성하였으며 은퇴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실시하였다.

1969년에는 닉슨 대통령이 백악관내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케 한 후 이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1970년에 전국 차원의 민간조직인 전국자원봉사활동센터를 설립, 민간기구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도·조정하였다. 그 후 1971년에는 그동안 3개 부처에서 운영해오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하나의 독립기구인 “활동(ACTION)”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73년 국내자원봉사활동법을 통과시켰다. 1979년에는 민간기구인 전국자원봉사활동센터(NCVA)를 “자원봉사활동원(Volunteer)”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90년에는 전국자원봉사센터로 다시 고치고 1991년에는 이를 촛불재단(Point of Light Foundation)으로 확대·개편하였다. 특히 눈 여겨 볼점은 자원봉사활동이 민간주도지만은 정권이 바뀌어지더라도 각종 법률을 제정하여 민간단체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지지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나. 청소년자원봉사정책

최근의 미국 청소년 생활(가족, 근로, 교육, 보건등)지표들과 청소년 교육 지표에서는 미래의 미국사회에 대해서 불안감을 던져줄 만큼 청소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계기로 지난 '90년 국가의 교육목표를 재설정하여 “미국 2000 : 교육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의 내용은 학교 교실외 주 교육에서의 문제점들을 자각하고 이제는 청소년의 개발이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청소년 자원봉

사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새로운 정책적 대안들이 나오게 되었다.

미국의 청소년자원봉사정책은 한마디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통하여 일탈과 비행을 예방하고자하는 교육적 효과와 그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교육제도상에 있어 교과과정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시키고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제도화하여 미국의 전국 고등학교의 약 40%가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야만 졸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지난 '85년 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14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중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약 52%, 7백만명 정도로 나타난 반면, '91년도 조사에서는 12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들중 약 61%가 1주일에 평균 3.2시간을 자원봉사에 할애하고 있어 1년에 20억 시간 이상을 자원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연방정부의 청소년자원봉사정책

미국 연방정부의 청소년자원봉사활동정책으로는 지난 1989년 부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자원봉사활동 장려계획을 들 수 있다. 이 계획은 향후 4년간 약 1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미국사회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특히 청소년들을 활용하여 미국의 사회문제 해결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 국가 및 지역사회봉사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이 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촛불재단(Points of Light Foundation)이 발족하게 된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집권중에는 1993년에 국가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 지원법(National & Community Service Trust Act of 1993)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안에 의거 각 지역의 여러 자원봉사단체들은 전미자원봉사연합(Corporation for National Service)으로 통합되어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게 되었다.

미국의 자원봉사정책들중 청소년을 자원봉사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법안들은 대부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대부분 국가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 지원법안에 포함되어 통과됨으로서 미국 전역에 여러 형태의 사회활동을 장려하도록 기금을 조성하였는데 1993년의 경우에만 해도 1,000만 달러의 재정보조를 하여 청소년 제 단체들이 각종 규모의 봉사활동을 가능케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2) 청소년자원봉사단체와 활동

오늘날 120개 정도에 이르는 청소년 봉사 및 (자연)보호단체의 시초는 1930년대 발생한 대공황으로 인하여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많은 젊은이들을 위해 선택적인 고용의 기회를 찾아주기 위해 활동하였던 민간(자연)보호 단체(CCC, Civilian Conservation Corps)에서 출발한다. 비록 1942년에 민간 (자연)보호 단체가 일시적으로 해산되었다가 1957년에 다시 학생(자연)보호연합(SCA, 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으로 부활, 계속적인 성장과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청소년 (자연)보호단체와 청소년·성인 (자연)보호단체들은 1981년 연방예산 축소로 인하여 사실상 해체의 길을 걸었으나, 오히려 이 시기에 청소년(자연)보호단체의 가치와 필요성이 입증됨에 따라 전국의 각 주(State)정부가 중심이 되어 이러한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연방정부 지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새로운 주들과 지역단체들의 활동은 계속되었으며, 대다수 초기의 지역 자연보호단체들이 사업의 방향을 인간의 욕구에 대한 서비스계획 증대로 확대시키면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1993년 의회를 통하여 법제화된 전국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 지원법은 수많은 지역사회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기존의 청소년 자원봉사단체에게 연방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1990년의『부제 C』을 수정한 것이다. 이 새 법률은 미국봉사단체 프로그램(AmeriCorps Program)을 통해 참가자들을 위한 교육적 시혜를 사후 서비스로 추가시켰다. 1994년 현재 청소년자원봉사단체 현황을 보면 '알려진' 단체의 수가 총 116개 단체이며, 총 기금 조성은 169,600,000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단체에 종사하는 직원수는 14,299명에 이르고 있다.

1995년의 경우 이들 청소년 자원봉사단체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1천 3백만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한 22,000여명 이상 청소년들이 37개주에서 등록을 하여 연중 내내 120개 청소년 자원봉사 단체를 운영하였다. 이들 22,000여명 의 청소년자원봉사자중 4,373명은 AmeriCorps의 회원들로 되어 있다.

한편, 청소년자원봉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보호와 자원봉사프로그램은 자신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로 16~25세의 청소년들이 유급으로 생산적인 일에 전담하여 종사하고 있다.

청소년자원봉사단체의 대체적인 업무는 프로그램 참여자와 단체 구성원들이 체계적인 행위기준과 모델을 갖춘 유급 성인 지도자와 함께, 8~10명의 단위로 팀이 구성되어 업무에 참여하는 형태를 갖는다. 청소년단체 구성원들은 광범위한 영역의 업무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1930년대에 있었던 민간자연보호단체(Civilian Conservation Corps)의 공원 및 산림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그램도 있다. 청소년자원봉사단체의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의 자원으로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대부분의 단체 구성원들은 그들의 업무에 대하여 최소한의 급료를 지급받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이 필요한데 자원봉사자들의 기본적인 교육·기술을 개선시키고 장래 고용을 준비하기 위해 매주 며칠간을 교육으로 충당하고 있다. 대부분 청소년자원봉사단체는 기초교육과정(GED : General Equivalency Degree)과 직장내 훈련과정, 대학 학점코스 등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예산, 육아, 건강, 복지와 같은 필수적인 생활기술에 초점을 맞추어서 반(학급)을 구성하여 운영되기도 한다. 또한 프로그램중에는 투표와 같은 시민권리로서 명백한 행동들을 구성원들이 참가하도록 장려하기도 한다. 몇몇 단체들은 참가자의 동기유발을 위해 서비스 기간 수료 이후 장학금이나 현금 보너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년자원봉사단체는 37개주에서 120개 이상이 운영되며 끊임없이 확대되고 발전되어가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중 21개 프로그램이 자원봉사의 대상을 주(State)에 두고 있지만, 대다수의 단체들은 각 지역(Community)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운영기간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이 연중 내내 운영되고 있으며, 몇몇 소수단체가 여름동안만 운영한다. 전국적으로는 22,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해마다 청소년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현재 미국의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단체로서 전국자원봉사연합(Corporation for National Service)의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전국자원봉사연합은 연방정부가 3년전에 설립한 연방정부의 독립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이며 이사회는 대학총장, 기업체의 대표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직원수는 250명정도이며 미국내 48개주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으며 전체적으로 45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주로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자신의 연령이나 사회적 배경 등 여러 조건들을 막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문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국자원봉사연합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mericorps(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형태로 봉사+교육의 개념이 있음)와 Seniorcorps(55세 이상 노인들이 지역사회 봉사하는 프로그램), Learn & Service America(유치원에서 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프로그램으로 봉사하기 위한 학습후 활동) 등 3개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진다.

가) 학습 및 봉사활동단(Learn and Service America)

“학습 및 봉사활동단”은 현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내활동과 지역사회활동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과 대학생을 위한 고등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K-12 프로그램을 통해 80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학습 및 봉사활동단”의 프로그램 참가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학교의 교과과정 및 다른 배움의 기회를 자원봉사활동과 통합시키는 동안에 사회에서의 중요한 요구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 이러한 “학습 및 봉사활동단”에서 고등교육 프로그램(Higher Education)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목적을 가진다.

- 첫째, 봉사활동단 내부에서 고등교육 기관이 다른 기관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 둘째, 가르침과 배움의 기회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봉사 학습 프로그램의 증대를 지원하고,
- 셋째, 학생들이 학문적·시민적 학습을 수행하는 동안, 명백한 결과를 가진 지 역사회의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높은 질적 차원의 봉사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상에서 볼 때 봉사학습이란 봉사와 학습의 동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되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봉사활동이라는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과 이웃을 돕는 경험을 배우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봉사학습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생들로 하여금 학과목의 연장으로서 또는 학과목과는 별도로 자원봉

사를 습관화하게 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여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사회봉사에 투입하게 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을 양성하고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봉사학습은 단순한 기술교육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경험의 과정속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실천과 봉사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주된 목표가 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라는 것은 어떠한 보상이나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고 행하여진 활동으로서 사회제반의 여러문제들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봉사를 학습경험에 초점을 맞춘 봉사학습이라고는 하지않는다. 자원봉사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사회의 자원봉사 체계에 있어서 피자원봉사자라든가 혹은 국가와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 등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이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자원봉사활동체계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여러가지 경험들을 얻고 그것을 자신의 삶속에서 투영해보면서 다시 자신의 삶에 반영해 볼 수 있을 것인가?”가, 즉 순환적인P(Preparation)-A(Action)-R(Reflection) 과정이 자원봉사 학습의 전체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자원봉사를 봉사학습이라고 말한다.

자원봉사자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계획된 자원봉사프로그램 혹은 지역사회속에서 개인(자원봉사자)이 구성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속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생활에 반영하고 스스로 다시 준비와 실행과 반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학습의 핵심적 개념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봉사학습을 통하여 많은 이점들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서 몇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 특정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과 합리적 문제해결능력 등 학생들의 지적 발달에 조력한다.
- ▶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기술과 같은 생활 필수적 기본기술의 습득을 도와준다.
- ▶ 직접적 체험을 통한 도덕과 윤리적 가치판단을 자연스럽게 갖추도록 만들어 준다.
- ▶ 예비 시민으로서 사회적 연대감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다.

- ▶ 사회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가능케 해 준다.
- ▶ 사회적 배경이나 출신배경이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다인종 사회인 미국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과 이질적인 다른 집단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을 배움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나) 미국봉사단(AmeriCorps)

“미국봉사단”은 봉사를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단체로서, 모든 세대의 미국인들이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기구이다. 1994년 창설이후 1997년 현재까지 다양한 배경의 25,000여명의 봉사단 회원들이 미국내의 곳곳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봉사단의 가입요건은 미국거주 시민, 미국국적자, 합법적 장기체류 외국인으로서 연령상 17세 이상된 자에 한하고 있다.

미국봉사단(Americorps)의 특징은 먼저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전지역에서 봉사단의 프로그램은 네가지의 공통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사회가 교육·공공안전·인간적 요구 그리고 환경문제의 분야에서 드러나는 제반 사회과제들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며,
- 둘째,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강하게 만드는 것과,
- 셋째, 봉사활동과 시민교육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감을 고무시키며,
- 넷째, 교육을 좀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기회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명에 맞추어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고 하는 미국봉사단의 또다른 특징은 1년~2년의 자원봉사 서비스의 대가로 봉사단원들이 몇가지 특혜를 받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7세이상의 청소년들이 우편배달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전임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하면 \$4,725를 받고 파트타임 자원봉사를 하게되면 \$2,362를 받게된다. 봉사의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 대학, 대학원, 또는 직업훈련원의 학자금을

마련하거나 자금대출을 갚는 등의 특혜를 받는다.

특혜의 종류와 방법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며, 자신들이 선택한 봉사 프로그램에 따라 최소한의 생계보장이나 한정된 의료보험의 혜택, 앞서의 예처럼 교육비 보상 등을 받게된다.

3. 영국의 청소년자원봉사정책

가. 자원봉사의 사회적 배경과 주요 법제

영국은 미국과는 달리 사회적 문제나 공공의 문제해결을 시장(市場)경제의 원리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해결하려는 시민정신과 개인의 이타주의에 호소하며 동시에 국가가 재분배 정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 초기 교회나 부유층의 자선(charity)활동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체제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빈곤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생활환경 개선운동 등이 바로 이러한 자선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19세기 후반에 있어서 자선조직화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와 인보운동(Social Settlement Movement)으로 조직화되어 구빈사업을 보다 철저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인보운동은 1884년 영국의 바넬(Canon Barnett)목사에 의한 토인비홀(Toynbee Hall)에서 부터 시작되었는데, 즉 지역사회의 토인비 홀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육성시키고 나아가서는 주민참여를 확대시키면서 지역사회에 다양한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며 지역공동체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같은 역사적 전통을 토대로 하는 영국은 오늘날 유럽에서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가 되었으며(1991년도 조사에 의하면 25세이상 영국인의 50% 이상이 매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주 1,000만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원봉사가 단순한 사회운동 차원이 아닌 중요한 사회기간 분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자원봉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계량화하면 국민 총 생산의 5%를 차지하여 농

업부문보다 크다고 하는데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영국의 자원봉사기관중 대부분은 전국자원봉사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에 가입하고 있으며 400개 이상의 자원봉사기관이 그 회원단체가 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의 기관이 자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자원봉사와 관련한 법제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입법으로 자선법(Charity Act)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1960년에 처음 제정되어 최초에는 민간 사회사업기관과 단체의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자선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에게 필요한 감독과 모금허가, 감면세 등의 특전을 주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였다. 이후 많은 개정을 거쳐 1991년 11월에는 새로운 자선법을 통해 존 메이어 수상이 자선과 민간자원봉사부문에 관한 연설에서 발표하였는데 “이 법은 자선의 적절한 관리 및 공적 책임성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할 것이다. (중략) 우리의 목표는 자선에 대한 공적 신뢰를 보증함으로써 관료적 행정으로 묶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선을 위한 보다 넓은 수문을 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자선법의 성격을 언급하였다.

또 다른 관련 입법으로는 “지방 당국 사회복지서비스법”(LASSA:The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을 들 수 있는데 LASSA는 1968년의 시봄위원회(Seebohm Committee)가 마련한 시봄보고서의 추천에 따라 1970년에 제정된 것으로 지방단위에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국’을 설치하고 1971년부터 예방을 포함하는 모든 분야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곳을 중심으로 행하여지도록 하였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내의 볼런티어활동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지원과조정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LASSA를 근거로 하여 자원봉사기관을 최대한로 활용하여 사업을 위탁하게 되었고, 정부주도 보다는 민간주도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아울러 민간기관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되었다.

또 1972년에는 중앙 정부의 보건 및 사회보장과(DHSS: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에 민간 자원봉사 서비스국(Voluntary Service Unit)을 두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첫째, 각종 민간분야의 관심을 조정하고, 둘째, 민간기관들에게 정보제공 및 정부의 다른 기구와의 관계형성을 돕고, 셋째, 각종의 자원봉사활동을 육성하는 기관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며, 넷째, 재정 내에서 최후의 정부지원기능 등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자원봉사와 관련되는 법제적 성격의 보고서로는 「변화를 추구하는 팀」(Make a Difference Team)의 자원봉사 전략 보고서를 들 수 있다.

1994년 10월 영국 정부는 자원봉사관련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에 종사하는 대표자 15명으로 구성된 “Make a Difference Team”에 의해서 작성된 영국 자원봉사 전략보고서를 채택하여 다음 세기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개발과 추진을 위한 전략적인 틀을 구축하였다. 이 팀에서 제시한 전략의 주요목표는

- 첫째, 사람들을 자원봉사자가 되도록 가능하게 만들고 또 자원봉사자로 계속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것
- 둘째,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을 극대화 시켜 주는 것
- 셋째, 자원봉사활동의 조직체와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하부구조를 향상시키는 것
- 넷째,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와 효과성,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이다.

상기의 보고서에서 Make a Difference Team이 내린 자원봉사의 정의를 보면은 “자원봉사는란 전체 사회나 지역사회, 환경 또는 개인들(가까운 가족이 아닌)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한 시간과 에너지의 헌신이며, 이는 아무런 금전적 보상없이 선택에 의하여 자유로이 행해지는 활동이다.”이라고 한다.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는데 첫째, 모든 시민의 권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거나 또는 지역사회활동이 민주주의 생활양식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가치있다고 여기고 또 명백하게 인식되어진다는 것, 둘째, 사회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으로 여기서는 시민들은 활동적인 참가자가 되기를 원하며 책임을 공유하고 타인을 돕고자 하며 변화를 추구하고 그들 자신이 지역사회의 한 부분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나. 청소년자원봉사정책

영국에서 자원봉사와 관련한 청소년 연령은 대체로 16세부터 25세까지로 보고 있다. 이들 청소년 인구는 영국 전체의 1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900만명에 달한다. 오늘날 영국의 많은 청소년들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통계에 의하면 16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중 21%가 실업상태에 있고 교회에 참석하는 15세부터 19세 까지의 연령층이 점점 줄어 들고 있으며, 정당이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는 숫자도 매우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언론은 청소년들이 도덕성과 책임감, 자기훈련이 부족한 결과라고 보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중의 하나가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변화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Make a Difference) 이들의 강렬한 욕구를 자원봉사활동으로 분출시키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위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원봉사관련 통계에서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하고 있으며, 그들의 에너지와 시간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들 청소년들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을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자원봉사를 하나의 의무로서 그리고 청소년 실업과 범죄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강조하고 있으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정부의 청소년자원봉사정책

영국 정부의 청소년자원봉사정책의 첫 번째 초점은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격려하며 청소년자원봉사의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계획을 가지고 있다.

- 기존의 자원봉사국과 지방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
- 자신들에게 봉사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돕는 청소년자원봉사 촉진자들에게 보조금 지원
- 모든 지역에서 지방 자원봉사센터에 의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자원봉사자 개발기관을 설치해나가는 데 보조금을 지원
-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자원봉사 원조라인(Helpline)유지에 필요한 기금조성
- 자원봉사에 청소년 참가를 위한 지원을 확대시키기 위해 복권판매 대리

점 운영

- 지방 당국과 협력하고 선도사업에 착수하는 일을 지원
- 영국 정부의 전역에서 훌륭한 자원봉사 실천을 장려
- 자원봉사의 장애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 청소년 성취 포상제도의 실시
- 청소년 자원봉사자 숫적 증가를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두 번째의 초점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자원봉사활동 유형과 수준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기금 담당자로서 또는 정책 입안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정부나 관련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자원봉사자에 의해 수행되는 부분에 보조금 신청
- 직장 상사에 의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격려하는 일 등
- 자원봉사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기금지원기관에 요청
- 청소년 본인이 관련된 조직체에서 자원봉사하는 청소년에 대한 격려요청
- 공무원, 회원들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이나 활동분야의 전문가를 찾는 일 등이다.

2) 노동당의 새로운 청소년자원봉사정책

새로이 집권한 노동당은 청소년의 실업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실업문제를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청소년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권 노동당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 첫째, 1년 동안 직업훈련을 시키는 방안
- 둘째, 6개월 동안 민간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안
- 셋째, 환경정화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
- 넷째, 자원봉사기관에서 봉사하게 하는 방안이다.

상기 4가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노동부가 통합하게 되어 교육노동부가 위의 업무를 주관하고 셋째와 넷째의 업무에 대해서는 내부부의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과(Voluntary & Community Unit : VCU)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45백만 파운드에 달하며 이의 재원확보를 위해 세제를 개혁할 방침에 있다.

특히 노동당의 자원봉사부문에 대한 정책으로서는 '정부내의 자원봉사부문에 대한 상호조정'으로 각 부처의 내각을 중심으로 한 대책위원회, 관련 부서간의 교섭, 모범 사례에 대한 촉진, 연간 의회현안 등이 있으며, 둘째로 '자원봉사부문내에서의 관계성 증진'으로 1996년 디킨(Deakin)교수에 의해 제출된 보고서 대한 사후조치, 자원봉사부문 내에서의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가). 내무부(Home office)의 자원봉사정책

내무부는 영국의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서 행정조직상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과(Voluntary & Community Unit : VCU)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VCU는 공식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자조 및 지역사회개발 등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의 모든 측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략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 기관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 (가) 제한된 자원과 조직을 갖는 지역사회 기반의 그룹들을 포함하여 여타의 자원봉사조직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을 지지하고 발전시키는 일
- (나) 자원봉사조직들에 의한 새로운 도입활동이나 모범사례들에 대해 격려
- (다) 자원봉사조직들에 대한 정부 정책을 조정하고 업무과정에서 자원봉사조직의 기여나 관심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 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
- (라) 자원봉사조직의 지지와 기금을 지원하는 사적부문이나 보조 지원자, 개인들을 격려하는 일
- (마) 자선위원회와 공동으로 자선법이나 행정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일

(2) 자원봉사 활동의 모든 측면을 지지하고 촉진시키는 일

- (가) 공공, 자발적인 사적부문 등 모든 부문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는 일
- (나) 자원봉사자의 모집, 훈련, 관리하는 일을 장려하고 전국기관과 하부기관을 지원하는 일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 (Make a difference)를 1997년 5월에 계획하여 새로이 집권한 노동당도 이 계획을 수정, 보

완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지역사회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전체 41개 센터에 3년간 300만 파운드, 1년 동안 1개소에 3만5천 파운드를 지원하는 하는 일이며, 둘째, 각 기관에서 수행한 사업을 보고 받아 정책화하고, 셋째, 정부와 자원봉사부문간의 파트너쉽을 강조하는 일이다.

(3) 2000년대까지 10만명의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가) 시민이 되기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적어도 18세 - 25세까지의 청소년이 3월 - 6월간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이에 대한 예산은 연간 15백만파운드인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민간지원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주관 역시 교육노동부임

※ 중·고등학교의 봉사활동은 대학의 학과에 따라 반영되기도 함(예, 병원에서의 봉사활동은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반영됨)

4. 프랑스의 청소년자원봉사정책

가. 자원봉사의 특징

프랑스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분야보다는 환경·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전후 프랑스의 정치와 체제가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수립되고 진행되었으며, 시장경제체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제반 사회문제를 사회적 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나 국가가 문제해결의 중심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사회적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빈곤, 의료 및 보건, 노인, 등등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여러 문제들은 정부가 전담해왔다. 이런 사회·정치적 배경 하에서 프랑스의 자원봉사제도는 여타의 나라와는 다르게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자원봉사보다는 오히려 문화·예술·여가 등의 부문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배경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자원봉사활동의 첫 번째 특징은 우선 국가의 개입이 없고 자원봉사단체들의 활동이 자유롭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활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활동을 보장해주는 역할과 단체기금 사용에 있어서의 감독만 할 뿐 자원봉사단체 회원의 활동영역부문에 있어서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 다만 자원봉사단체들이 운영비나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감세혜택을 주는 역할에만 한정되어 있다.

두 번째의 특징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금이 정부의 보조보다는 국민들의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특징은 정부 주도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타 다른 국가의 자원봉사정책과는 차이가 있는 점인데, 1993년 통계에 따르면 순수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금액은 모두 95억 프랑(환율로 환산한다면 약 1조3천여억원)이며, 한가구당 평균 기부금이 연간 1,076프랑(약 15만원)이나 된다는 점이다. 세 번째의 특징은 국내 활동과는 별도로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연간 25억 프랑의 기부금이 제3세계 난민이나 이주민을 위해 모금되고 '적십자'·'세계 의사회' (의료)·'마음의 식당' (부랑인 급식) 등의 민간단체들이 세계 각지에서 불우한 처지의 민족과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자원봉사활동의 특징은 프랑스 사회의 정치체제상 이념이나 특성뿐만 아니라, 프랑스란 국가 내부에 잠재해 있는 민족성, 즉 프랑스 대혁명 이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었던 경험과 반성들을 바탕으로 한 인도주의적·자유주의적·민주주의적 가치관들이 프랑스 자원봉사활동과 정책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나. 청소년자원봉사정책

프랑스에서는 연령상으로 13세-20세까지의 시기를 청소년기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의 청소년정책 수립 기본방향은 청소년들이 미래에 자신이 사회와 직업에 적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응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사회진출과 직업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활동의 대상에 있어서도 여가생활과 문화생활 등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정책 수립의 기본배경은 다름 아닌 교육제도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프랑스의 교육제도의 특징적인 성격은 운영방식에 있어서 정부 책임하에 중앙집중식의 의무교육체제라는 점과 교육이수과정상 전기중등교육(중학교과정)이후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여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도록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정책이 독립적이기보다는 가족법, 대중위생법, 사회복지법 등 각종 사회법 체계 속에서 상호 연관되어 수립되고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속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력해 주고 있다.

이런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속에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최근에 들어 양적인 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데 '93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AR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사이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자수가 배로증가하면서 전체학생의 약 30%정도가 각종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프랑스 청소년자원봉사정책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의 중심이 되며 또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작업장이라는 곳을 들 수 있다. 작업장은 우선 장소의 개념으로서 국제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자원봉사 작업장」(chantier : 샹티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곳이다. 이 무보수 작업장은 1920년경에 처음 생겼는데 그 이후로도 많은 작업장들이 설치되었다.

작업장 봉사활동은 공공재산(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한 나라의 역사이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역사의 유적복구를 통해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동시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를 위해 봉사하게 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게 한다. 또한 교육의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사전 연수기회의 부여, 책임감과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공동생활을 통해 타인과의 차이, 문화의 차이, 환경의 차이를 알게 하며 단체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의 청소년자원봉사정책은 전체 사회정책과 교육정책에서 분리되기 보다는 함께 연관되어 볼런티어정신의 순수성인 주체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프랑스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임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국제적 유대감과민주시민으로서의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특별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촉진에 관한 제도적 장치나 법령을 마련하기보다는 프랑스 교육정책 속에서 또는 청소년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수련활동이나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기회속에서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삶으로 생활이자, 가치로써 추진되기 때문인 것이다.

1) 자원봉사 연합협회 : 코트라보(COTRAVAUX)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20년 유럽과 프랑스에서는 화해와 국제교류의 정신에 따라 샹띠에(chantier : 자원봉사 작업장)들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작업장에서 자원봉사활동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지속되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여러 형태의 협회들이 창설되어 작업장 조직을 통해 실제작업과 공익을 중심으로 여러 국적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나라를 재건하는데 이바지하였다. 1959년에는 국가와 작업장 조직들의 연합체가 모여 중앙차원의 자원봉사단체인 코트라보를 결성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자원봉사단체들이 작업장을 건설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중교육 운동에 속하는 교육차원에서였다. 그 주요한 이상은 상호견습훈련과 비평정신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경험(지식)을 단체에 적응시켜 보는 훈련과 개인이 저마다 발전하는 상황과 더불어 개인의 고유한 책임의식을 분석할 줄 아는 힘을 배양시켜 주기 위한 구상이었다.

오늘날 자원봉사단체들은 이러한 작업장을 통하여 세계 여러나라의 청소년들이 서로간의 의견이나 생각 등을 상호교환할 수 있도록 돕는 일, 활발한 국제 연대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실천하도록 실행하고 있다.

코트라보는 정부 부처의 문화부, 청소년체육부, 환경부, 사회부 등과 관련을 가지며 각 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회원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코트라보의 직원은 3명으로서 주로 가입단체와의 연계, 정부와의 연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의 코트라보는 12개 작업장 협회들을 통합한 것으로 몇몇 협회는 자체로 지역협회를 다시 모으고 있고 또 어떤 협회들은 국제조직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이 협회들은 사회생활 교육과 일반 교육의 도구가 되는 실제 활동수단으로써 작업장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단체는 프랑스의 유적 및 고적을 보존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환경보전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며 1년에 약 4,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가하며 이중 1/3은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코트라보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사명이지만 국제차원은 코트라보가 생길 때부터 있으며 자원봉사자 교류와 국제작업장들은 코트라보를 창설한 협회들의 기초가 되고 있다.

※실제로『를라씨옹 앵페르나씨오날』 단체는 1년에 여러 차례의 회합을 가지고 서로간의 국제 현실을 다루며 정보를 교환하고 임무를 제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관심사에 부응하는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협회원과 평가,비자 획득 따위도 제안한다. 이 단체는 특별히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전(前) 유고슬라비아와(150명) 1996년 중동지역에 자원봉사자를 준비하여 보내기도 하였다.

※ 자원봉사자 교환과 교류에 대해 살펴보면, 1994년에는 프랑스에서 조직된 578개의 작업장 중에서 547개 작업장이 국제자원봉사자를 받아들였다.

◆ 프랑스에서 자원봉사활동 청소년 내·외국인 비율

▶ 외 국 인 : 4,089명 : 47%

▶ 프랑스인 : 4,664명 : 53%

(10개 협회의 1994년 자료)

1995년에 협회들은 유럽연합, 유럽의(북부, 동부, 중부) 다른 나라들, 마그레브와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와 극동, 남부아메리카의 대략 60개 상대국과 교환을 실행하였다.

협회들은 매년 이러한 조직망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갔으며 외국 협회원들과 교류를 증대시키고 있다. 동시에 협회들은 될 수 있는 한 현행 교환 프로그램에서 상호성과 균형을 추구한다. 동시에 협회는 프랑스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이 외국작업장에 참여하기를 권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13세~18세까지의 연령이 참가하고 있다.

제Ⅳ장 청소년자원봉사정책의 분석과 정책모형 개발

1. 정책분석의 틀

정책분석은 정책이 결정되기 이전단계의 정책과정의 하나로서 정책결정을 위하여 수행되는 지적(知的)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직관과 판단을 포함하며 정책을 시험하기 위해 그것을 기초적인 구성부분으로 분해하는 작업과 아울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거나 통합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은 어떠한 쟁점이나 문제에 대한 연구로 부터 완결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석절차는 서술(description)과 예측(prediction), 평가(evaluation) 및 처방(prescription)의 절차로 이루어 진다. 여기서 서술과 예측은 지시적 질문 - 즉, 정책이 존재하고 있는가? 또 그것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미래에 있어 기대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에 관심을 가지며, 평가는 평가적 질문, 예컨대, 그 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며,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알아 내고자 한다. 끝으로 처방은 주창적 질문, 즉, 가치와 사실을 모두 포함하는 행동에 관한 질문인 그 정책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며, 실현가능한가? 등의 답과 관련이 있다(이대희 역, 1984, p.62).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전문가들에 의한 조사결과의 정책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현존하는 청소년자원봉사정책의 내용미흡과 정책산출물의 부재 등을 감안, 정책관련 정보형태(정책문제-정책대안-정책행위-정책성과)중에서 정책문제와 정책대안, 정책행위와 관련되는 부분만 다루고, 분석의 방법(문제구성, 예측, 제안, 탐지, 평가)에 있어서는 문제구성과 예측, 제안 등으로 분석의 틀을 한정하여 정책모형을 개발 제시하고자 한다.

2. 정책모형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 분석

가.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자원봉사정책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델

파이(Delphi) 기법을 택하였다. 원래 델파이 조사방법은 1948년 랜(Rand) 연구소에서 개발되어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미래예측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 일반적인 델파이와 다른 몇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정책관련자의 의견중시 - 정책관련자들을 모아서 의견을 얻게 하는데, 정책문제의 성격이나 원인, 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선택적 익명성 - 정책대안이나 정책대안의 결과를 제시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모르게 한다. 그러나 대강 의견들이 종합되어 몇가지 대립되는 정책대안이나 결과가 표면화한 이후에는 공개적인 토 론을 하도록 한다. 셋째, 유도된 의견대립 - 서로 다른 의견들을 공개적으로 도출하도록 하고 대립된 견해를 최대한 활용하여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창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도 예측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델파이 특징을 사용함으로써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을 알아보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근본적으로 목표의 재설정이나 정책문제설정을 재고하여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정책대안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나 정책집행체계 등을 설정하는데 있어 정책대안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재조정을 하는 작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관련자들의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표출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방법은 정해진 특정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이용될 수 있으며, 특히 자료가 부족하고 이론적인 근거가 미약한 경우 전문가들의 직관적 통찰을 요구할 때 자주 쓰인다.

따라서 본 델파이 조사의 목적은 현행 청소년자원봉사제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문제점과 개선책을 탐색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인 다양한 정책대안이나 수단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정책모형을 제시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앞의 <표 I -1>에서 보았듯이 자원봉사와 관련이 있는 대학의 교수, 공무원, 자원봉사단체의 간부, 자원봉사 담당 중·고등학교 교사, 청소년단체, 사회복지관, 연구기관의 간부 등 총 50명으로 하여 1차 조사표를 발송하였으나, 이중 45명(명단은 부록1 참조)이 응답을 보내와 결과분석되었다. 2차의 전문가 공동토론은 1차조사표의 작성내용을 검토하여 비교적 상반되는 의견 제시자들로 구성하되 1차 조사의 응답자의 비율을 고려, 최

중 8명(명단은 부록1 참조)을 선정하였다.

조사표 작성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진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조사 항목에 따라 응답내용을 다양하게 예시함으로써 직관적 판단을 가능한 짧게 유도하였다. 조사기간은 1차의 경우, 1997년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2차 전문가 토론은 1997년 10월 31일에 이루어 졌다.

조사의 분석은 조사항목에 따라 응답항목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응답항목에 가중점수를 주어 이를 평균치로 산출, 최종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으며, 전문가 집단토론에서 최종합의된 내용을 항목별 분석시 이를 기술하였다.

나. 조사결과의 분석

1)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

정책을 입안하거나 입안되어 추진된 정책의 결과를 분석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의 이유는 정책의 목표가 명확해야만 그 정책의 내용과 결과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청소년자원봉사 정책목표는 대별하여 교육부의 입장과 문화체육부의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의 정책 문제설정(Agenda Setting) 배경은 우리사회의 급격한 구조적 변화로 인한 청소년의 가치혼란과 유해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의 증가, 입시위주의 암기교육으로 인한 인성의 황폐화 등의 문제 해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학생청소년들의 전인교육 구현을 위해서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봉사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한편 문화체육부의 입장은 급속한 산업화 정보화 과정에서 파생된 가치관의 혼란, 윤리와 도덕성의 실추, 공동체 의식의 약화 등으로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그동안의 청소년육성 정책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 인간성 상실 등 사회병리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개발과 공동체이식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를 위해 청소년이 자원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교육정책과 육성정책의 내용에 봉사활동을 새로이 선정 포함시키고자 하는 일치된 정책배경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소년의 전인교육 구현과 건전육성을 실현시키기위해 봉사활동을 하나의 정

책수단으로 받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정책목표의 달성 가능성 여부

〈표Ⅳ-1〉 학생자원봉사제도를 통한 정책목표달성 가능성 정도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45명)	비율(%)
매우 가능할 것이다	14	31.0
대체로 가능할 것이다	19	42.0
희박하다	12	27.0
불가능하다	0	0.0

봉사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함양이나 사회성 발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배양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매우 가능하다’가 14명(31%)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가능할 것이다’라는 항목에 대하여는 19명(42%)이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총 응답자 45명중 33명(73%)이 현행 봉사활동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반면에 ‘희박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27%에 해당하는 12명이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정책수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함양이나 사회성 발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배양이라고 하는 정책목표는 달성될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경우 하위정책으로서 청소년자원봉사정책이 어떠한 정책수단을 갖느냐가 상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정책목표 달성이 어떠한 이유에서 ‘희박하다’라고 응답하였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나중에 정책대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목표달성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Ⅳ-2〉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장애요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순서대로 기술하게 하였는데 총8가지 형태의 응답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총 응답자 12명이 응답한 내용을 순서대로 점수화(3점, 2점, 1점)하여 나타난 가중치와 백분비를 살펴보았다. 우선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상위 3위까지를 보면 먼저 21점의 가중치를 보인 ‘학생들에 대한 봉사활동관련 대한 교육문제와 수요기관의 부족, 전담 교사의 부재’가 12명중 4명이 기술하여 28%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현행입시제도하에서의 봉사활동의 비현실성’(가중치 20, 인원비 19.5%)을 지적하였으며,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형식적’, ‘행·재정지원이 미흡’을 지적한 경우가 각각 가중치 8점과 인원수 비율 13.9%를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 ‘교사나 학부모의 인식과 참여 부족’이 가중치가 6점으로 인원수 비율에 있어서는 위의 두 번째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앞의 응답항목에 비해 뒤떨어지나 인원수는

〈표Ⅳ-2〉 학생자원봉사제도를 통한 정책목표달성의 장애요인

※ ()가중치, %는 인원수 비율

응답내용	응답점수 (가중치)	응답자 비율(%)
학생들에 대한 교육부재, 수요기관·학교의 전담지도자의 부재	21	28
현행 입시제도에에서의 봉사교육의 비현실성	20	19.5
권장사항이므로 형식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짐	8	8.3
행·재정지원체계의 미흡	8	13.9
교사, 학부모의 참여부족	6	13.9
상급학교 진학시 필요한 질적평가방법의 전무	4	5.5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미흡)	4	5.5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부족	1	2.7
개인주의 성향	1	2.7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응답항목을 통해서 현행 학생자원봉사활동이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담교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과 권장사항의 봉사활동(중학생의 경우 의무사항임)을 가능한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 장치나 수단이 중점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응답내용은 〈표Ⅳ-3〉과 같다.

이 조사항목에서는 응답항목을 3가지까지 기술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는데 위의 〈표Ⅳ-2〉에서 응답한 12명 전체가 3가지까지 모두 기술하여 결과적으로 응답 수는 복수응답을 포함하여 36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내용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내용으로는 ‘자원봉사 교과목 설치와 전담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총 응답인원의 12명(33.3%)이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 현행의 교육제도를 ‘인성위주의 교육제도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하고 8명(22.2%)이 기술하였으며, 세 번째가 ‘봉사활동 기록 및 평가양식 개

선', 이외에 전담교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교육관계자나 학교장의 인식변화'와 '수요기관이나 정부 관련공무원,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전담자의 양성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표Ⅳ-2>에서 지적한 내용과 상관시켜보면, <표Ⅳ-2>에서 정책목표달성의 장애요인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 수요기관이나 학교의 전담교사의 부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표Ⅳ-3>에서는 '학교나 수요기관에 전담지도자(교사)가 배치' 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면 위에서 언급한 정책목표달성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봉사활동의 정책목표달성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전담지도자의 배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인성위주의 교육제도로 개선'과 '봉사활동 기록 및 평가양식의 개선'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표Ⅳ-2>의 정책목표달성의 장애요인으로 기술되지 않은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직접적, 우선적 장애요인으로 기술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고려되어질 때 정책목표의 달성은 그 만큼 가능하다고 하겠다.

<표Ⅳ-3> 장애요인을 극복·제거하기 위하여 보완할 제도적 장치나 수단

응답내용	응답자점수 (가중치)	비율 (%)
자원봉사 교과목 설치와 전담교사 배치	12	33.3
인성위주의 교육제도로 개선	8	22.2
봉사활동 기록 및 평가양식의 개선	3	8.3
교육관계자나 학교장의 인식변화(교육실시, 전담교사제 등)	2	5.5
봉사관련 기관, 정부, 기업인 대상 전담자 양성기회 제공	2	5.5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역할강화	1	2.8
당국의 의지 및 철저한 계획과 지침개발	1	2.8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대 국민적 홍보 및 교육	1	2.8
교사의 자원봉사담당시간을 교육시수로 인정	1	2.8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율적인 실천기회 제공	1	2.8
학교에서의 교과목 축소와 수업량 감축	1	2.8
일괄된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의무화하여야 함	1	2.8
인성교육 전담부서의 확충	1	2.8
교육부와 문체부 합동의 정책개발 및 교육훈련기구 설립	1	2.8

2) 학생봉사활동제도

일반적으로 제도(institution)라는 용어는 문화의 각 기능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직화되어 특성을 갖는 영역들을 형성함으로써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하나의 사회구조(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사회적인 힘)라고 일컬어 진다(현승일, 1989, p12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생봉사활동제도는 ‘체험학습장(場)으로서의 봉사활동터전’ 이라든지 ‘청소년 인성개발과 지역사회활동’ 등의 문화적 기능이 봉사활동제도로 조직화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도가 공유하는일반적 성격을 보면, 먼저 ‘포괄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제도가 비록 여러 종류로 분화되어 독자적인 영역을 보유한다고 하지만, 각 제도는 다른 제도들의 성격도 포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예컨대, 가족제도는 가족제도만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병존하는 다른 제도들이 갖는 성격들도 얼마간은 포괄하고 있음). 둘째로 갖는 성격은 ‘침투성’이다. 한 제도의 성격은 병존하는 다른 제도들에게도 침투한다는 뜻인데, 한 제도의 성격이 변하게 되면, 침투의 효과에 의해 다른 제도들의 성격도 변화하게 된다고 본다. 끝으로 지속성을 들 수 있는데, 하나의 제도는 그 성격이 쉽게 파괴되거나 변화하지 않으며, 제도의 성격이 변화할 때에도 그 변화는 완만히 이루어 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지속성으로 인해 그 제도가 갖는 성격은 구성원들의 인격 가운데 내면화되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제도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보통이며, 외부적인 강제나 충격에 의해 쉽사리 소멸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

제도의 이러한 성격으로 봉사활동이 갖는 구성내용 - 봉사활동 보험(제도), 전담지도자의 양성(제도), 봉사활동터전의 유형, 봉사활동의 시간,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평가 및 인정(제도), 포상(제도) 등 - 이나 체제(system) - 기록관리(체계), 봉사활동의 실시 및 인정 등 - 는 실로 다양하게 나타 낼 수 있지만 현행의 학생봉사활동과 관련되는 제도로는 ‘봉사활동 시수에 따른 점수화’, ‘봉사활동의 내신반영’, ‘활동의 추진방법(예컨대, 학교계획 또는 개인계획 등)’ 등에 불과하여 봉사활동관련 제도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현행의 제도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가) 현행 학생봉사활동의 연간 봉사활동시간수가 시·도 교육청의 재량에

말기고 있어.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정하여 최소한의 시수는 모든 시·도 교육청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그 이상은 시·도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에 대한 찬·반의견

〈표Ⅳ-4〉는 상기 의견에 대해서 찬성의견으로 총44명중 25명인 57%가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찬성이유로는 '자율성은 신장하되 최소한의 기초이수시간을 제시·적용'이 18명(72%)으로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

〈표Ⅳ-4〉 봉사활동 시수의 동일적용 찬성이유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25명)	비율 (%)
자율성은 신장하되 최소한의 기초이수시간은 일률적으로 적용	18	72
활동지침이 있어야 하며 지역성을 참조하여야 함	4	16
자원봉사활동을 정규교과과정에 포함시켜야 함	1	4
시·도간 전출입시 성적반영 문제점 발생 방지	1	4
기 타	1	4

으며, 두 번째는 '최소한의 활동지침은 있어야 하나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함'으로 4명이 제시하여 16%를 나타냈고, 이외에 '봉사활동을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도간 전출입시 성적반영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등을 제시하였다.

이와는 달리 봉사활동 최소 이수시간에 대한 교육부의 일률적인 지침적용에 반대하는 의견은 〈표Ⅳ-5〉와 같다. 전체 응답자 44명중 19명이 반대하여 4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로는 '봉사시간은 시·도 교육청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현행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으로 응답자 19명중 10명이 제시하여 52.6%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봉사시간을 '지역특성에 맞게 시·도 교육청에서 정하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을 차별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4명이 의견제시하여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는 일률적용이 곤란'하다는 의견과, 최소 봉사활동시수를 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졸업필수조건으로 일정시간 봉사활동을 요구'하여

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는 봉사활동시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앙 정부 개입보다는 지방화와 교육자치를 구현하고자하는 하는 시·도 교육청의 입장을 존중하는 입장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에 따라 봉사활동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Ⅳ-5〉 봉사활동시수의 동일적용 반대이유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19명)	비율 (%)
봉사시간은 시·도 교육청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52.6
지역특성에 맞게 각 교육청에서 정하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차별화하여 적용	4	21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교육,시설,프로그램 등)이 갖추어질때까지 일률적용은 곤란	2	10.5
학교에 일임하는 방안이 성공적일 가능성이 크다	1	5.3
졸업필수조건으로 일정시간 봉사활동 요구	1	5.3
기타	1	5.3

나) 중학생 봉사활동의 고입반영비율이 시·도 교육청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반영비율의 통일 적용에 대한 찬반의견

현행 봉사활동의 고입반영비율은 시·도 교육청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데, 〈표Ⅳ-6〉은 시·도의 모든 학교가 반영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찬성의견을 보여 주고 있다. 총 응답자 44명중 20명이 동일적용에 찬성을 하여 4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의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이 '시·도간 전출입을 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을 배제하고 이의제기를 줄일 수 있다'가 8명(40%)이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영비율이 통일되어야 한다'가 6명(30%)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반영비율이 통일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가 3명(15%), '초기단계에서는 명백한 기준제시로 일률적 적용'이 2명(10%) 등으로 나타났다.

〈표Ⅳ-6〉 봉사활동 고입반영비율의 일률 적용 찬성이유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20명)	비율 (%)
시·도간 이동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배제, 이의제기를 줄일 수 있음	8	40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영비율이 통일되어야 함	6	30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반영비율은 통일되고 일률적 적용	3	15
초기단계에서는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여 일률적 적용이 효과적	2	10
최소한의 목표를 정하여 보다 계획적·효과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음	1	5

반면에 고입반영비율의 일률적용에 대한 반대의견은 총 응답자 44명중 24명이 의견제시하여 55%의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찬성보다는 반대의 견자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에 대한 반대이유로는 〈표Ⅳ-7〉에서 볼 수 있듯이, '시·도별, 학교별 입시제도가 상이하므로 동일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11명(45.8%)으로 가장 많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9명(37.5%), '점수화하여 입시에 반영하는 자체를 반대' 하는 입장이 2명(8.3%)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표Ⅳ-7〉 봉사활동 고입반영비율의 일률 적용 반대이유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24명)	비율 (%)
시·도별 학교별 입시제도가 상이하므로 동일적용이 어려움	11	45.8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율적 결정	9	37.5
점수화하여 입시반영하는 자체를 반대	2	8.3
최소한의 반영비율만 제시하고 그 이상은 자율에 맡김	1	4.2
고입선발기준을 미리 알려주고 학생선발권은 상급학교에 위임	1	4.2

이상에서 보면, '봉사활동의 고입반영비율 통일적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찬성이 45%, 반대가 55%로 나타나고 있어, 반대의 입장이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찬성입장의 가장 주된 의견내용과 반대입장의 주된 의견을 상반시켜 보면, 찬성과 반대의 입장 모두

가 '시·도간의 입시제도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98학년도 부터는 고입선발고사가 폐지되는 반면에 중학교의 내신성적에 의해서만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신성적 총점 300점 만점에 봉사활동 반영점수는 24점으로서 반영비율은 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발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총점 300점은 동일하나 선발고사 성적이 200점, 내신성적이 100점 만점인데, 내신중 봉사활동 반영점수는 10점으로 내신성적에서의 비율은 10%로 높은 편이지만, 총점대비 반영비율은 3.3%에 불과해 서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도간 봉사활동 반영비율의 불균형 현상이 조정된다면 반영비율의 동일적용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 시·도의 지역 특수성이라는 문제등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특수성의 실체가 무엇인지, 시·도 입시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다) 봉사활동 자체를 점수화하고, 이를 상급학교 진학성적에 반영하는 제도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권장사항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각각의 이유

〈표Ⅳ-8〉 봉사활동을 점수화하여 진학성적에 반영하여야 하는 이유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27명)	비율 (%)
제도화하기 위한 초기단계에서는 강제성이 필요함	10	37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등급화, 점수화가 반드시 필요함	10	37
봉사활동은 학습과 실천이 핵심이므로 확고한 교육정책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4	14.9
많은 점수를 반영할수록 봉사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나아가 생활화·체질화 할 수 있음	1	3.7
봉사정신을 키우고 직업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1	3.7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함	1	3.7

'봉사활동을 점수화하여 상급학교 진학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총

응답자 45명중 27명이 응답하였는데, 60%가 현행대로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내용을 살펴 보면 <표Ⅳ-8>에서처럼 반영하여야 하는 주요한 이유로서 '제도화하기 위한 초기단계에서는 강제성이 필요하기 때문'과 '제도정착을 위해서 등급화, 점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를 각각 10명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위의 2가지 의견은 모두 '봉사활동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가지 응답으로 처리하는 경우 '제도정착을 위해서 상급학교 진학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총27명중 20명이 응답하게 되어 74%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이 '봉사활동이 봉사학습이며 실천활동이기 때문에'가 4명으로 14.9%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봉사활동을 점수화함으로써 생활화, 체질화할 수 있음'과 '봉사정신을 키울 수 있고, 직업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이 각각 1명씩으로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학생봉사활동의 점수화와 상급학교 진학시 성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봉사활동을 제도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점수화하는데 반대하는, 즉 권장사항이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보다 확실해진다.

<표Ⅳ-9>는 권장사항이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주는 있는데, 앞서 지적하였듯이 가장 주된 이유가 '점수화하는 의무반영은 봉사활동의 근본취지에 어긋남'이 총 응답자 18명중 10명으로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점수

<표Ⅳ-9> 권장사항이어야 하는 이유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18명)	비율 (%)
점수화한 의무반영은 봉사활동 근본정신에 어긋남	10	55.5
점수화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부담이되므로 졸업필수 과목으로 함	3	16.6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미비함	2	11.1
자칫하면 더욱 과열한 입시경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	5.6
상급학교의 자율성을 존중	1	5.6
상급학교 진학성적과 연관시키기 보다는 사회진출시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	1	5.6

화하는 것 보다는 졸업필수 과목으로 함' 이 3명으로 16.6%를, 기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함', '점수화보다는 사회진출시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조사문항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반영되어야 한다'는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지만(전체의 74%), 봉사활동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때, 제도화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점수화하고 상급학교 진학시 성적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 라) 현행 학생봉사활동은 교급별(중학교, 고등학교)로 매학년 봉사활동시수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3학년의 고입수험준비나 고3학년의 대입준비로 인한 봉사활동의 형식화 우려, 봉사활동 학생수에 비해 수요처의 부족, 교사들의 봉사활동지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봉사활동 대상학년과 시간의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제시

먼저 본 연구진은 대상학년조정에 대해서 크게 3가지 형태로 응답항목을 제시하였다. 즉, '현행대로 학교 교급별 모든 학년에게 봉사활동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제1안과 두 번째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고등학교에서는 봉사활동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제2안을, 세 번째로 '중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1,2학년의 경우에만 실시하고 교급별 3학년때에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3안의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다.

〈표Ⅳ-10〉에서 보면, '현행대로 학교교급별 모든 학년이 봉사활동을 동일하게 적용' 하여야 한다는 제1안에 대해서 총 45명의 응답자 중 20명이 찬성하여 44.5%의 비율을 보였고, 반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실시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폐지' 하는 제2안의 의견에는 찬성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며,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에서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교급별 3학년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제3안에 대해서는 10명이 찬성하여 22.2%를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 15명의 전문가가 상기 의견외의 기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중·고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되 시간수를 교급별 1,2학년과 3학년의 봉사활동 시간수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5명(11.1%)으로서 이는 제3안에 대한 절충안이라고 볼수 있다.

또다른 기타의견으로는 대상학년을 제1안의 중·고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모든 교급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5명

〈표Ⅳ-10〉 봉사활동 적용 대상학년 조정(안)에 대한 의견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45명)	비율 (%)
현행대로 학교교급별 모든학년에 봉사활동시간을 동일하게 적용		20	44.5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폐지		0	0.0
중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1,2학년에만 실시하고 학교교급별 3학년은 실시하지 않음		10	22.2
기타	중·고 모든학년에게 적용하되 시간수를 1,2학년과 3학년을 차등용	5	11.1
	초·중·고 모든학생에게 봉사학습을 적용	5	11.1
	점수·시간에 상관없이 스스로 참여하게 하여 기록부에 작성, 반영여부는 상급학교에서 결정	2	4.5
	중·고 각 3년동안 봉사봉사활동을 실시하되 학년별 이수시간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1	2.2
	대상학년의 제한보다는 졸업필수 또는 선택으로 하여 학생의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이수토록 함	1	2.2
	고등학교부터 실시하고 시간을 부여하되 졸업필수로 지정	1	2.2

(11.1%)이나 있어, 본 조사에서 는 당초 의도했던 대상학년의 조정보다는 오히려 대상교급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상당수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10-1〉 봉사활동을 모든 교급·학년 동일적용에 대한 판단근거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17명)	비율 (%)
인성교육, 정서교육은 모든 학년에게 필요함	8	47
봉사활동을 일관성있게 생활화하기 위하여	7	41.2
봉사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특정 교급, 학년을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1	5.9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학습의 진정한 목표의식을 지속적·실천적으로 함양하기위하여	1	5.9

이러한 각각의 안에 대하여 제1안의 판단근거로 20명중 17명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제1안의 경우<표Ⅳ-10-1>과 같이 ‘인성교육, 정서교육은 모든학년에게 필요하기 때문’으로가 17명중 8명(47%)이며, 다음으로 ‘봉사활동을 일관성있게 생활화하기 위하여’를 7명이 제시하여 4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봉사활동이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반드시 필요하고,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교급이나 학년 구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표Ⅳ-10-2〉 봉사활동을 모든 교급 1,2학년에게만 적용하는 판단근거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6명)	비율 (%)
현행 입시제도에서는 중3과 고3은 입시부담이 크기 때문에 봉사활동 부담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3	50
사실상 형식적인 활동이 되기 쉽고 부조리와 편법적인 방법동원이 우려됨	3	50

제3안에 응답한 전문가들의 판단근거로는 10명중 6명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표Ⅳ-10-2>에서처럼 ‘현행 입시제도에서는 중3과 고3의 경우, 입시로 인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봉사활동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6명중 3명이 제시하여 50%의 비율을 보였고, ‘사실상 형식적인 활동이 되기 쉽고, 부조리와 편법적인 방법동원이 우려됨’을 역시 3명이 의견제시하여 5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1안의 ‘인성교육’이 모든 교급, 전 학년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 제3안의 의견제시 역시 우리사회의 현행 입시제도나 이로 인한 과외수업 등을 생각할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제3안에서 우려한 것처럼 봉사활동을 마지못해 하거나, 단순히 시간때우기식 형식적인 봉사활동은 오히려 봉사활동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표Ⅳ-10>에서 기타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근거를 살펴보면, <표Ⅳ-10-3>과 같이 나타나는데 먼저 ‘모든 교급, 전 학년대상으로 봉사활동(봉사학습)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경우, 이에 대한 판단근거로는 ‘인성교육 및 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고, 공동체 생활양식을 체득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15명중 3명(20%)이 제시하였고, '모든 교급, 전 학년에 적용하되 3학년의 경우, 시간수를 차등적용하는' 의견 역시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판단근거를 '입시준비를 위하여 최소한의 봉사활동 시간만 적용'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표Ⅳ-10-3〉 "기타의견"에 대한 판단근거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13명)	비율 (%)
자율에 맡기되 다양한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것이 바람직	3	23
중·고등학교 3학년은 입시준비를 위해 최소한의 시간만 적용하는것이 바람직	3	23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인성교육 및 인성개발의 초석이 될 수있으며 공동체 생활양식을 체득할 수 있기 때문	3	23
사회를 이해하고 시민의 자질과 기술을 익히는데는 고교시절이 적합함	2	15.3
봉사대상학년적용 및 의무시간 부과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음	1	7.7
교급별 3년동안의 총시간수만 제시하면 학생 스스로가 3년동안 적절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기때문	1	7.7

지금까지는 봉사활동 대상학년 조정 필요여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판단근거를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각 대안 중 의미가 있는 제1안과 제3안을 중심으로 적정 봉사활동 시간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봉사활동시간을 모든 시·도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봉사활동시간을 교내와 교외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1안의 의견에 대해서는 〈표Ⅳ-10-4〉와 같이 나타난다. 제1안의 경우에 있어서 적정봉사활동시간수는 '연간 40시간(교내 10시간, 교외 30시간)'을 응답자 12명중 5명이 의견제시하여 41.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다음으로 '연간 45시간(교내 15시간, 교외 30시간)'과 '연간 20-25시간', '연간 30시간(교내 10시간, 교외 20시간)'을 공히 2명씩 의

전제시하여 각각 16.7%를 나타내고 있다. 제3안의 경우에는 <표Ⅳ-10-5>에서 '연간 30시간(교내 10시간, 교외 30시간)'을 응답자 10명중 4명이 적정한 시간이라고 응답하여 40%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연간 20시간(교내 12시간, 교외 8시간)'이 2명(20%), 기타 연간 25시간(교내 10시간, 교외 15시간), 연간 40시간(교내 20시간, 교외 20시간)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Ⅳ-10-4> 봉사활동을 모든 교급·학년 동일 적용시 최소 적정시간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12명)	비율 (%)
교내 : 10시간, 교외 : 30시간 ⇒ 연간 40시간	5	41.6
교내 : 15시간, 교외 : 30시간 ⇒ 연간 45시간	2	16.7
연간 20 ~ 25시간	2	16.7
교내 : 10시간, 교외 : 20시간 ⇒ 연간 30시간	2	16.7
교외만 80시간(8시간 × 10회)	1	8.3

<표Ⅳ-10-5> 봉사활동을 모든 교급 1,2학년에게만 적용시 최소 적정시간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10명)	비율 (%)
교내 : 10시간, 교외 : 20시간 ⇒ 연간 30시간	4	40
교내 : 12시간, 교외 : 8시간 ⇒ 연간 20시간	2	20
교내 : 10시간, 교외 : 15시간 ⇒ 연간 25시간	1	10
교내 : 20시간, 교외 : 20시간 ⇒ 연간 40시간	1	10
교외만 17시간	1	10
연간 24시간	1	10

이상에서 제1안과 제3안을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교내 봉사활동보다는 교외 봉사활동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적정 봉사활동 시간수 역시 '연간 40시간 이상'을 총 22명중 9명이 제시하여 41%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이 각각 6명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음

을 볼 때, 최소한 20시간 이상이 적정 봉사활동 시간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22명중 21명이 제시하여 95%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마) 현행 학생봉사활동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차원에서 도입 시행되어야 할 새로운 제도나 혹은 기존의 운영방법상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를 우선 순위별로 3가지를 기술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도입·시행되어야 할 제도 또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 3가지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제시토록 한 바, <표Ⅳ-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응답자 45명이 의견제시하여 36점을 나타낸 '전담교사나 지도자의 확보'가 전체 응답인원 3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존의 학교 교과목에 연계하거나 별도의 봉사과목 설치'가 28점으로 응답인원의 27%가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양한 봉사활동 영역의 개발'과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각각 18점으로 응답인원 18%씩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문항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1순위를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봉사활동 영역개발'과 '학습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같은 내용으로 처리할 때, 순위에 있어서는 '전담교사나 지도자 확보'보다는 뒤이지만 의견제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의견중 프로그램 개발이나 활동영역 개발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이에 대한 연구개발·보급을 통하여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학교내에 전담교사나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쉽사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중 하나가 기존의 교사를 전담교사화하는 방안인데, 이는 특정교사를 봉사활동지도·기록관리 등의 업무에 전담케 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특정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시간 만큼을 타 교사가 담당하므로써 생기는 업무의 부담이다. 둘째로 학교내 환경부나 학생부 등 봉사활동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수당지급이나 인사고과 반영 등의 혜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학교재정과 인사의 형평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제3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표Ⅳ-11〉 학교 차원에서의 봉사활동 제도개선 과제

※ ()는 가중치, %는 응답인원 백분비율

응답내용	응답점수 (가중치)	응답자 비율
전담교사나 지도자(학교사회사업가, 청소년지도사등) 확보	36	38
기존학교교과목과의 연계 또는 봉사과목 설치	28	27
다양한 봉사활동영역 개발	18	13
학습자의 요구(need)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18	13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전담기구 확립	13	11

바) 학생자원봉사활동과 성인자원봉사활동은 어떠한 차별성이 있고 또 이러한 차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나 노력

현행 실시되고 있는 학생봉사활동은 정책당국이 충분한 사전준비없이 시행함으로 해서 적지않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특히 봉사활동거리를 제공하는 수요처의 부족과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지도할 지도자의 부족현상,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활동거리 역시 성인들이 하는 봉사활동과 별 차이 없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학생봉사활동과 성인봉사활동이 어떠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별성을 봉사활동 현장에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살펴 보기로 한다.

〈표Ⅳ-12〉 학생봉사활동과 성인봉사활동의 차이점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44명)	비율 (%)
봉사학습 및 교육차원의 활동임	19	43.2
인성함양과 다양한 사회생활·사회기술 등을 학습하는 교육의 목적이여야 함	12	27.3
시간제약과 경험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6	13.6
봉사체험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2	4.5
봉사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지도, 감독이 필요	2	4.5
개인보다 동아리/학급단위의 집단활동이며 교육적인 활동임	2	4.5

먼저 <표Ⅳ-12>는 학생봉사활동과 성인봉사활동의 차이를 ‘봉사학습과 교육차원의 활동임’을 제시한 응답자가 총 44명중 19명으로 43.2%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인성함양과 다양한 사회생활, 사회기술 등을 학습하는 교육의 목적이어야 함’이 12명으로 27.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을 받고 경험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가 6명(13.6%), ‘봉사체험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청소년봉사활동은 봉사를 통한 학습의 한 과정이며, 인성함양 및 사회생활을 알고, 기술을 익히는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성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별성들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나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표Ⅳ-12-1>과 같다.

먼저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교육, 준비, 실행, 평가의 체계적 방법과 활동상황에 대한 피드백(feed back)으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함’이 총 응답자 43명중 10명이 제시하여 23.3%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이러한 차별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되어야 함’의 제도와 관련된 의견을 8명이 제시하여 18.6%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봉사활동의 운영방법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전문지도자 교육이 필요하다’와 ‘지도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가 각각 6명으로 나타나 14%씩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로는 기존의 학교 교과과정에 봉사활동

<표Ⅳ-12-1> 학생봉사활동이 차별성을 갖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노력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43명)	비율 (%)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교육, 준비, 실행, 평가의 체계적 방법과 활동상황에 대한 피드백으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함	10	23.3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되어야 함	8	18.6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봉사활동의 운영방법과 프로그램 제공, 전문지도자 교육 등 실시	6	14
지도교사의 전문성 확보	6	14
보험제도 도입과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4	9.3

동 교과목을 설치하거나 담당 지도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등을 통해 이러한 차별성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32.6%)이 있는 반면, 봉사활동의 체계적 운영방법과 활동상황의 피드백 등 교육적 조치 또는 자원봉사센터 등에서의 기능강화 등의 제도권 밖에서도 가능한 노력(37.3%)으로 차별성을 견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어 제도와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3) 정책대안의 개발

정책대안(policy alternative)은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채택가능한 여러가지 정책들 하나 하나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일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수단을 채택할 수 있을 때,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정책수단들의 배합 하나 하나가 정책대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목표와 수단의 조합(combination)이 정책대안이 된다. 그러므로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대안들을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정책대안을 탐색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거 또는 현존하는 정책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외국의 정책들이 정책대안의 출처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자원봉사 정책들을 참고로 하여 주관적·직관적 방법의 하나인 델파이 방법을 통해 대안을 개발·창출하고자 하였다.

가) 최소한의 봉사활동 경력을 모든 대학의 입학사정에 반영하는 방법과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현행 대학에서는 학교에 따라 중 고등학교의 봉사활동시간 등을 입학사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하면, 반영하지 않은 대학도 있는데, 이는 입학사정을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대로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법과 모든 대학이 최소한의 봉사활동을 입학사정시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표Ⅳ-13>에서와 같은 응답내용이 제시되었다.

봉사활동 경력의 대학 입학사정시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45명중 23명이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봉사활동 경력이 대학입시에 '평가·반영·권장'되어야 한다는 경우는 총 22명으로 48.9%를 차지하고 있어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과 입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

〈표Ⅳ-13〉 봉사활동실적의 대학입학사정 반영에 대한 견해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45명)	비율 (%)
대학 자율에 맡김	23	51.1
대학에서 입학사정시(면접시) 봉사활동 경력을 평가하도록 함	13	28.9
모든 대학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	6	13.3
면접시 봉사활동실적이 반영되도록 하되 반영비율은 자율에 맡김	2	4.5
연차적으로 모든 대학에 반영되도록 함	1	2.2

그러나 앞의 〈표Ⅳ-8〉에서는 '봉사활동을 점수화하여 상급학교 진학성적에 반영하여야 한다'가 총45명중 27명(60%)으로 나타난 바 있어, 이와 상관시켜 보면 상급학교 진학시 반영은 하되 반영의 정도, 방법등은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중·고등학교 봉사활동 경력이 모든 대학의 입시에 최소한 반영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

중·고등학교 봉사활동 경력이 모든 대학의 입학사정시 최소한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표Ⅳ-14〉에서 처럼 '봉사활동의 성격이나 유형, 평가기준들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가 총 40명중 12명이 응답하여 30%의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봉사활동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가 6명으로 15%, '봉사활동 교과목 설치와 대학입시 반영 의무화'가 4명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봉사활동경력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성있는 평가자료, 즉 봉사활동의 성격이나 유형, 평가기준이 정립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봉사활동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활동의 유형, 입시반영비율, 봉사활동의 기록관리 형태, 봉사활동 관련 전공영역의 구분, 봉사활동 실시내용의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방법 등이 면밀히 연구·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나 절차를 한국대학사회봉사

〈표Ⅳ-14〉 대학에서 봉사활동 경력을 최소한 반영하기 위한 선결 과제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40명)	비율 (%)
봉사활동의 성격, 유형, 평가기준 등의 정립	12	30
봉사활동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정책의지	6	15
봉사활동 교과목의 설치와 대학입시반영의 의무화	4	10
봉사활동내용이 봉사학습으로 이루어져야 함	4	10
봉사활동분야의 인증제와 봉사시간확인의 객관성	3	7.5
봉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실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7.5
봉사필수졸업제도 도입	1	2.5

협의회와 중·고교 교사들과의 공동연구와 협의 등을 통해 기록·평가기제를 개발·활용한다면 봉사활동경력을 입시에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하리라고 판단된다.

다) 학생자원봉사의 제도정착을 위하여 정부가 가장 시급히 마련해야 할 정책수단을 우선순위별로 5가지 제시

정책수단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수단의 결정과 실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수단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비용의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정책비용이 과다하면 아무리 정책목표가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바람직스러운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학생봉사활동이 갖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선택한 정책수단은 〈표Ⅳ-15〉와 같다.

먼저 학생자원봉사의 제도정착을 위하여 정부가 마련하여야 할 정책수단을 우선순위별로 5가지씩을 제시하게 한 바,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의견으로는 '학교내 전담교사의 배치와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나타났다. 이를 제시된 의견의 순서에 따라 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점수를 부여할 때, 총 136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인원의 백분비도 84.4%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의 "〈표Ⅳ-2〉학생자원봉사제도를 통한 정책목표달성의 장애요인"에서도 나타난 결과로서 '전담교사부재'가 정책목표달성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었던 것, 학생봉사활동 제도정착을 위해서 정부가 가장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정책수단

〈표Ⅳ-15〉 학생봉사활동 제도정착을 위해 시급히 마련해야 할 정책수단

※ ()는 가중치, %는 응답인원 백분비율

응답내용	응답점수 (가중치)	응답자 비율
학교내 전담교사의 배치와 인센티브 부여	136	84.4
봉사활동교과목 설치 또는 타교과목과의 연계, 설치	121	62.2
지역사회내 자원봉사 전담기관의 설치	78	55.5
대학입시반영의 의무화	51	37.7
수요처 및 전담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47	46.6
자원봉사보험제도 도입	37	42.2
봉사활동관련 포상제도	30	31.1

으로도 가장 높게 제시되고 있어 정책목표 달성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이 일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봉사활동 교과목의 설치나 타 교과목과 연계 설치'를 지적하였는데, 이는 121점으로 6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내 자원봉사 전담기관의 설치'가 78점으로 55.5%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 '대학입시반영의 의무화'가 가중치 51점으로 응답인원의 37.7%를, '수요처 및 전담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중치 47점으로 응답인원의 46.6%를 각각 의견제시하였다.

- 2) 학생봉사활동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여건(소양교육 실시,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수요처에 관한 정보제공, 지도자의 배치 등)을 조성하여야 하는데, 지역사회내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관

학생봉사활동을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전 교육, 지역사회내 다양한 수요기관의 확보, 성별 교급별 학년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제공, 아울러 활동현장에서의 적절한 지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내에서 가장 적절한 기관으로 〈표Ⅳ-16〉에서는 '시·군·구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들고 있는데, 응답인원 총45명중 13명이 의견제시하여 28.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와 수요기관과 자원봉사센터의 협력기구'를 8명(17.8%)이 제시하였는데, 이는 위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표Ⅳ-16〉 지역사회내 학생봉사활동을 담당하기에 적절한 기관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45명)	비율 (%)
시·군·구 단위의 자원봉사센터	13	28.9
학교+수요기관+자원봉사센터의 협력기구	8	17.8
학교	7	15.6
사회복지기관	4	8.9
시·도단위 자원봉사센터	3	6.7
학교와 지역사회봉사센터 그리고 정부의 전담부처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2	4.4
시·군·구자원봉사센터(수요-공급연계), 청소년단체 및 사회복지기관(프로그램 제공), 대학과 청소년개발원(지도자양성)	1	2.2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학교와 수요기관과 상호협력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지정한 의견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가 적절하다고 하는 입장은 총 21명으로 46.7%의 비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 '학교'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명(15.6%)으로 나타났으나 학교가 이러한 정보제공을 전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된다. 기타 지역사회 '사회복지관'이 4명(8.9%), '시·도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3명(6.7%)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사회복지관이나 시·도 단위 자원봉사센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관의 업무특성, 예컨대, 아동복지나 재가복지 등 주로 복지분야에 한정되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시·도 단위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광범위한 서비스 대상지역(service boundary), 즉 근접성을 고려할 때 학생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도자를 배치하는 일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관내는 물론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시설까지를 조직화(organization)하여 사회복지분야에 관련되는 정보 제공이나 교육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시·도 단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내에서 자원봉사지도자를 모집하여

교육연수후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요기관의 확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선의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 보급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 현행 시·도 단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주된 역할

문화체육부의 지원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주된 역할을 보면 <표Ⅳ-17>에서처럼 '해당 시·도내의 중·고등학교에 학생봉사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프로그램이나 수요기관 등)를 제공하는 일'을 가중치 170점의 점수로 응답자 25.1%가 의견제시하였고, 둘째로는 '센터에서 직접 봉사활동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소양교육 실시 및 지역사회 수요처에 직접 연결시켜 주는 역할'에 142점의 가중치에 응답자 20.9%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시·도내의 학교교사나 사회복지관, 청소년회관, 자원봉사센터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학생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136점의 가중치에 응답자

<표Ⅳ-17>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

※()는 가중치, %는 응답인원 백분비율

응답내용	응답점수 (가중치)	응답자 비율
해당 시·도내의 중·고등학교에 학생봉사활동에 필요한 각종정보(프로그램, 활동수요기관 등)를 제공	170	25.1
센터에서 직접 봉사활동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사전소양교육 실시 및 지역사회내 수요기관과 연결	142	20.9
해당 시·도내의 학교 교사나 사회복지관, 청소년회관, 자원봉사센터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학생자원봉사 지도교육을 실시	136	20.1
해당 시·도내 학생봉사활동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관, 청소년회관, 시·군·구자원봉사센터, 단체등에 학생봉사활동에 필요한 각종정보(프로그램, 수요기관 등)를 제공	127	18.7
학생자원봉사 관련 정책개발·연구, 프로그램개발·보급, 자원봉사지도자 양성연수, 자원봉사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수행	103	15.2

20.1%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두번째의 응답은 광역시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도단위 센터에서는 앞의 문항에서도 나타나듯이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수요처에 직접 연결시켜 주는 일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광역시 센터의 경우 첫 번째의 응답항목과 두 번째의 응답항목이 갖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될 것이며, 도단위 센터의 경우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응답 항목을 병행하는 기능과 역할수행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학생자원봉사관련 정책개발이나 연구,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자원봉사지도자 양성연수, 자원봉사 관련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은 시·도 단위 센터의 역할 중 가장 낮은 비율(가중점수 103점, 응답자의 15.2%)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도 차원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로 규정되며 관련 중앙부처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체 시·도나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바)·사)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우수 학생봉사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포상이 주어져야 하며, 포상대상자의 선정기준, 포상대상자의 평가 및 심사는 어떠한 기관에서 담당하여야 하는지?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주어지는 칭찬과 인정은 행위자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청소년들이 성취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사기진작과 나아가 봉사활동에 관한 범 국민적 관심까지도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위의 결과에 대한 포상은 어떠한 형태로든 동기강화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가 되는데, 학생봉사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포상이 바람직하며, 포상대상자의 선정기준과 포상의 심사·평가기관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표Ⅳ-18〉은 포상의 내용에 관한 의견으로서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포상으로서는 ‘표창이나 상품 또는 장학금의 지급’이 총 응답자 45명중 20명이 의견제시하여 44.4%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두 번째로는 ‘상급학교 진학시 혜택을 부여’하는 의견이 6명으로 13.3%를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 ‘활동유형별로 평가기준을 만들어 단계별로 금상, 은상,

동상을 수여' 하는 의견과 '해외시찰및 연수'에 대한 의견이 각각 3명으로 6.7%씩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포상의 형태는 표창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장학금 지급의 경우 학교의 학부모회나 봉사활동 운영위원회(가칭)에서 지급하는 경우는 가능하겠으나 별도의 학교차원에서는 재원확보 측면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의 상급학교 진학시 혜택부여는 성적과 관련되어 자칫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세 번째의 봉사활동 단계별 평가기준에 따라 금·은·동의 뱃지나 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한 활동을 예로 든다면, 에딘버러(Edinburgh)공작 기념 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기념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청소년활동포상계획으로서 청소년 활동유형(봉사활동, 탐험·탐사활동, 취미활동, 사회체육활동)과 각 분야의 난이도에 따라 초급단계(Bronze Level), 중급단계(Silver Level), 고급단계(Gold Level)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금·은·동의 뱃지를 수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의 학생봉사활동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표Ⅳ-18〉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포상내용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45명)	비율 (%)
표창이나 상품 또는 장학금의 지급	20	44.4
상급학교 진학시 혜택부여	6	13.3
활동유형별로 평가기준을 만들어 단계별(금,은,동)로 상장수여	3	6.7
해외시찰 및 연수	3	6.7
개인포상보다 우수담당교사 또는 학교에 포상	2	4.4
학생자원봉사지도자 자격부여 또는 학생선도위원으로 임명	1	2.2

한편, 이러한 포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하거나 심사하는 기관으로 어떠한 기관이 적절하느냐?에 대해서는 〈표Ⅳ-18-1〉에서와 같이 총 응답자 40명중 8명이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여 2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학교내 자원봉사위원회'와

‘학교 또는 지역봉사센터 등에서 교사와 지역사회봉사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심사하여야 한다가 각각 7명씩으로 17.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독자적으로 포상대상자를 심사·평가하는 것 보다는 가능한 학교와 연계체계를 가지고 교사와 지도자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평가할 때 보다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표Ⅳ-18-1〉 학생봉사활동 포상, 평가 또는 심사기관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40명)	비율 (%)
청소년자원봉사센터	8	20
학교내 자원봉사위원회	7	17.5
학교 또는 지역봉사센터 등의 전담기관에서 교사와 지역사회봉사지도자 등으로 위원회 구성	7	17.5
교육청과 시·도 봉사기관의 협력단체나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이 공동으로 “포상위원회를 구성	3	7.5
지역(시·군·구)위원회에서 1차심사를 거쳐 2차는 시·도위원회, 3차는 중앙(관련기관전문가구성)위원회	3	7.5
사회협력기구	2	5
해당교육청, 교육위원회 산하 심사위원회	2	5
학교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2	5
봉사활동기관에서 1차 추천하여 센터에서 심사	2	5
봉사활동을 실시한 기관	1	2.5
문화체육부 또는 자원봉사센터에 심사위원회 구성	1	2.5
시민단체(NGO)	1	2.5

포상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전문가 의견은 대부분 주관적 판단에 의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객관적 판단기준이 되는 응답과 주관적 판단기준이 되는

〈표Ⅳ-18-2〉 학생봉사활동 포상 대상자 선정 기준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41명)	비율 (%)
봉사학습의 달성정도, 참여시간, 참여내용 등을 균형있게 평가	8	19.5
지속성, 적극성	6	14.6
성실성, 지속성	6	14.6
성실성, 창의성	5	12.2
참여자세(적극성, 문제해결방법, 협동성)	4	9.8
성실성, 능동성	3	7.3
자발성, 변화된 모습, 협동심, 지도력 등	2	4.9
봉사활동의 계획, 실시, 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와 활동의 유익성	2	4.9
봉사활동 이타성의 강도, 지속성, 건강한 이기적동기의 만족도	1	2.4
봉사기간, 시간, 내용, 추천서, 자기평가서 등을 참조	1	2.4
수요기관에서 확인해준 내용	1	2.4

응답으로 구분하여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다. 우선 객관적 판단기준이 되는 항목으로는 ‘봉사학습의 달성정도, 참여시간, 참여정도와 내용 등을 균형있게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 총 응답자 41명중 8명이 의견제시하여 19.5%의 비율을 보였으며, 두 번째로 ‘봉사활동의 계획, 실시, 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와 활동의 유익성’이 2명으로 4.9%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수요기관에서 확인해준 내용’이 있는데 이는 수요기관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면이 있으며 평가사항이 불분명하여 이견의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관적 판단기준은 단일 의견으로 ‘성실성’과 ‘지속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 6명이 응답하여 14.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판단을 동시에 고려해보면, 봉사활동 포상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되 봉사학습의 달성정도와 참여시간, 참여내용 등을 균형있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 학교차원의 봉사활동운영에는 봉사활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량과 다, 적절한 처우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학교내 봉사

활동을 비롯하여 수련활동 및 청소년 단체활동지도,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 상담 등을 전담하는 교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

'95년 5월에 발표된 「교육개혁 방안」에는 학생들의 청소년 개인 또는 단체 수련활동과 학내·외 자원봉사활동의 내용과 참가시간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상급학교 진학시에 이를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임교사나 수련·봉사활동을 담당하는 교사는 최소한 학생 개인의 활동기록을 기재하고 이를 점수로 계량화하여야 하는 부가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물론 그동안 청소년단체활동(보이스카웃, 걸 스카웃, RCY 등)을 지도하는교사나 학생상담을 위해 교도교사가 있어 왔지만 학생 개인의 수련활동이나 봉사활동의 내용과 참가시간을 의무적으로 기재, 관리하도록 함은 교사들에게 교과수업외의 또다른 정신적,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교사들의 업무과다로 인한 부담은 결국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학교내 청소년 단체활동과 학생상담활동 뿐만 아니라 수련활동이나 봉사활동까지를 전담하는 교사의 필요여부에 대해서 살펴 본 바, <표Ⅳ-19>에서와 같이 전체 응답인원 45명중 42명이 '필요하다' 라고 응답하여 93.3%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현행대로 환경부나 학생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다'가 3명(6.7%)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기존의 교도교사나 청소년단체활동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련이나 봉사활동 관련 분야의 연수과정을 이수토록하여 일정기간 동안 책임지도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교사에게 적절한 처우를 보장(수업면제나 대폭 축소, 수당이나 승진 등의 인센티브 부여)하여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청소년지도와 관련되는 유자격 지도자 예컨대, 청소년지도사나 사회복지사, 사회교육전문요원 등을 파트타임이나 전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초기에는 교육청 단위에서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순회방문을 통해 지도하다가 단계적으로 시범학교 및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표Ⅳ-19〉 상담·단체활동, 수련·봉사활동 전담교사 배치의 필요성 여부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45명)	비율 (%)
필요하다	42	93.3
현행대로 환경부나 학생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다	3	6.7

자) 학교내 상담 및 단체활동, 수련·봉사활동을 전담하는 교사를 배치하는 경우 해당 교사에게 필요한 자격이나 연수과정

학교내에서 상기의 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경우, 이들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는 〈표Ⅳ-19-1〉에서와 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총 14명으로 31.1%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11명으로 24.4%를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교사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은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러한 자격을 부여하는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나 청소년지도학과에 교직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대학졸업 후 교사로 임용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교사들의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의 경우,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의 경우 한국청소년개발원이나 문화체육부가 지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비교적 단기간의 자격취득과정(1, 2, 3급 자격과정)을 각각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연수과정을 통해 자격취득은 가능하다고 본다.

〈표Ⅳ-19-1〉 전담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45명)	비율 (%)
사회복지사	14	31.1
청소년지도사	11	24.4
청소년상담원	3	6.7
사회교육전문요원	2	4.4

다른 한편, 학교내에 학생상담 및 단체활동, 수련·봉사활동을 전담하는 교사를 배치하는 경우 이들 교사에게 필요한 연수과정으로는 〈표Ⅳ-

19-2>에서 볼 수 있듯이 총 응답자 42명중 6명이 ‘자원봉사지도 및 관리과정’ 과 ‘학교교사에 대한 일반연수’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각각 14.3%씩의 비율을 보였고, 기타 ‘청소년 관련 보수교육’, ‘간단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기초,전문,종합과정으로 구분하여 연수’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견제시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대상 연수의 내용, 시간 등과 과정운영은 교사들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별도로 연구·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표Ⅳ-19-2〉 전담교사 배치시 필요한 연수과정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42명)	비율 (%)
자원봉사지도 및 관리과정	6	14.3
학교교사에 대한 일반연수	6	14.3
특별활동 관련연수	1	2.4
사회복지관련 교육기관 연수	1	2.4
청소년관련 보수교육	1	2.4
간단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1	2.4
기초, 전문, 종합과정으로 관리	1	2.4
기타	1	2.4

차) 학생봉사활동은 성인들의 봉사활동과는 달리 활동과정에서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이러한 부주의로 본인의 피해는 물론 수요기관에 대해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본의 아닌 상해를 주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예상되는 위험과 피해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조치로서 마련되어야 할 제도적인 장치

〈표Ⅳ-20〉은 봉사활동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조치로서 마련되어야 할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의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자원봉사보험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가 응답자 44명중 총 26명이 의견제시하여 5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국가에서 보험제도를 제공’하여야 한다가 6명으로 13.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 ‘안전공제보험제도의 실시’가 3명(6.8%),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법규

정' 필요가 2명(4.5%)으로 각각 나타내고 있다.

위의 의견 중 '자원봉사보험제도'는 사적(私的)보험이 아닌 별도의 공적(公的) 보험 성격으로 새로운 제도를 개발·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험제도는 일본의 경우에 이미 시행중에 있다. 다음의 '국가에서 보험제도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완전한 공적 보험형태로서 현행의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적 측면의 보험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두가지 모두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여타의 복지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전자의 경우가 시행하기에는 용이하리라 판단된다.

〈표Ⅳ-20〉 봉사활동시 예상되는 위험과 피해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44명)	비율 (%)
자원봉사 보험제도 도입	26	59.1
국가에서 보험제도 제공	6	13.6
안전공제보험제도 실시	3	6.8
자원봉사 보호를 위한 법 규정	2	4.5
상해보험 가입	1	2.3
교육청별로 공제조합 설치	1	2.3
지역별로 보험에 가입	1	2.3

카) 특정활동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여부로 발생하는 시비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이나 장치

봉사활동의 유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학생 개개인의 개인 계획(이 경우 학생 스스로가 지역사회내에서 수요기관을 직접 찾거나 자원봉사관련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에 의해서 봉사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특정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로 종종 시비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이나 제도적인 장치로 제시되는 의견은 〈표Ⅳ-21〉에서처럼 총 응답자 39명 중 9명이 '전문가 집단이나 심의위원회에서 활동기준표를 만들어 제시'하여야 한다고 답하여 전체의 23.1%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봉사활동의

종류, 대상기관, 활동내용 등을 사전에 공표' 하는 의견이 5명으로 12.8%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한 의견들이 대체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크게 분류해 보면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봉사활동 지침이 되는 준거 틀(활동내용, 프로그램의 인증제, 봉사활동 매뉴얼 등)을 제시하자는 의견으로서 약 51%(20명)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다른하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평가 및 심의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자는 의견으로 약 26%(10명)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는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매년 또는 격년 단위 등) 계획하는 단계에서 전문가 집단에 의해 제작된 활동 매뉴얼을 사전에 학교나 자원봉사 관련기관에 보

〈표Ⅳ-21〉 봉사활동 인정여부의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이나 장치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39명)	비율 (%)
전문가집단이나 심의위원회에서 활동기준표를 만들어 제시	9	23.1
봉사활동의 종류, 대상기관, 활동내용 등을 사전에 정해 공표	5	12.8
봉사활동에 대한 개념재정립 및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3	7.7
1차심사는 담임교사, 2차심사는 봉사담당교사, 최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사회봉사 위원회"가 실시	2	5.1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평가인정제 실시, 기타 특수한 프로그램은 학교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2	5.1
(조정)위원회의 설치 필요	2	5.1
교육부에서 봉사활동 지침을 마련하여 기준을 명시	2	5.1
최소한의 봉사활동 인증제	2	5.1
교육(구)청 단위 등에 평가 및 심사위원회를 구성, 최종판단	2	5.1
현행 자원봉사센터의 자문기구 활용	2	5.1
1차는 센터, 2차는 교사, 3차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1	2.6
봉사활동의 급수를 정함(degree of altruism)	1	2.6
봉사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진학, 취학시 그 내용을 평가하면 시비의 소지가 없음	1	2.6
교사교육을 강화하여 해당교사가 판단케 함	1	2.6
심사위원회 운영과 매년 고시	1	2.6

급하되 매뉴얼의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화시켜 열거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활동유형별, 수요기관별로 범주화(categorization)하여 제시(이 경우 학교내에 상시 비치하여 학생들이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하고, 동시에 학생개개인이 봉사활동계획서 봉사활동기관과 내용을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봉사활동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봉사활동 인정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로부터 봉사명령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의 사회봉사활동과 학교로부터 퇴학·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에게 징계되는 봉사활동 명령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와 전문인력

법무부에서는 1989년부터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법원이 16세 이상의 소년에게 보호관찰처분을 하면서 덧붙여 부과할 수 있는 명령으로서 선도 가능한 비행소년을 처벌하는 대신 일정시간동안 무보수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거나 정신교육 또는 준법교육을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인 것이다.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한 프로그램은 공원, 등산로의 쓰레기 줍기 등의 자연보호활동이나 장애자 시설이나 양로원, 지역사회 복지관등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봉사활동, 문화재 보호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하다.

다른 한편, 각급 학교에서는 1997년 9월부터 종래의 학칙위반 학생에 대하여 주어진 정학·퇴학 등의 징계 대신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을 중시, 선도 위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학생선도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학생선도규정에 의하면 징계 대상 범위를 예절, 준법, 수업, 근태, 약물, 폭력, 퇴폐행위, 금품, 집단, 기타 등으로 그룹핑(grouping)하고 이에 따른 징계의 종류로 학교내 봉사(5일 이내), 사회봉사(3일 - 5일 이내), 특별교육 이수(6일 이상), 선도처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에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지도를 위해서는 특별지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봉사활동 대상기관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청소년들에 대한 봉사활동은 치료적 성격과 더불어 문제행동에 대한 재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니 만큼 일반 청

소년들의 봉사활동과는 달리 봉사활동 지도과정에서 보다 전문적 개입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회봉사지도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적절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표Ⅳ-22〉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가장 적절한 기관으로 제시되었는데, 전체 응답자 42명중 10명이 의견제시하여 23.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사회복지관이나 단체'가 8명으로 19%, '청소년회관이나 단체, 사회복지관'이 5명으로 각각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청소년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주체의 하나인 '보호관찰소'는 4명으로 나타나 9.5%에 그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청소년단체나 회관 등의 청소년지도사 등에 의한 전문적 개입활동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이들 사회봉사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필요한 인력을 2개까지 제시토록 하였던 바, 〈표Ⅳ-22-1〉에서 처럼 '사회복지사'를 29명이 제시하여 36.7%를 비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청소년지도사가 22명으로 27.8%를, '상담심리사'가 17명으로 21.5%를, '학교교사'가 6명으로 7.6%를 각각

〈표Ⅳ-22〉 사회봉사활동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전담기관이나 단체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42명)	비율 (%)
청소년봉사센터	10	23.8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	8	19
청소년회관·단체, 사회복지관	5	11.9
보호관찰소	4	9.5
지역자원봉사센터	4	9.5
청소년단체나 수련원	3	7.1
특수영역의 대안학교와 같은 새로운 전문기관 필요	2	4.8
청소년상담기관	2	4.8
NGO	1	2.4
일반봉사활동과는 연관성을 갖지 않는 특정 단체	1	2.4
교회나 청소년교육기관	1	2.4
행정조직내에 전문인력 참여	1	2.4

보여 주었다. 결국 문제청소년의 사회봉사활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필요한 인력으로는 청소년지도사나 사회복지사가 적절하며 사회봉사 전달기관으로는 이들 유자격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관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표Ⅳ-22-1〉 사회봉사활동 실시를 위해 필요한 인력

※응답실수:복수응답인원수, %는 응답실수에 대한 백분비율

응답내용	응답실수 (총42명)	비율 (%)
사회복지사	29	36.7
청소년지도사	22	27.8
상담심리사	17	21.5
학교교사	6	7.6
사회교육전문요원	4	5.1
성직자	1	1.3

파) 지역사회내에서 학생봉사활동 업무를 전담하거나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회관(수련관) 등이 있다. 그러나 전문지도자의 배치여부, 무계획적인 기관설치로 인한 지역별 업무의 중복, 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미구축 등으로 인한 인력과 운영의 비효율성, 예산의 낭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낭비를 지양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전문적 서비스제공을 위한 중단기적인 정책대안

〈표Ⅳ-23〉 효율적인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중단기적 정책대안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43명)	비율 (%)
단기적으로 관계기관 협력모임을 만들어 의견조정 및 합의후 전산망 공동운영과 같은 공동사업개발, 반대로 각 기관의 특성별 업무구분 장기적으로는 정부관계 부처 협의 : 주무 부처 및 관계부처간 업무조정, 법 제정, 중앙-지방 모델연구, 중앙부처 상설 협의기구설립	6	14
지역사회개념을 적용하여 지역사회내의 학교들과 가장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학생봉사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기관이 업무를 전담하고 광역의 모든 다른 기관들이 자원으로서 역할(지역사회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5	11.6
시·군·구 단위에는 센터가 단일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도 단위에는 분야별로 전문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이 경우 도 단위센터 간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며 전국단위센터의 경우도 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동시에 분야별 센터를 조정, 지원하는 네트워크 체제를 갖추어야 함	5	11.6
정부내 전담부처를 하나로 설정하고 유관부처와 업무조정 및 역할을 분담하여야 하며 문체부의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되어 관련기관의 업무조정과 역할분배 등의 기능을 수행	4	9.3
청소년자원봉사의 전문성확보가 시급하며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한 예산상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봉사활동협의회”를 만들어 상호 협의조정하는 것이 필요 : 미국처럼 각 봉사단체나 기구 등의 프로그램, 사업별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정책심의기구	3	7

응답내용	응답자수 (총43명)	비율 (%)
학생봉사활동 전담기관과 복지시설등이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세미나, 간담회 개최, 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으로 자료의 공유, 아울러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	3	7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주가 되어 학생봉사활동업무를 총괄담당하여야 함(미국의 학생봉사연맹의 역할 수행)	3	7
지역사회내에 민간자율의 협조조정기구(NGO) 등 육성	2	4.7
학생봉사활동전담기구의 설치필요, 학교내 전담교사제 도입, 필요한 예산지원, 자원봉사지침 마련	1	2.3
시·도별로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종합상담실, 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 등을 통합하여 해당지역 청소년단체와 연계 운영	1	2.3
봉사활동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그 가치를 인정·평가하는 사회구조에의 변화와 구·군·읍 단위까지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	1	2.3
청소년자원봉사센터나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1	2.3
특정센터나 기관이 중심이 되어 교육부와 연계, 봉사활동 수요파악, 수요기관의 욕구파악을 통하여 조정,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산망 구축이 필요	1	2.3
전문지도자의 양성과 자원봉사관련과목 개설, 지역사회내 협의회 구성과 봉사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정부부처의 업무통합 선행(독립기구 가능), 연구기관의 신설, 사회단체의 통합체 조정(예,기업부문, NPO, NGO 등 연합회)단순화	1	2.3
정부부처간 자원봉사업무를 총괄하는 중앙기구가 설치되고 자원봉사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반인 대상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은 청소년자원봉사 센터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여 수행	1	2.3
청소년자원봉사육성법 제정, 전담기관의 일원화, 표준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지도자 양성 및 지도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1	2.3
시·군·구 청소년종합센터 및 청소년단체협의회 육성과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1	2.3

〈표Ⅳ-23〉은 현행 학생봉사활동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체제구축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제시한 중단기 정책대안들이다.

여기서 정책체제라 하면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주체(기구), 유관부처 또는 기관상호간의 협력체제, 정책의 집행기관과 집행기관 상호간의 관계성 등에 대한 체제(system)을 말한다.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편의상 중단기 대안으로 제시된 의견과 중요 항목별 정책대안으로 재구성하여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중단기 정책대안 응답자 43명중 6명(14%)

• 단기적 대안

- ①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사업개발(예, 전산망 공동운영 등)
- ② 각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활동분야별 특화

• 장기적 대안

- ① 정부 관련부처 상설 협의기구 설립
- ② 자원봉사 관련 법안 제정
- ③ 중앙과 지방의 자원봉사운영 모델연구

중요항목별 정책대안

- ① 봉사활동 여건조성(46.3%)
 - ㉠ 지도자의 양성 및 지도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11.6%)
 - ㉡ 정보망 구축(9.3%)
 - ㉢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7%)
 - ㉣ 자원봉사 관련 연구·개발(4.6%)
 - ㉤ 표준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구·개발(2.3%)
 - ㉥ 봉사활동에 관한 조사·연구(2.3%)
 - ㉦ 봉사활동 학과목 개설(2.3%)
 - ㉧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활동(2.3%)
 - ㉨ 봉사활동 전담교사제 도입(2.3%)
 - ㉩ 봉사활동 지침 마련(2.3%)

② 자원봉사전담기구의 설치(39.4%)

㉠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봉사전담기관이 가장 유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광역의 관련기관들은 자원으로서 지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network)구축(11.6%)

㉡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봉사활동 총괄 담당(7%)

㉢ 학생봉사활동 전담기관과 복지시설 등이 상호협력체계 구축(7%)

㉣ 시·군·구·읍 단위까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2.3%)

㉤ 청소년자원봉사센터나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인력배치(2.3%)

㉥ 특정센터나 기관이 중심이되어 교육부와 연계, 봉사활동 수요파악, 수요기관의 욕구파악을 통하여 조정·공급(2.3%)

㉦ 일반인 대상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담당하고 청소년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서 독자적인 영역구축(2.3%)

㉧ 학생봉사활동 전담기구 설치(2.3%)

㉨ 전담기관의 일원화(2.3%)

③ 정부내에 자원봉사관련 정책 전담 부처 및 기구 설치(32.5%)

㉠ 정부내 전담부처를 선정하여 유관부처와 업무 및 역할 분담(9.3%)

㉡ 국무총리실 산하에 '봉사활동 협의회'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자원봉사 관련 정책을 상호협의조정(7%)

㉢ 문화체육부 산하의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되어 관련기관과 업무조정과 역할분배(7%)

㉣ 자원봉사법안 제정(4.6%)

㉤ 정부 부처의 업무통합(독립기구), 연구기관 신설, 민간단체의 연합체 조성(2.3%)

㉥ 정부 부처내 자원봉사업무를 총괄하는 중앙기구 설치(2.3%)

④ 행정단위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역할과 기능 재정립(11.6%)

㉠ 전국 단위 : 자원봉사분야별 전문센터 조정·지원하는 네트워크 체제구축, 지역별 센터 지원

㉡ 시·도 단위 : 자원봉사분야별 전문센터 설치(자원봉사센터를 활동분야별로 다양하게 특화 설치)

- ㉮ 시·군·구 단위 : 자원봉사센터의 단일화(시·군·구별 단일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보제공업무 전담)
- ⑤ 민간 단체의 육성(7%)
 - ㉯ 지역사회내 민간 자율의 협의조정기구(4.7%)
 - ㉺ 민간단체의 통합체 조정(예, 기업부문, NGO, NPO 등 연합회)(2.3%)
- ⑥ 시·도별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2.3%)
 - ㉻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상담실, 유해환경고발센터 등을 통합하여 청소년단체와 연계운영(2.3%)

먼저 중단기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의견은 총 43명의 응답자 중 6명(14%)으로 나타났는데, 단기적 대안으로는 자원봉사 유관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산망과 같은 공동사업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게 활동분야별로 특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면에 장기적 대안으로는 정부 관련부처간의 상설 협의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원봉사 관련 법안의 제정,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자원봉사 운영 모델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기 제시된 의견을 중요항목별 정책대안으로 그룹핑(grouping)하고 중복인원의 백분비율로 살펴 보았을 때, 첫째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봉사활동 기본여건조성”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지도자의 양성 및 사회적 예우’(11.6%), ‘정보망 구축’(9.3%),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7%), ‘자원봉사 관련 연구·개발’(4.6%), ‘봉사활동 학과목 개설’(2.3%), ‘봉사활동 전담교사제 도입’(2.3%),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2.3%), ‘봉사활동 지침 마련’(2.3%)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상기 의견중에서 ‘지도자 양성’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예우’와 ‘정보망 구축’은 교사들의 학생봉사활동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봉사활동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 있음을 감안할 때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자원봉사 전담기구 설치”(39.4%)가 제시되었다. 여기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봉사전담기관이 우선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형성’(11.6%)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되어 학생봉사활동을 총괄 담당’하여야 한다고와 ‘학생봉사활동 전담기관과 복지시설 등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7%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시·군·구·읍 단위까지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 하여야 한다가 2.3%, '청소년자원봉사센터나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배치', '성인대상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담당하고 청소년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가 역시 2.3%씩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생봉사활동을 전담하는 기구로서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시·군·구·읍 단위까지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제시된 대안으로는 "정부내 자원봉사 정책 전담 부처 또는 기구의 설치"(32.5%)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한 제시항목들을 살펴보면 '정부내 전담 부처를 선정하여 유관부처와 업무 및 역할 분담'이 11.6%, '국무총리 산하에 봉사활동협의회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자원봉사 관련 정책을 상호협의조정'이 필요하다는 '문화체육부 산하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되어 관련 기관과 업무조정 및 역할 분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7%씩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자원봉사 법안제정'이 4.6%를, 그리고 '정부 부처에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업무를 통합하고 연구기관의 신설과 민간단체의 연합체를 조정'이 2.3%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자원봉사업무와 관련된 정부 주요부처로는 교육부를 비롯하여 문화체육부, 내무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을 들 수 있는데, 학생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이들 부처 상호간의 공식적인 협의체는 아직 없는 상태이며 부분적으로 사안에 따라 문서에 의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을 뿐이다.

넷째로 "행정단위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되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재 정립"하여야 한다가 11.6%의 비율을 보였는데, 이의 예시로 전국단위로 자원봉사분야별 전문센터들을 조정·지원하는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별 센터를 지원하는 것이며, 시·도 단위에는 자원봉사분야별 전문센터를 설치하고 시·군·구 단위에는 단일(1개소씩)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의 의견중 시·도 센터의 설치와 기능과 역할, 시·군·구 단위의 설치와 기능은 자칫 반대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에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센터 설치가 인구규모나 설치예산 등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크다고 본다.

다섯째로 "민간단체의 육성"을 응답자의 7%가 제시하였는데 '지역사회내

민간 자원의 협의조정기구가 필요' 하다가 4.7%, '민간단체의 통합체, 예컨대 기업부문이나 자원봉사관련 각종 N.G.O, N.P.O. 등의 연합회 등의 조정' 이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내 자율적인 협의조정기구는 활동터전과 학교, 관련 민간단체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하지만 민간단체의 통합체인 연합회의 조정은 해당 단체의 고유 사업이나 활동목적 등과 상충되어 이해가 대립될 수도 있고, 특히 예산지원을 함으로서 자칫 정부의 개입을 초래하게 되어 소속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도별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2.3%인데 이는 현행 시·도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종합상담실, 청소년유해환경 고발센터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기 각각의 기관은 나름대로 업무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청소년지원센터내에 통합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체가 선정(이 경우 해당 시·도 청소년단체협의회보다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되어야 하며 상근의 기관 책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동시에 사업대상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기관업무의 상관성은 찾아보기 어려워 통합운영의 실리가 없다. 오히려 사회가 다원화되어감에 따라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기관에서 문제의 해결이나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여러 유형의 시설이나 기관이 필요하며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 전문가 집단의 의사결정과 정책대안 개발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의사결정을 거치게 된다. 의사결정은 정책결정을 위한 활동이 시작되어 정책대안을 작성하고 이 중에서 어느 대안을 선택하여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계층이나 집단이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의사결정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에 의한 의사결정(정책델파이 조사결과에 따른)과정인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1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1차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중 상호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를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 9명을 선정, 조사결과를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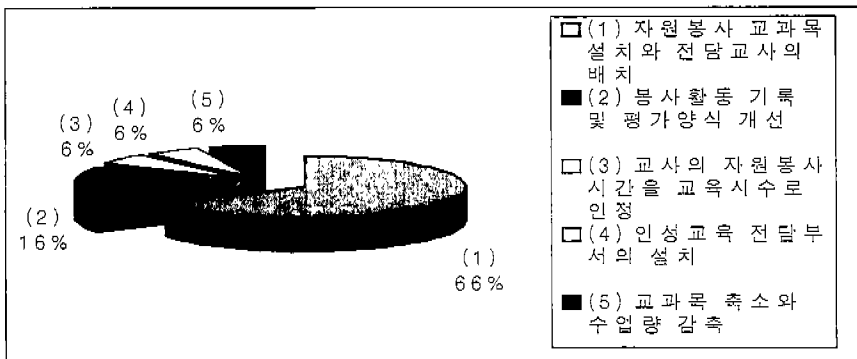
회람 후 전문가 회의를 거쳐 최종 합의된 의견으로 결정하였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의견조정과 항목에 따라 최종적인 우선순위 부여에 초점을 맞추고 주로 1차 조사결과중 정책목표와 현행 봉사활동제도, 정책대안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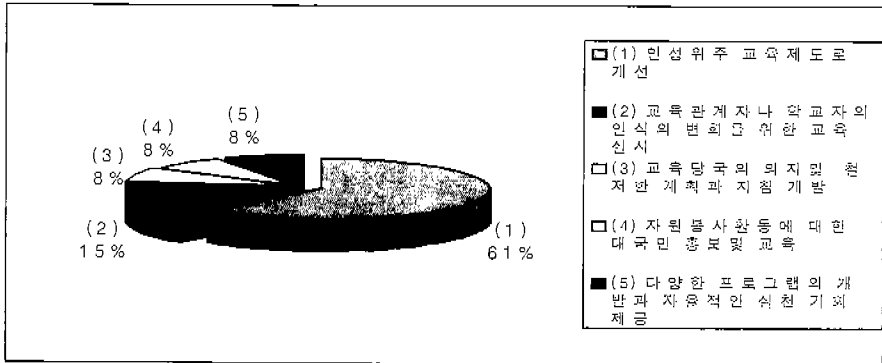
1)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노력

청소년자원봉사 정책목표가 그동안의 학교교육 문제점의 하나인 지식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천중심의 교육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동체의식 함양이나 사회성 발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는데에 있다고 할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목표가 달성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정책목표달성이 회박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45명중 12명)도 몇가지 제도적 장치나 수단이 보완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회의에서는 1차 조사결과에 대한 응답내용을 제도적 장치나 수단과는 별개로 의식개혁(변화)차원의 노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합의된 중요한 제도적 장치나 수단과 인식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그림Ⅳ-1>과 같다. 여기서 제시된 응답항목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으며 나타난 실수와 백분비율은 1차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실수에 대하여 최종 선정내용에 대해 다시 백분비율을 부여하였다.

<그림Ⅳ-1> 보완해야 할 제도적 장치나 수단



〈그림Ⅳ-2〉 인식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



2) 학생봉사활동제도

가) 봉사활동시수적용

최소한의 봉사활동시수를 교육부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도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이 1차 조사결과에서 응답자 44명중 25명(56.8%)으로 나타났고 반대의 입장은 19명(43.2%)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 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찬성의 입장으로 합의되었다. 전문가들의 찬성배경에는 봉사활동시수를 시·도 교육청 자율에 맡기는 경우 각 교육청에서 시수범위(예, 0시간-10, 10시간-15시간 등)를 선택할 때 실시하지도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시수범위를 1시간 이상부터 적용하는 경우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자율적이라고 해도 실시해야 할 폭은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최소한의 봉사활동시수적용'은 봉사활동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책대안	최소한의 봉사활동시수 적용
------	----------------

나) 봉사활동의 고입반영비율과 상급학교 진학성적반영

첫째로 중학생의 봉사활동 고입반영비율에 대하여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모든 고등학교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데에 찬성하였으나 전문가회의에서는 현실적으로 선발고사만으로 고입에 산정하는 시·도가 있어 봉사활동 점수나 고입반영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모든 시·도가 봉사활동을 점수화한 이후에 고입반영비율의 동일 적용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로 봉사활동을 점수화, 상급학교 진학성적에 반영하는 제도에 대해서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주된 이유가 '제도화하기 위한 초기단계에서는 강제성이 필요하며 등급화, 점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였다. 그러나 전문가 회의에서는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지만 점수화하는 자체에는 반대이며, 오히려 봉사활동을 제도화되 졸업필수로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대학이나 사회진출시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대안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모든 시·도에 최소한의 봉사활동시수적용' 이 '모든 시·도에 고입반영비율 동일적용' 으로 귀착되어지지 않는다고는 해도 '상급학교 진학성적이나 사회진출시에 반영'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일치가 되어 최종적으로 '모든 시·도에 최소한의 봉사활동시수 적용' ⇒ '상급학교 진학성적 및 사회진출시 평가에 반영' 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정책대안	1 : 최소한의 봉사활동시수 적용 2 : 상급학교 진학시 성적반영 및 사회진출시 반영
------	--

다) 봉사활동 대상학년과 시수

봉사활동 적용 대상학년과 적정한 시간수는 1차 조사와 동일하게 '현행대로 학교 교급별로 모든 학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로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되었으며 봉사활동 적정한 시간수로는 20시간이상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최대 40시간까지가 제시되었다.



정책대안	1 : 봉사활동시간은 모든 학년에게 동일적용 2 : 최소한의 봉사활동 적정시간 수 20시간
------	---

라) 학교차원에서 우선 도입·시행되어야 할 제도나 개선과제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차원에서 도입·시행되어야 할 새로운 제도나 또한 기존의 운영방법상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 3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1차 조사결과에 다소 보완조정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1차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전담교사 확보'는 순위변동은 없었으나 확보 및 운영방법에 있어 미국의 fellow제도를 도입, 특정교사를 봉사학습방법에 대해 연수케 한 후 이 교사가 학교내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재 교육하여 궁극적으로 학교내 모든 교과교사가 해당 과목을 봉사학습차원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교과목의 통합함으로 학과수업시간이 축소되거나 줄어드는 경우의 해당교사가 전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두번째 비중을 차지했던 '기존 교과목과의 연계 또는 봉사과목을 설치'에 대해서는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기존 교과목에 연계시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며, 학습자의 요구(need)에 맞는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개발이 학교차원에서, 도입·시행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결론지어졌다.



정책대안	1 : 전담교사나 지도자 확보 2 : 봉사활동을 기존 교과목과 연계하여 추진 3 :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

마) 학생봉사활동이 성인자원봉사활동과 차별성을 갖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노력
 학생봉사활동이 성인자원봉사활동과 다른 점은 '봉사학습 및 교육차원의 활동'이라는 점에 있다는 것은 이미 1차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이러한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나 노력에 대해

또다른 의견이나 기존의 응답항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별다른 이견없이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교육, 준비, 실행, 평가의 체계적 방법과 활동 상황에 대한 피드백으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일치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확보나 또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여건조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학교의 경우 전담교사가, 지역사회의 경우는 전담지도자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정책대안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교육, 준비, 실행, 평가의 체계적 방법과 활동상황에 대한 피드백으로 교육적 조치 필요
------	---

3) 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가) 봉사활동 경력을 대입사정에 반영하는 견해

중·고등학교의 봉사활동 경력을 모든 대학의 대학입학사정에 최소한 반영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1차 델파이 조사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로 합의되었다. 다만 각 대학에서 봉사활동의 양적인 면(시간 등)과 질적인 면(봉사활동 내용의 전공학과 관련성, 내용, 봉사학습의 정도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봉사활동의 성격, 유형, 평가기준의 정립이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책대안	대학의 자율에 맡기되 봉사활동 경력이 대학에 반영되어 질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성격, 유형, 평가기준 등을 정립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 교육, 준비, 실행, 평가의 체계적 방법과 활동상황에 대한 피드백으로 교육적 조치 필요
------	---

나) 학생봉사활동 제도정착을 위한 시급한 정책수단 5가지

학생봉사활동 제도정착을 위하여 정부가 마련하여야 할 시급한 정책수단으로서 1차 델파이 조사에서와는 달리 자원봉사관련 부처간의 연계체계확립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내 전담교사 배치와 인센티브 부여’가 2순위로 한 단계 낮아졌으며, 3순위가 ‘기존 교과목에 봉사활동 연계추진’,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전담기관 설치’가 4순위로, 마지막으로 ‘수요처 및 전담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의 순서로 의견이 최종합의되었다.



정책수단	1 : 정부 부처간 연계체계 2 : 학교내 전담교사배치와 인센티브 부여 3 : 교과목에 봉사활동 연계추진 4 : 지역내 봉사활동 전담기관 설치 5 : 수요처 및 전담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	---

다) 학생봉사활동 여건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기관

학생봉사활동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 특정 기관보다는 지역사회내 모든 기관이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최소한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1차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시·군·구 단위의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라)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역할

자원봉사센터는 서비스제공 대상에 따라 청소년 자원봉사 관련업무만을 전담하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센터로 구분되어 질 수 있고, 서비스 대상지역(행정구역)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 회의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재정립하여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1차 조사결과를 재 분류하였다. 즉, 중앙차원의 센터와 시·도 단위 센터, 시·군·구 단위센터로 분류하였을 때, 먼저 중앙차원의 기능과 역할은 조사·연구,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전국 센터들에 대한 지원역할이 강조되었고, 시·도 단위에서는 관내 자원봉사 관련 정보제공, 지도자의 양성과 배치, 자원의 확

보와 배분 등의 업무를, 시·군·구 차원에서의 센터는 수요자(봉사를 필요로 하는 자원)와 공급자(봉사제공자)간의 직접적인 연결 서비스 측면에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재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정책대안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정립)	1 : 중앙 청소년자원봉사센터 - 조사연구, 프로그램개발 보급, 전산망 구축, 제도개발 등 2 :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 광역의 관련 정보제공, 수요기관의 개발·보급, 소양교육, 자원봉사 지도자양성, 프로그램 시범운영·보급 3 :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 공급자와 수요자 연결, 소양교육, 수요기관의 관리, 봉사자 관리 등
-------------------------------------	---

다) 봉사활동 관련 포상

학생봉사활동의 동기강화를 위하여 포상이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포상의 적정 수준, 선정기준,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심사와 평가가 문제시 될 수 있다. 전문가 회의에서 포상의 적정 수준은 포상대상자들이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금전적인 포상이나 상급학교 진학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은 봉사활동의 본질과는 위배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정과 격려차원의 표창장(봉사상)이 가장 무난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아울러 포상 대상자의 평가 또는 심사기관으로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독자적으로 평가·심사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봉사활동 담당교사와 센터가 공동으로 심사하여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표창의 등급 역시 학교장 표창, 교육감 표창, 교육부장관 표창의 등급이나 또는 각 센터의 소장 표창, 시·도지사 표창, 문화체육부장관 표창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표창외에 '자원봉사 선진지 연수 및 시찰의 기회제공', 봉사활동을 초급, 중급, 고급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금, 은, 동메달을 수여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한편 포상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는 별도의 평가양식을 개발하여 통일되게

적용하되 봉사학습의 달성정도, 참여시간과 내용 등을 균형있게 평가하여야 한다는데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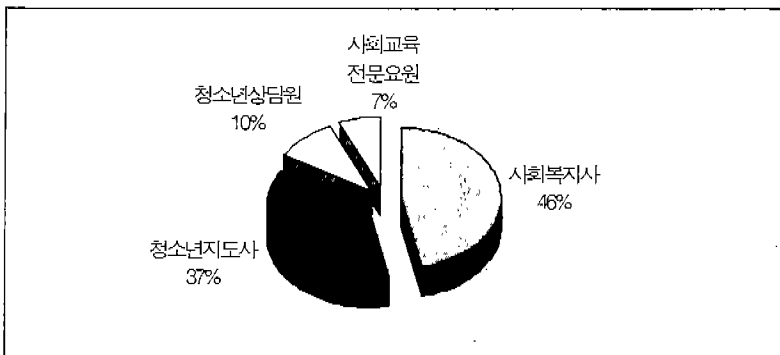


봉사활동 동기부여 방안	1. 자원봉사 포상 : 표창장 수여 - 학교장→교육감→교육부 장관 - 센터소장→시·도지사→문화체육부 장관 2. 선정·추천기관 : 학교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3. 선정기준 : 봉사활동의 양과 질(평가양식) - 봉사학습의 달성정도, 참여시간, 참여내용 등
-------------------------	--

바) 학교내 자원봉사 전담교사 배치와 자격

학교내에 청소년의 봉사활동과 수련 및 단체활동을 전담하는 교사를 배치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최종 정리되었으며 이들 교사들에게 필요한 자격으로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단기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조정되었고 동시에 교사들을 위한 일반연수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수과정으로 제시되었다.

〈그림Ⅳ-3〉 전담교사에게 필요한 자격



【전담교사에게 필요한 연수】



연수과정	1. 일반연수(봉사학습, 지도 및 관리) 2. 사회복지 관련 교육연수(국립사회복지연수원) 3. 청소년 관련 보수교육(청소년지도사과정)
------	--

사) 봉사활동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사후 필요한 제도적 장치

학생봉사활동은 성인자원봉사활동과는 달리 활동과정에서 위험이 뒤따를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에 대비한 사전 또는 재산상의 피해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사후조치로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는 ‘자원봉사 보험제도’의 도입적용이 필요’하다는 데에 1차 조사결과와 전문가 회의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이 경우 도입되는 자원봉사제도는 사적(私的)보험보다는 공적(公的)보험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재해의 유형에 따라 보상액수가 차등 지급되어야 하며 가입자 비용부담 역시 최소한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정책대안	자원봉사 공적 보험제도의 도입적용
------	--------------------

아) 봉사활동 인정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이나 장치

봉사활동에 대한 인정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장치에 대해서는 전문가 회의에서도 1차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전문가 집단이나 관련 위원회에서 봉사활동 지침이 되는 준거틀(활동내용, 인정 프로그램의 유형등이 제시되어 있는 봉사활동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발간 배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침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선 학교나 기관에 배포·보급함으로써 교사, 학부모, 청소년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자) 비행청소년이나 문제청소년에 대한 봉사활동주관 기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비행 청소년이나 학교에서 문제 청소년으로 지목되어 사회봉사를 행하여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봉사활동은 일반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에 비하여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봉사활동 실시를 위하여 적절한 기관으로서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가 선정되었고, 이들 청소년을 지도할 필요인력으로서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지도사’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비행청소년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보호관찰소나 문제청소년들에 대한 사회봉사 징계를 내리는 학교에서는 비교적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있는 지역사회 청소년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이들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될 때 실효성이 있으리라 본다.



사회봉사 주관기관	1. 봉사활동 주관기관 - 청소년자원봉사센터 -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 2. 봉사활동 전달지도자 - 사회복지사(1) - 청소년지도사(2)
--------------	--

차) 학생봉사활동 중단기 정책대안

학생봉사활동 제도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다양한 노력들이 요청되는데 특히 정부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어떠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데 있어 정책비용과 정책효과의 측면, 정책의 효율성, 정책집행의 중복성 배제,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정책모형 개발을 위한 다양한 중단기 대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추출된 각 대안들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중단기 정책대안들은 아래와 같다.



중단기 정책대안	1. 봉사활동 기본여건 조성 - 봉사활동 지침 마련 -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전산 정보망 구축·공유 2. 전담교사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3. 국무총리 산하에 정책협의기구 설치 - 봉사활동 협의회 설치, 정부내 주관부처 4. 자원봉사전담기관 확대 설치 - 행정단위별, 분야별 5. 자원봉사법안 제정 - 보험, 포상, 처우, 세제혜택 등
---------------------	--

3. 청소년자원봉사 정책모형

모형(model)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쓰이고 있으나 대체로 ‘현실의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정책을 다루는데에 있어서 모형은 주로 정책대안의 탐색을 돕고 정책대안의 결과예측을 가능케 해주는데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하려고 하면 정책대안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은 모두 모형에 포함시켜야 한다. 결과적으로 모형의 역할은 첫째로, 정책대안의 탐색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둘째는,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결과에서 제시된 정책대안들을 중심으로 정책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 통제, 조작함으로써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최적의 정책모형을 제시하고, 정책지침으로서 이미 확정되어 있거나 추가로 개발하여야 할 정책내용들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제시되어야 할 표준화된 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 SOP)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 정책집행(Pressman과 Wildavsky는 정책집행을 '목표설정과 목표달성활동 사이의 상호작용 또는 바라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과연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능력'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허 범은 '정책과정에서 결정된 정책대안으로서 정책목적이나 정책취지를 실제적으로 구체화, 행동화하는 과정' 이라고 한다)은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process)을 의미하며 정책의 내용(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을 실현시키는 과정은 일련의 활동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특정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조직들은 다양하다. 공식적으로는 집행책임을 맡고 있는 조직이 중앙정부의 어느 부처인 경우에 실제의 집행은 지방정부나 또는 민간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지방정부나 민간기관(개인이나 집단)을 흔히 중간매개집단(intermediary group)이라고 부른다.

중간매개집단은 공식적 집행자로부터 정책책임을 위임받아서 정책집행을 돕는 다는 측면에서, 동시에 정책의 성공적 달성요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에 중간매개집단이 지나치게 다양하거나 많을 때에는 그만큼 집행체계(implementation system)는 조직들이 복잡하게 구성되게 되고, 그 구조가 복잡할수록 집행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는데, 첫번째는 조직들간에 협조와 조정이 어려워져 집행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를 들 수 있고, 둘째로는 수직적으로 보아 집행조직들간의 명령체제가 약하고 또한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지연되고 정책내용이 집행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의 경우는 권한과 지위면에서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행정부내에서도 동일한 지위에 있는 부처들간의 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의 문제만 하더라도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정책대상을 달리 하면서 담당하고 있는데 청소년자원봉사 정책을 집행하려면 이들이 서로 협조하고 집행하려는 구체적인 정책수단 등의 정책내용에 대해서 공통적인 보조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부처간의 이해관계로 협조와 조정이 어려워 결국 집행이 중단되거나 정책목표 달성은 그만큼 지연되기도 한다.

둘째의 경우는 이론상으로 보면 명령체계상 상·하관계에 있는 중앙·지방·민간기관 사이에 실제상으로 일사분란한 명령계통이 없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가 확립되어 있고 민간의 자율성이 확립되어있는 경우에 더욱 심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정책과 정책지침이 집행의 현장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감소하게 된다. 또다른 한편 중앙정부에서 집행을 의뢰해도 지방정부가 공개적으로나 비 공개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집행은 일어나지 않기도 하며 중간에 개입되어 있는 지방정부나 민간단체, 집단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들이 각각 집행상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s) 하나 하나가 거부점이 되어 집행의 성공 가능성은 크게 약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또 하나의 내용은 이러한 중간매개집단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하여 중간매개집단을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거시적 정책 집행체계를 조망하고 최적의 정책집행 틀을 제시하여 지방정부나 일선 집행기관의 정책 순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가. 대안의 탐색

앞의 델파이 조사결과와 전문가회의에서 합의·제시된 정책대안들을 요약하면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정책수단과 중단기 정책대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비교하여 보면 <표Ⅳ-24>와 같다.

<표Ⅳ-24>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정책수단과 중단기 정책대안

구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정책수단	중단기 정책대안
정 책 내 용	1. 학교내 전담교사 배치와 인센티브 부여 2. 기존 학과목에 봉사활동 연계추진 3. 지역사회내 자원봉사 전담기관 설치 4. 정부 부처간 연계체계 확립 5. 수요처 및 전담기관에 예산지원	1. 봉사활동 기본적 요건 개발 ○봉사활동 지침 마련 ○지도자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산 정보망 구축·공유 2. 전담교사제 도입 ○인센티브 부여 3. 국무총리 산하에 정책협의기구 설치 ○봉사활동 협의회 설치, 정부내 주관 부처지정 4. 자원봉사전담기구 설치 ○행정단위별, 분야별 5. 자원봉사법안 제정 ○보험, 포상, 처우, 세제혜택 등

위의 <표Ⅳ-24>에서 보면,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정책수단이나 중단기 정책대안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공통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호 공통성을 고려하여 중복되지 않은 내용들을 도출,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담교사제의 도입

전담교사는 학교내에 봉사활동만을 전담하는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인데 이는 신규로 교사인력을 확보하여 전담시키는 방안과 교과목의 통폐합 등을 통해 기존의 인력을 조정하여 전담케 하는 방안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첫번째

의 신규 확보를 통한 전담배치의 경우에는 우선 소요 인력의 규모와 이에 따른 예산의 규모, 재원확보의 가능성을 살펴 보아야 한다. 1997년 4월 현재 전국의 중·고등학교의 숫자는 총 4,612개교에 달하고 있다(교육통계연보, 1997.). 즉, 중·고등학교에 전담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선 4,612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교사 1인당 초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20,000,000원(공무원 보수규정에 각종 수당포함할 경우의 액수임)이 소요되며 총 4,612명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연간 약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둘째로 교과목의 통폐합으로 인한 수업시간 축소와 이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를 생각할 수 있다. 중학교의 경우 가정, 공업, 기술, 산업 등의 과목중 공업과 기술이 합쳐지고 공업과 기술이 다시 산업으로 조정되긴 하였으나 교과 시간수에 있어서는 가정, 공업, 기술, 산업 등의 시간 수가 주당 총 5시간이 현재 4시간으로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어 실제적인 시간 수는 별차이가 없다. 그리고 국사와 사회의 경우도 두과목이 합쳐지긴 하였으나 두과목의 당초 시간수인 각각의 2시간씩 4시간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시간 수에 있어서는 전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일부 교과목의 통폐합 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사들의 유휴시간을 봉사활동에 투입하게 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외에 기존의 교련 담당교사들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교련 담당교사들이 교련과목의 폐지 이후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관할 교육청에서는 이들 교사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교과교사로 충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전담교사제 도입방법은 신규확보나 기존의 교사로 하여금 전담케 하는 방안으로는 부적절하며 다른 대체방안이 새로이 검토되어야 한다.

2) 기존 학과목의 봉사활동 연계

봉사활동을 모든 학과목과 연계시켜 활동케 하는 방법은 봉사학습의 개념으로서 미국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복지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도덕과 사회과목 등에서 복지활동을 실천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처럼 봉사활동을 봉사학습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교과과정의 전면적 개편이 요구되며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체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일본의 복지교육처럼 일정 교과목에 접목시켜 실시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 경우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 중학교의 경우 도덕과 사회과목(각각 연간 68시간)에서 봉사활동과 관련된 단원을 도출하여 연간 10시간 정도씩 봉사활동실천이나 봉사학습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6차 교과과정 개정 시안에서 이미 제시하였던 '생활과 직업' (중학교 3학년에게만 해당 주당 3시간 배정하여 연간 102시간 배정)과목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와 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일정시간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운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학과목과 연계되어진다고 할 때, 교과목의 단원구성이 재편성되어야 하고 담당 교과교사의 봉사학습 실천이나 봉사활동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과과정의 개정작업과 담당교사의 교육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겠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전체 교과목에 봉사활동의 단원을 설정하여 실시한다는 것은 우선 교과내용을 전면적으로 재 구성하여야 한다는 무리가 따르고 동시에 모든 교과교사를 봉사학습 지도교사로 재 교육시켜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다른 한편 일부 교과목(예컨대 사회나 도덕 등)에 봉사활동 단원을 재 구성하여 교과지식과 실천활동을 병행한다고 할 때 학습의 효과는 극대화되고 체험중심의 학습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자칫 한정된 영역에서의 봉사활동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기존의 교과목과 연계추진은 봉사활동 운영방법상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 하겠으나 전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전담기관 설치

지역사회내에서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실로 다양하다.

일부 교회나 사찰 등을 비롯한 종교기관, 지역사회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수련원, 수련관, 공부방 등의 수련실), 자원봉사관련 민간단체,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청소년자원봉사센터등이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전담하는

기관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유일한 기관이다. 기타 기관이나 단체는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청소년자원봉사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거나 여러 가지 목적사업중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시·도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부문의 사업을 행하면서 그 중에 청소년자원봉사업무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기관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청소년자원봉사 전담기관이라고 할 때는 사업의 주 목적이 청소년의 봉사활동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지도자의 연수나 관리, 활동터전과 활동거리 등 봉사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사업수행을 위해 청소년지도 관련 유자격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사업수행을 위해 일정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이러한 전담기관은 제Ⅱ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문화체육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시·도 단위에 설치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5개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 내무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시·도나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가 성인대상 자원봉사활동과 병행하여 청소년의 봉사활동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때, 청소년지도 관련 유자격자를 고용하여 이들 지도자들이 학생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학습과 인성개발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청소년자원봉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내무부의 설치계획에 의하면 1997년도까지는 총 74개소를 설치하고 1998년도에도 50개소를 신규설치함으로서 1998년까지는 전국에 총 124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다. 즉, 1998년까지는 전국 시·군·구의 50%수준까지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볼 때 2000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설치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을 감안할 때 자원봉사센터의 청소년자원봉사 전담기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설치시 센터에 충원되는 인력을 선발할 때는 위에서 언급한 최소한의 청소년지도 관련 유자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4) 정부 부처간 연계체계 확립

현재 청소년자원봉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는 교육부를 비롯하여 문화체육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5개 부

치라고 할 수 있다. 이들 5개 부처는 나름대로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를 두고 예산을 확보하여 자원봉사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체계를 보면 교육부의 경우는 중등장학관실에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중등장학과에서 봉사활동업무를 담당한다.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교육부(중등장학관실)와 시·도 교육청의 업무관계는 주로 생활지도담당장학관이나 담당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통하여 학생봉사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대책 등을 시달하거나 학생생활 중점지도계획 및 학생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문화체육부는 청소년정책실의 청소년기획과에서 청소년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시·도 단위에는 문화체육과나 청소년과 등에서 일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해당 과에서는 중앙 부처의 경우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중앙 센터)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을, 지방의 경우 해당 시·도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역시 중앙을 제외한(중앙의 경우 전액 국고보조로 지원) 14개 시·도에 청소년육성기금과 지방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개소당 연간 운영비 1억여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내무부의 경우는 사회진흥과에서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도 단위 역시 사회진흥과 등에서 담당하고 시·군·구 단위에서는 사회진흥계 또는 자원봉사계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예산지원은 내무부의 특별교부세를 주 재원으로하여 1차년도인 1996년에는 개소당 5,000만원과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비, 2차년도인 1997년도에는 교부세 재원으로 하여 국고 보조를 개소당 1,000-4,000만원, 지방비50%이상의 부담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 보건복지부의 경우, 복지자원과에서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국고의 지원을 받아 자체의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며 동시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부인 14개 시·도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에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을 사회봉사명령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의 운영은 시·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봉사명령을 전담하기 위한 별도의 센터 운영은 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는 나름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추진과정에서 정책의 중복현상이 나타나고 업무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비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관하여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나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보제공, 봉사활동거리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학교와 이들 센터간의 공식적인 협조관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각 센터에서 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학생 개개인이 또는 학교의 담당교사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즉 지역별 센터와 교육청, 학교가 봉사활동에 관한 수급정보를 상호 긴밀히 공유하고 제공될때 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봉사활동거리와 적절한 시기, 장소에 따라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 센터간의 업무중복과 비 효율성을 예로 든다면 우선 설치지역의 중복성이다. 동일한 지역에 자원봉사사업을 수행하는 센터가 집중되어 설치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다. 이는 자원봉사센터 설치의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거나 부처간의 상호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러한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유형별, 지역별, 역할별로 설치기준이 부처간에 정책적인 협의를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의 상호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또다른 측면으로는 징계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봉사활동이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학교나 보호관찰소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기관 대부분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대상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복귀하도록 하거나 비행재발을 예방하기위한 수단으로 봉사활동과정을 중시한다기 보다는 봉사활동 터전에 배치하고 일정시간만 이수하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루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이들 청소년들에게는 봉사활동 그 자체가 하나의 치료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활동계획에서부터 활동과정, 활동종료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대상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이나 보호관찰소의 담당자들은 봉사활동을 전담하는 기관을 통하여 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자원봉사기관 등과 관계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위의 모든 것들이 상호관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역시 정책을 결정하는 상위 부처간의 사전협의, 조정역할이 전제되어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5) 수요처 및 전담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봉사활동 수요처라 함은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거리를 제공하는 시설들을 말한다. 이러한 수요처는 흔히 봉사활동터전이라고 불리우는데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 도서관, 박물관, 공공기관 등과 같은 시설중심의 활동터전과 지역사회나 자연환경 등 공간중심의 활동터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중심의 활동터전은 성인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은 봉사시간의 제약이나 지속성, 활동터전에서 요구되는 활동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학생봉사활동을 기피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활동터전들이 학생봉사활동기관으로 개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혜택을 주거나 사회적 인식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가 수요처에 대한 예산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활동터전을 학생들의 봉사활동 장으로서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적절한 봉사활동거리가 제공되고 지도하기 위하여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활동터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 그 자체도 문제이겠지만 예산지원의 기준과 지원규모, 지출용도 등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활동터전을 봉사활동 교육의 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금전적인 예산지원 보다는 오히려 봉사활동 수요인원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나 우수 활동터전에 대하여 자원봉사 모범기관으로 지정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만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예컨대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의 제작이나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은 봉사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점에서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학교나 센터 또는 학생 개인의 부담형태를 빌어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전담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현재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센터,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나 청소년자원봉사업무만을 전담하기 위하여 신규로 설치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필요한 사업운영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선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운영체의 성격도 비영리 단체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자원봉사 정책결정기구의 설치

자원봉사와 관련되는 정부의 부처와 각 부처의 정책내용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동시에 관련 부처가 산재되어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업무의 중복성,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각 부처의 정책결정이 부처 상호간 사전조정없이 추진됨에 따라 예산의 낭비까지 초래하게 되는데 대체로 정부의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은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자원봉사 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원봉사 전반에 걸쳐 각 부처에서 입안한 정부 정책들이 최종적으로 심의·조정·결정되어 이를 다시 해당 부처에서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일선 집행기관에 시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은 자원봉사와 관련되는 정부 부처로서 교육부를 비롯하여 문화체육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정부 제2장관실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부처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기타 선임직으로 언론, 학계, 전국 규모의 실무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7) 봉사활동 기본적 여건(software)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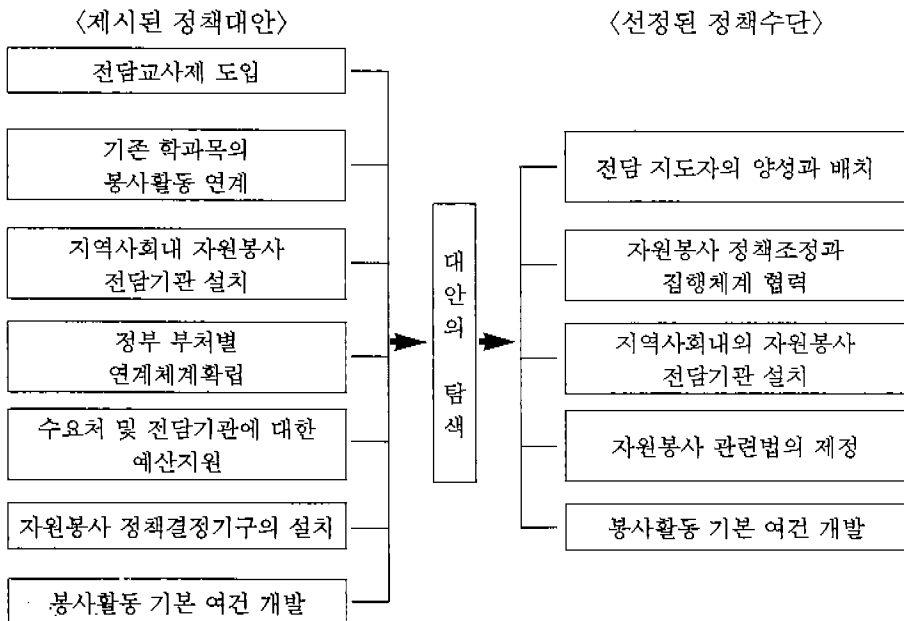
봉사활동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다양한 활동터전과 활동거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제시된 활동터전과 활동거리는 봉사활동을 규정짓는 기본적인 지침이 되는데 일선 기관의 정책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가장 기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내의 활동터전의 유형과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거리의 유형들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활동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이나 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은 대체로 활동터전편람이나 활동프로그램집의 형태로, 때로는 시청각 교재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를 통한 통신의 형태로 제공되기도 한다. 결국 활동터전과 활동거리의 개발이 봉사활동 활성화의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개발의 주체는 역시 교육부와 교육청, 각급학교, 관련 연구기관이 되며 지역사회내 잠재적인 가용자원이나 자원봉사센터 등은 지원체계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활동터전이나 활동거리의 개발과 보급은 전문연구기관이 일선 자원봉사 관련 집행기관들의 입장과 실천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운영상의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고 본

다. 다만 봉사학습 차원에서의 활동터전과 거리의 개발, 특히 학교의 교과목과 연계시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과과정 담당자와 교사, 현장 실천가, 개발되어야 할 부문의 활동터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개발하여 봉사활동 연구시범학교 등에 시범적용을 거쳐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활동터전의 개발과 활동거리의 개발은 교육부의 교과과정 담당 장학사와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연구시범학교의 교사, 활동터전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개발하여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발된 자료들은 매뉴얼화하여 일선 학교나 자원봉사센터 등에 보급하고 컴퓨터의 통신망이나 CD-ROM을 통하여 학교나 가정에 보급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나) 대안의 추진방법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수단과 대안들에 대한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정책대안을 선정하여 재 정리하면 <그림Ⅳ-4>와 같다.

<그림Ⅳ-4> 최적의 정책 대안



첫째, 청소년자원봉사 전임지도자의 양성과 배치이다.

앞서 제시한 전담교사제 도입은 학교내 전담교사를 신규로 임용하는 방안으로 정책비용부담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 즉 신규 임용에 따른 인건비는 연간 1,0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채용확보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반면에 현재의 시·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 설치하거나 현행의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계속 확대 설치하는 경우 이들 센터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해당 자치단체내 학생봉사활동을 지도하는 전임지도자로 양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하여 개소당 연간 1억원으로 계상할 경우, 총 271개 자치단체(광역 16, 기초 255)에 271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교사의 신규임용에 소요되는 예산의 25%수준밖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이다. 따라서 전담교사제의 도입보다는 일차적으로 행정단위별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센터내의 전임지도자로 하여금 청소년봉사활동을 전담하게 방안을 최적의 정책대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임지도자라 함은 청소년자원봉사에 필요한 지도능력(지식과 기술)을 갖추기 위해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그가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청소년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준비 계획하고, 활동현장에서 청소년자원봉사자를 지도 관리하며, 활동내용과 과정을 조정하고, 활동결과를 평가·기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임지도자의 양성과 배치를 위한 추진방법을 보면 <그림Ⅶ-5>에서와 같이 우선 양성대상으로 기존의 학교교사나 자원봉사센터의 종사자, 청소년지도사와 사회복지사 등을 우선적으로 상정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가용자원은 본 연구진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31,180명('97년 4월 기준으로 중·고교 봉사활동 담당 교사 4,612명, '97년 10월 현재 청소년지도사 2,574명, 사회복지사 23,994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이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문화를 꾀하기는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기업체나 활동터전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에 대하여도 전임지도자 과정을 개설하여 연수를 통한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에 전문성이 없이 자원봉사 관련기관, 예컨대, 학교나 민간기관등에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집단으로는 대학생이나 학부모, 직장인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청소년자원봉사를 지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자원지도자라고 칭할 수 있다. 민간기관이나 센터, 학교 등 자원봉사와 관련되는 각기관에서는 이들 인적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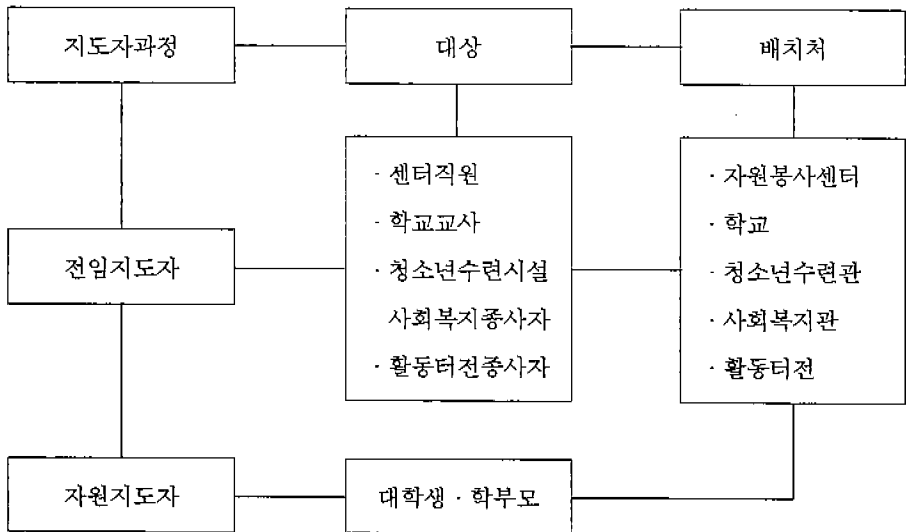
전임지도자의 효과적인 확보와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나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활동터전의 종사자중 청소년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전임지도자 과정을 이수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임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실비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지도자의 양성기관이 필요한데 전임지도자 연수과정 대상자는 대부분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다양한 양성기관에서 상이한 교육내용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중앙(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시·도 단위로 전임지도자 교수요원대상자를 중앙에서 일정기간 교육실시 후, 이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임지도자를 양성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그리고 자원지도자 양성의 경우, 자원지도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해당 기관들의 전임지도자들이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다.

연수기간으로는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나 대한적십자사에서 자원봉사 전임지도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연수시간을 대체로 60시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교사의 일반연수 시간과 동일하다. 따라서 학교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과정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일반연수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많은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연수 교과과정으로는 최소한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특성, 청소년자원봉사정책, 외국의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자의 자질과 지도력, 청소년자원봉사의 실제와 프로그램 운영(활동거리의 기획, 준비, 실천, 평가 등), 지역사회와 활동터전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부분, 현장학습과 실습 부분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실습평가서 등의 활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림 IV -5〉 자원봉사지도자의 양성과 배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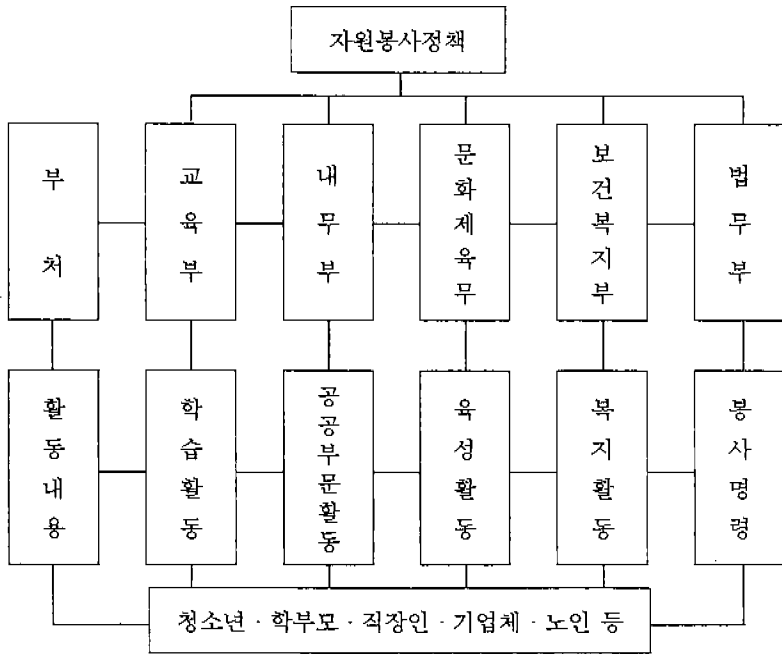


둘째, 자원봉사 정책조정과 집행체계의 협력이다.

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봉사정책이든, 청소년의 자원봉사정책이든 자원봉사와 관련되는 정책은 국가 차원의 거시정책수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IV-6〉에서와 같이 국가의 자원봉사에 관한 거시정책속에서 하위의 자원봉사정책이 기능별(환경, 보건, 복지, 문화 등)로, 대상별(주부, 직장인, 청소년, 노인 등)로 구분되어 해당 부처에서 운영될 때 효율성이 제고된다.

따라서 유관 부처가 자원봉사와 관련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상호 조정하고 최종적인 심의를 거쳐 정책이 결정 조정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한데 수평적 위치에 있는 각 부처를 특정 부처가 중심이 되어 조정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결과적으로 수직적인 관계에 의하여 정책이 조정되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볼 때 부처간 정책조정기능이 있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림Ⅳ-6〉 유관 부처 협력체계도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에 한하는 자원봉사정책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12조의 근거규정으로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필요한 조정기능을 보완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우선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원장관, 통일원장관, 문화체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청소년과 관련되는 외무·내무·법무·국방·교육·농림수산·정보통신·환경·보건복지·노동부 장관과 과학기술처·공보처 장관, 정부 제2장관 등 13개 부처장관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있고, 위촉직위원으로 교육, 노동, 법조, 경제, 체육, 청소년, 사회복지 및 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13명의 민간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자원봉사와 관련되는 정부 부처 장관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상기 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심의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년육성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둘째, 중·장기 청소년육성정책방향의 설정

셋째, 청소년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넷째,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다섯째,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자원봉사정책은 일차적으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에서는 먼저 청소년자원봉사정책의 방향과 제도, 추진되어야 할 정책의 내용 등을 사전에 관계기관 상호간에 검토하고 협조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상정하면 최소한 부처간에 합의된 정책결정은 도출될 수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집행기관의 협력을 들 수 있는데 상기에서와 같이 결정된 정책은 다양한 집행기관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다단계의 집행기관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집행기관과 여러 단계의 집행기관을 거쳐 정책이 집행됨으로써 집행감독의 소홀과 책임소재의 불분명, 집행의 지연, 정책효과의 불투명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책효과를 최단의 기간으로 하여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서는 복선(復線)의 다단계 집행기관을 가능한 줄이는 작업이 필요한데, 자원봉사의 경우, 자발성이라고 하는 활동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친 행정조직의 개입은 오히려 활동자체를 위축시키거나 경직되게 하여 비효율을 초래함으로 가능한 민간기관들에 의하여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다양한 집행기관은 가능한 기능과 역할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각각의 기관이 독특한 영역을 확보하여 독자성을 갖도록 하되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연계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점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자원봉사정책의 집행기관은 크게 두가지 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행정조직을 통한 집행라인과 다른 하나는 민간기관에 의한 집행라인(line)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행정조직으로는 문화체육부의 경우 시·도 단위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현행의 청소년과나 가정복지과, 문화관광과 등에서 전담하여야 하며 시·군·구 단위에서는 사회진흥과, 사회복지과(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은 자치단체에 따라 각 부서명이 상이하거나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예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선 행정기관의 경우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임)등에서 자원봉사업무를 상호지원,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민간기관의 집행기관체계로는 중앙차원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현행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시·도단위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시·군·구 청소년자원봉사센터(현재로는 청소년수련기관이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집행체계로서의 각 라인(line)들은 다른 부처의 자원봉사 관련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라인들, 예컨대 교육부의 교육행정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내부부의 행정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도의 사회진흥과나 보건복지부 라인의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등과 상호협력체계유지를 필요로 하며, 민간기관의 경우 청소년자원봉사센터나 시·도 자원봉사센터, 시·도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상호간의 협력체계,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상호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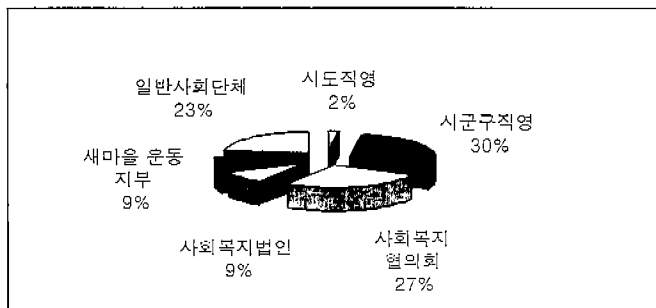
셋째,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전담기구의 설치이다.

지역사회내에서 자원봉사업무만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는 문화체육부의 지원으로 전국 15개 시·도에 1개소씩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내부부의 지원으로 설치된 시·도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각 시·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를 들 수 있다. 이중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뿐이다. 그외의 기관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자원봉사센터만으로는 청소년자원봉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수적으로나 종사하고 있는 인력에 비추어 볼 때 역부족이다. 따라서 위의 두가지 유형의 기관들이 청소년자원봉사업무에 대하여 참여하고자 하는지 여부와 실시하고 있는 사업,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와 협력하여야 할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전담기구로서의 가능성을 도출해 내고 동시에 이들 기관에 어떠한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간단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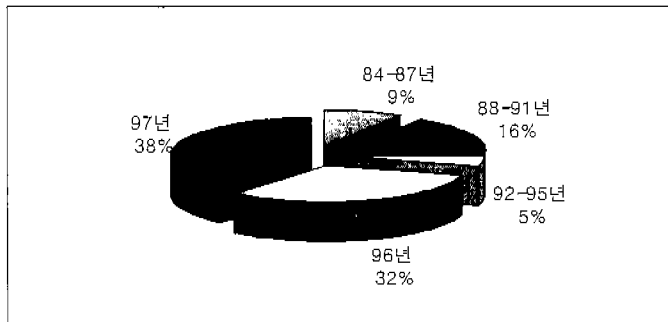
조사대상으로는 시·도와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를 대상으로 56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지에 의한 조사를 실시(조사기간: '97. 10. 17-10.30.)하였는데 이 중 총44개소가 설문에 응답하여 79%의 회수율을 보였다. 여기서는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센터의 운영형태를 보면 위탁형태가 30개소로 68.2%를 차지하고 있고, 반면에 직영이 14개소(시·도직영 2.3%, 시·군·구직영 29.5%)로 31.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림Ⅳ-7>에서와 같이 위탁의 경우 사회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로 부터, 기타의 사회복지법인이나 새마을 운동지부, 일반사회단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설치년도는 <그림Ⅳ-8>에서처럼 대체로 '84년부터 설치되었으나 '96년과 '97년사이에 31개소가 설치되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에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초기의 센터는 대부분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한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이고, '96년과 '97년에 설치된 센터는 주로 자치단체가 설치한 시·도 자원봉사센터나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임을 알 수 있다.

<그림Ⅳ-7> 운영주체별 분포현황



〈그림Ⅳ-8〉 설치년도



이들 센터의 운영예산은 대부분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전체의 93.2%, 무응답 3개소로 6.8%)연간예산의 규모는 3천만원 이하가 12개소로 27%를, 3천만원 이상이 29개소로 70%(이중 9천만원 이상이 12개소이며 무응답이 3개소) 차지하고 있어 인건비와 사업비를 고려할 때 대체로 영세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센터들중에 '96년도에 개소한 26개 센터들의 경우 청소년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업(청소년자원봉사 지도교사 교육)을 수행한 센터는 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97년 사업계획중에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관련 사업으로 방학중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센터가 13개소, 봉사활동 캠프 실시 6개소, 일상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6개소, 청소년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12개소, 자원봉사 수요처 제공 4개소 등이 중복 응답하였고, 전혀 실시하지 않은 센터는 2개소에 불과하여 전체의 95%이상이 청소년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센터가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 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을 받은적이 있다'가 15개소로 34%, '정보제공을 받은 적이 없다'가 27개소로 61%로 나타나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협력관계가 비교적 약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이들 센터와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원한다'가 38개소로 86.4%를 나타냈고 '원하지 않는다'는 4개소로 9.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이들 센터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것임을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의 종류로는 자원봉사에 관한 각종 자료 및 정보교환이 총 65개의 응답사례중에 25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업무분담 및 연계체계 구축이 각각 19개 기관으로 29%씩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업무분담 및 연계체계의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들로는 지역센터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대규모 행사에 대한 공동기획과 실행, 자원봉사모집과 교육 등의 상호 역할관계 조정, 수요처 제공 및 지도자 교육, 정기적인 실무자 간담회 개최 등이다.

이상에서 볼 때 지역사회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나름대로 청소년 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전체의 95%),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적은 34%에 불과한 반면 이들 센터들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협력체계 구축을 원하고 있으며(86.4%), 협력의 내용으로 각종 자료나 정보의 교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사업의 실시 등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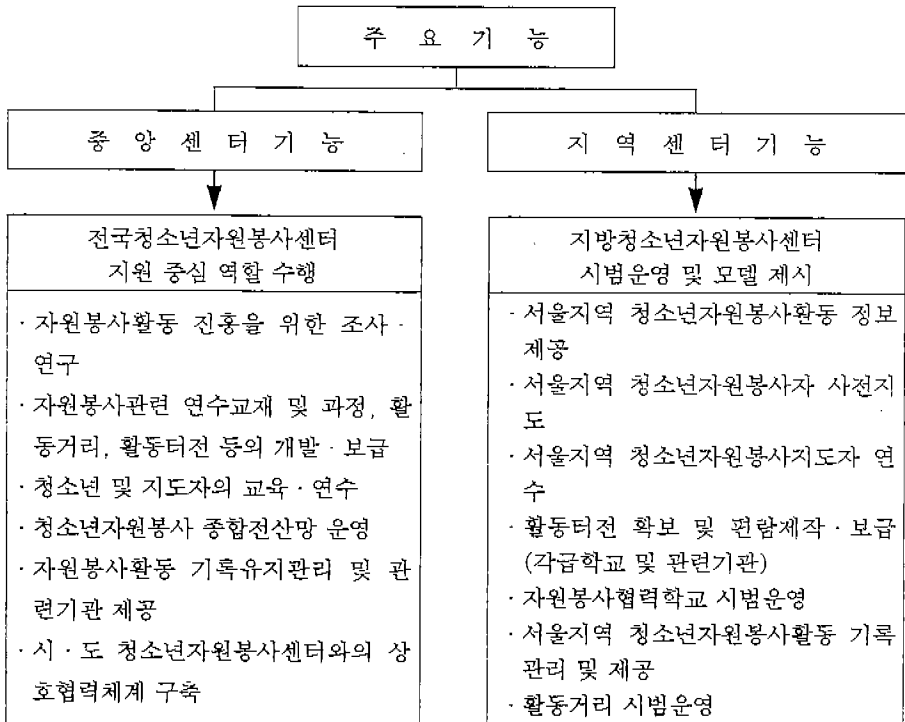
따라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센터나 정보안내센터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센터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들 기관들이 청소년자원봉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종사자중에는 최소한의 청소년지도자나 사회복지사가 확보하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과 여건을 모두 갖춘 자원봉사센터가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어 전담기관화 된다고 하더라도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학교의 수에 비하면 그 수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중학교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2,720개교(교육통계연보, 1997)에 달하고 있고, 이중에 학생수 450명 이상을 가진 학교수가 총 1,623개교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1개 센터에서 연간 평균 10개 학교를 담당한다고 할 때, 연간 4,5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15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담당하여야만 학생들의 봉사활동 이수시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센터의 적정 인력, 역할과 기능, 사업대상의 비중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센터와 지역사회내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 등),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예컨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자원봉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센터들은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행정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 자원봉사센터들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할 기능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앙센터의 역할과 기능 -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 중앙 차원의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주요기능은 전국의 청소년 자원봉사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수행과 동시에 지방센터로서 서울지역 청소년자원봉사사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수행이라는 두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Ⅳ-9〉 중앙센터의 기능체계도



- 상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조사·연구사업, 개발·보급사업, 교육·연수사업, 정보제공사업, 홍보·협력사업 등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는 상기의 기능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우수 연구인력과 첨단 전산장비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고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다.

○ 주요사업

－ 조사·연구사업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기초조사(의식과 실태, 참여동기 등)
- 청소년자원봉사 정책 및 제도 연구
- 청소년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연구 등

－ 개발·보급사업

- 청소년자원봉사활동거리 개발·보급
- 전국규모의 활동터전 개발·보급
- 청소년자원봉사 관련 시청각교재 및 연수교재 개발·보급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관련 정책개발 및 제안

－ 교육·연수사업

- 청소년자원봉사자 사전교육 실시
- 청소년자원봉사지도자 연수과정 운영

－ 정보제공사업

- 자원봉사활동 기록의 종합관리·유지 및 학교 등 관련기관 제공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기록의 관리·지원
- 청소년자원봉사 인터넷 운영
- 청소년자원봉사 지역 전산망 구축 지원

－ 홍보·협력사업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사회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 활동터전 편람 제작·보급
- 중앙 및 지방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간 연계체제 구축
- 전국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협의회 구성 운영
-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

〈광역 센터의 역할과 기능 -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센터〉

◆ 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 주요 기능 및 사업

- 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조사
- 지역사회 가용 활동터전 및 활동거리 개발
-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 교육 연수·배치
- 활동실적 기록관리·제공
- 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 정보제공(지역 통신망, 소식지 등)
- 구 단위 청소년자원봉사 실시기관 및 유관기관 연계 협력
 - 광역시청, 교육청, 청소년 단체, 학교,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언론사, 활동터전 등
 - 자원봉사협력학교 운영

- 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청소년자원봉사 인식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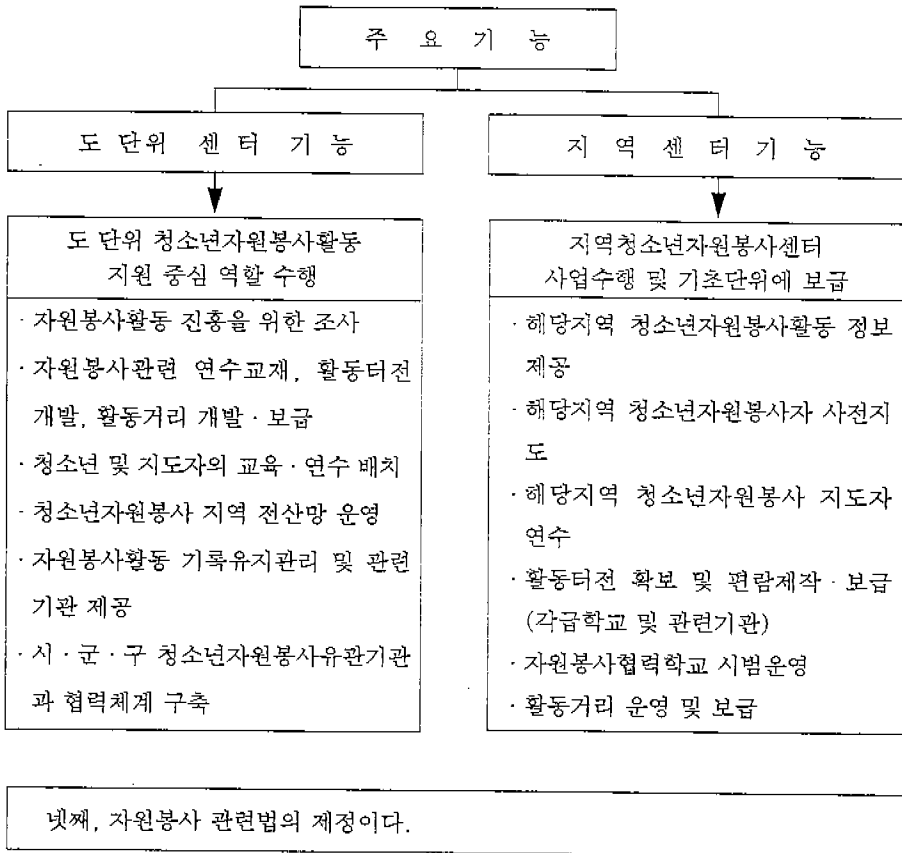
- 광역시별 자원봉사 시책개발, 자원봉사 기금조성, 지역사회 캠페인 활동

◆ 도 단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 도 단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시의 청소년 자원봉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과 도내의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능을 갖는다.

- 광역의 지역(도내 시·군·구 지역)내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경우는 이들 기초단위 센터와 연계를 갖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기초단위에 설치되어있는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등과 연계를 갖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회, 사찰, 행정조직까지도 청소년자원봉사의 거점 조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림 IV-10〉 도 단위 광역 센터의 기능체계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국가사회적 요청이 한층 증대됨에 따라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행·재정지원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근거가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즉 자원봉사활동의 유형, 자원봉사활동에 수반되는 재원의 종류와 확보,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 자원봉사정책 결정이나 집행의 총괄 부처, 국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예컨대, 자원봉사의 날 지정, 포상, 보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등)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처간의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제정을 시도했고, 이후 내무부에서 ‘공익자원봉사지원법안’을 성안하여 입법을 추진한바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제6조(기본시책 등의 수립)에는 내무부장관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원봉사정책을 관련되는 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 부처의 협력체제 구축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다. 따라서 내무부는 여러 부처가 자원봉사와 관련되는 정책들을 입안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각 부처의 자원봉사관련 정책들을 총괄하는 부처로 조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7조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의 설치이다. 이 조항은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하는 기능으로 한정하고 있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심의기능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바, 예컨대, 정책방향이나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특히 2이상의 부처와 관련되는 주요 자원봉사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이 모법이 되는데 현행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수련활동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수련활동영역의 활성화 시책의 하나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소극적인 입장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시책추진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수련시설의 하나로 보든지, 아니면 별개의 시설로 보든지 간에 수련시설의 설치기준과 같이 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청소년자원봉사 전임지도자의 양성과 배치, 청소년단체의 하나로서 제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동등한 적용규정이나 해석이 필요하다. 이외에 자원봉사 동기강화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자원봉사활동터전을 지정하여 봉사학습의 장으로 개방하는 민간사업장들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우수 청소년자원봉사자나 지도자에 대한 포상, 등 여타의 수련활동 추진시책과 동등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형평성을 부여하고 가능한 법률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자원봉사에 관한 단일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다양한 지침이나 고시, 권고문 등으로 이러한 내용을 일선 행정기관이나 집행기관에 시달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1993년 4월 14일 후생성의 고시(告示) 제117호「국민의 사회복지 활동에의 촉진을 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기본적 지침」은 구

체적 조치의 하나로 '각종 표창제도의 정비와 인력채용이나 입학선발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고려하는 사회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하였고, 아울러 '코디네이터(자원봉사조정자)의 양성과 연수체계를 강화하며, 자원봉사 보험의 보급'을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노동조합의 '자원봉사 휴가제도와 세제상 조치 등의 조건을 정비',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지역 복지기금 등의 적극 활용'토록하고 있다.

다섯째, 봉사활동 기본여건(software) 개발이다.

자원봉사 정책수단으로서 자원봉사 전담기구설치, 정책조정과 집행기구설치, 관련법안 등이 자원봉사활동의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봉사활동 기본여건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우선 봉사활동장소인 활동터전 개발과 봉사활동 프로그램인 활동거리 개발을 대표적인 기본여건으로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자원봉사지도자 양성,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평가 및 기록관리체계 확립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활동거리개발과 활동터전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자원봉사지도자와 함께 자원봉사실천의 3대요건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이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중복을 피하면서 먼저 활동거리 개발에 대하여 언급하면 교육부의 경우, 학생봉사활동이 시작되는 1996년 2월 장학자료 제113호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봉사활동의 이론과 실제」를 발간하여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 보급하였다. 동 장학자료에는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 유형으로 일손돕기 활동, 위문 활동, 지도 활동, 캠페인 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보전 활동, 지역사회 개발 활동, 기타 활동 등 8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활동유형들의 구체적인 내용들, 즉 세부활동거리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활동이 개인단위, 조별단위, 학급단위, 학년단위, 학교단위에 적합한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유형과 활동유형에 따른 적합한 활동단위의 크기는 평면적 나열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다 입체적인 활동유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지역사회내에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기관에서의 프로그램과 관계지어 활동거리를 제시하는 방법과 활동유형도 대도시,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 지역에서 적합한 활동인지 등의 거주지역의 특성에 따른 활동유형, 방학(여름, 겨울)중이나 주말, 주중의 방과후, 즉 활동시기에 따른 유형, 활동기간(일회성, 단기,

장기 등)에 따른 유형, 학교급별에 따른 유형, 활동인원의 크기에 따른 활동유형, 활동유형에 따른 봉사활동 난이도와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봉사활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봉사활동의 운영은 미국의 일부 주(state)의 경우 봉사학습의 과정, 즉 교과목 운영과정속에서 봉사를 체험케 함으로써 지식교육과 실천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구조에 있어서는 준비(preparation)-실천(action)-반영(reflection)의 순환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복지교육의 일환으로 도덕이나 사회과목과 접목시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환경미화 등의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운영모델을 소개한다.

〈운영사례 : 클럽활동반 단위 「봉사학습활동」운영사례 - 중동고 편〉

○ 추진배경

강요된 봉사가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불우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봉사학습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학교에서 이미 짜여져 있는 클럽활동반이 적정규모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클럽의 특성과 연계된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 봉사학습 단위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클럽반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1학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때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 목적

현장학습과 체험을 통하여 형식과 타율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가 사회봉사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서 마련을 위하여 봉사학습장으로 약정을 맺은 사회복지시설(5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작은 정성을 전달하여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고, 클럽반의 특성을 살린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클럽반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 추진방법 및 내용

- 추진방법

클럽활동이 실시되는 체험학습의 날(월2회 전일제 매주 토요일)에 각 클럽활동반이 정해진 순번에 따라 5개반씩 학교와 약정을 맺은 사회복지시설(5개소)에서 봉사학습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각 클럽반은 사회복지시설에 봉사활동에 나가기 전에 생활부에서 해당 복지시설과 협의한 생필품이나 간식(1인당 1,000원-2,000원정도 부담) 그리고 추가로 현옷 등을 준비하여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추진내용

5개의 사회복지시설(우성원, 서울시립양노원, 신아재활원, 보훈병원, 주몽재활원)을 선정하여 각 기관의 기관장 및 담당선생님들과 만나 단순봉사가 아닌 봉사학습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봉사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성교육과 더불어 함께 가꾸어 가는 봉사학습장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합의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봉사활동 실시전 사전교육에 대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로부터 1시간 정도 현황 및 활동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고, 준비해 간 물품을 전달한 후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조를 편성하여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각 클럽반은 정해진 봉사학습 활동이외에 지도교사와 협의하여 클럽활동반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을 한다. 예를 들면 사물놀이반 클럽은 장애아동들에게 사물놀이를 지도하기도 하며 축구반은 축구지도를 하며, 사진클럽반은 사진과 비디오를 촬영하여 그들에게 사진을 현상하여 주고 비디오를 보여주는 등 각각의 특성을 살린 활동을 실시한다.

○ 실시결과 및 기대효과

- 실시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학습 경험이 없어 처음에는 다소 긴장하는 면도 있으나, 진지하게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 스스로 대견스러워 하며 보람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시초기에는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도 있었으나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와 학생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대효과

복지시설에서의 활동을 통해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불우한 이웃이나 장애인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게되고, 개인적으로 이같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짐은 물론 클럽활동반의 특성을 살린 사제동행의 봉사학습활동은 클럽활동반의 활성화는 물론 반원들과의 친교를 다지는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다.

또한 클럽반 활동시 작은 정성을 전달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지속적으로 다소간의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고, 연말연시 등에는 학교 차원의 이웃돕기 등으로 지원·확대하여 학교생활, 크게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인성교육과 능력개발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는 효과로 기대한다.

○ 타 학교 전파시 유의점

복지시설 선정에 있어서 학교와의 거리, 교통, 그리고 클럽반의 특성을 살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여부 등을 고려, 물품구입을 위한 학생 부담은 2천원 정도가 적절, 노력 동원 등의 단순 봉사활동이 아닌, 사전에 복지시설과 협의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 및 봉사학습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한다.

〈프로그램의 운영모델 - 미국의 고등학교〉

○클럽활동(특별활동/과외활동) 단위의 형태

학교에서 비교적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모델로서, 방과후 클럽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미국 고등학교의 약 15%가 이러한 형태의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을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활동과 관련하여 학과점수를 인정받거나 정규수업시간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기대를 할 뿐, 그 이상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동기유발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자의 폭을 넓히는데는 한계가 있다.

○학교내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형태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여 학교-지역사회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제반 활동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를 학교내에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첫 번째 형태보다 더욱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서,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지역사회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클럽활동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학과 점수를 받지 못한다.

○ 지역사회서비스 학점인정제의 형태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학교로부터 권장받을 뿐 아니라, 학과점수를 인정받는다. 지역사회 활동점수는 일정한 시간의 참여활동을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다.(예를 들면 100시간의 활동은 한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됨) 일부 학교에서는 졸업을 위해 일정한 시간의 의무참여를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절차는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이 스스로 활동내용, 기간, 목적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사로부터 검토를 받은 후에 활동을 전개하고 평가를 받게된다.

○ 교실밖 “실험실” 역할의 형태

현재의 커리큘럼이나 학교조직을 바꾸거나 또는 직원배치 등의 물리적 변화없이 곧바로 지역사회활동을 학과프로그램 안으로 집어 넣을 수 있는 형태이다. 학생들은 학습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전개하는데, 가령 현장조사로서 자료나 사례를 수집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회문제를 다루는 과목에서는 학생들은 미국의 빈곤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책이나 다른 자료를 통해 읽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주택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빈곤지역의 아이들을 돌보거나, 또는 너무 가난해서 자신의 집을 수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집을 페인트칠하는 활동을 통해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개인의 시각을 확대할 수 있다. 한 학기동안 매주 2시간씩 활동을 하는데, 활동시간은 학생과 활동현장의 사정에 따라 수업시간중이나 혹은 방과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학습 형태

전체 미국고등학교의 약 7%에서 시행하고 있어 이 모델은 앞의 두가지 모델의 장점들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습 프로그램에 결합시키려는 시도이다. 이 형태는 지역사회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직접경험 자체가 학습의 가장 핵심부분을 차지한다. 가장 일반적인 실행방법으로는 매일 2시간씩 계속되는 사회과목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일주일에 4일(8시간)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1일(2시간)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며 활동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공동활동 주제설정의 형태

매우 드물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접근방법으로 학교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초점이나 주제를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지역사회 서비스를 학교의 교과과정에 스며 들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시내의 대인 서비스 현장에 배치되도록 대인 서비스를 활동 주제로 채택한 특별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두가지의 목적을 가지는데, 하나는 미래의 직업을 찾거나 준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책임감을 개발하는 것이다. 가령, 생물과 학생들은 식품 소비조합에서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영양식을 가르칠 수 있으며, 가정과 학생들은 이웃의 취학전 아동들을 위해 매일 아침 유아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고등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중소기업을 위해 재고관리를 위한 컴퓨터기술을 가르칠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의 인간화”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델은 지역사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일부 학생들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활동사례 : 환경문제를 생각하는 볼런티어 - 일본편〉

○ 활동개요

- 명칭 : 환경문제를 생각한다.(1993년도)
- 학교 교육상의 위치 : 특별활동(학생회 활동중의 위원회 활동)
- 참가학생 : 중학교 1-3학년생
- 참가형태 : 미화위원회 학생(각조 1명\ 계 12명)
- 목적
 - 주위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 교내의 미화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
- 내용
 - 1학기 : 쓰레기 문제의 자료수집(특히 동경도)
 - 미화신문 제1호의 편집과 발행
 - 2학기 : 교내 미화, 환경문제에 대한 앙케이트 실시(1993. 11.18)
 - 미화신문 제2호의 편집과 발행
 - 청소공장 견학을 실시(1993. 12.16)
 - 미화신문 제3호 편집과 발행
 - 3학기 : 교내 미화활동
 - 교내 청소년과의 인터뷰(1994. 2.22)
 - 미화신문 제4호 편집과 발행
- 실천과정
 - 쓰레기 문제와 자료수집

1993년도는 특히 동경도의 쓰레기 봉투 수집의 변경(권장 쓰레기 봉투의 제도화)이 있어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되고 있었다. 이 시기를 맞춰 환경문제나 미화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관심을 불러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실천하게 되었다. 신문기사 등을 자료로 하여 '왜 쓰레기 봉투의 수집방법을 변경하는 것인가?' 그 배경을 알아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학생활동 위원회에서 논의하였다. 1년을 시작하는 첫학기이므로 1년간의 활동을 정하기로 하였다. 또 주위로부터 자연히 깨닫게 되는 것도 고려하여 어려운 의논은 하지 않았다.
 - 교내 미화, 환경문제에 대한 교내 앙케이트 실시(1993. 11. 18)

쓰레기 문제 뿐만 아니라 교내의 미화(본래 미화위원의 직무)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로 교내 전교생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해 교내에 있어서 미화의식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짐과 동시에 그 후의 위원회 활동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였다. 앙케이트 항목은 다방면에 걸친 것으로, 그 주된 것은 교내의 미화, 동경도(23구)의 쓰레기 문제, 일반사회의 쓰레기와 재활용, 환경문제 등 4가지였다.

· 청소공장 견학의 실시

2학기의 활동의 마무리로 동경도 이따하시 청소 공장견학을 1993년 12월 16일에 실시했다. 실제로 쓰레기 수집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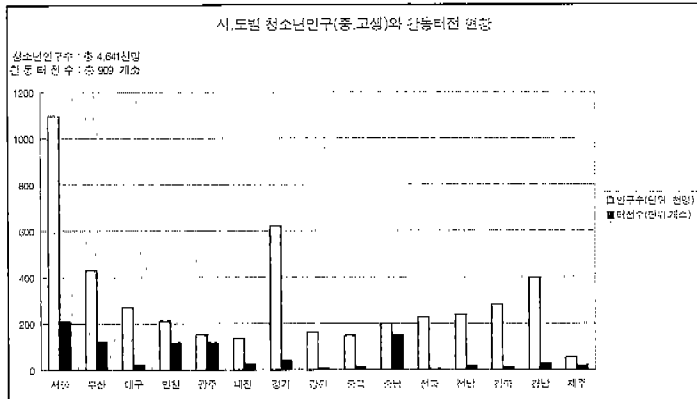
· 교내 청소원과의 인터뷰

3학기는 다시 학교 미화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환경문제도 결국은 자신들에 의한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학교의 청소부문에서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교내 청소원들의 실정을 듣고, 학교미화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함에 있어서 중요한 개발 대상은 활동터전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1996년 5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이 가능한 활동터전을 약 6,800여개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편람으로 제작·보급한바 있다. 그러나 실제 활동터전으로 운영되지 않은 기관이나 시설들이 많았고, 활동터전의 유형 역시 극히 한정되어 소개되었다. 이후 1996년 12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활동터전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기관을 공공기관, 종교·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문화·예술시설, 체육·관광시설, 청소년시설·단체, 지역사회 등 비교적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과거에 자원봉사활동터전으로 운영된 적이 있거나 현재 자원봉사활동터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와 향후 활동터전으로 개방할 의도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여 본 결과 활동터전으로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 시설은 총 909개소로 나타났다.

〈그림Ⅳ-11〉에서 알 수 있듯이 활동터전은 시·도의 봉사활동 수요자인 중·고등학교의 학생수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Ⅳ-11〉 시·도별 활동터전과 청소년 인구



(자료 : 청소년자원봉사 활동터전 모음집, 1996,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이에 따라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다양한 활동터전을 균형있게 개발하여 이를 시·도나 시·군·구에 연결시켜주며 새로운 활동터전유형도 연구하여 개발, 활동거리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영역을 매년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활동터전 개발이 불가능한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오히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활동거리 개발에 역점을 두고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 봉사활동 기본여건 조성으로는 봉사활동 기록양식의 통일과 기록관리체계, 활동에 대한 평가기준과 내용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기록의 관리유지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개발, 자원봉사센터나 학교 뿐만 아니라 활동터전예까지 보급되어 상호 제공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시·도별로는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전국적으로는 중앙의 센터에서 이를 종합관리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정책모형 구축과 정책집행

청소년자원봉사정책 모형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문제와 이의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의 탐색과정을 거쳐 결정된 최적의 정책수단들, 그리고 각각의 정책대안들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하는 정책결과와 조정, 마지막으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집행체제와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에 대한 정책의 표준화된 집행절차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모형은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논의하여 왔던 연구내용중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이라고 하는 두가지 과정을 중심으로 모형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 유효하다.

〈그림Ⅳ-12〉는 청소년자원봉사정책의 전체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으로서는 먼저 정책문제가 제시되어야 하며, 정책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하여 정책수단이 선택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정책을 입안하는 부처에서는 정책수단과 내용에 대하여 유관부처 상호간에 사전협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정책조정 및 결정기구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서 정책이 조정되고 결정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정책은 집행과정으로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시·도나 시·군·구로 재화나 서비스가 전달되고, 동시에 민간의 중앙기구를 통해서 재화나 서비스가 직접 정책대상인 청소년들에게 집행되거나 하부기관으로 전달되어 정책이 집행되는 절차를 거친다. 최종적으로 전달된 재화나 서비스가 정책의 비용인데 정책비용에 대한 정책효과로서는 구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비행이 감소되었다든지, 실천위주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교육효과가 제고되었다든지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나타난 정책효과를 평가·분석하여 정책수단이나 목표를 수정해 나가거나 정책을 종료하게 된다.

정책문제로서의 청소년자원봉사는 청소년을 둘러 싸고 있는 사회·문화·교육적 환경, 즉 상업주의적 가치관의 팽배와 물질만능주의 사고, 유해환경접촉의 개연성 등으로 청소년의 비행을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야기시키고 있고, 동시에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폐단은 획일화된 인간양산과 인성의 황폐화 등을 초래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문제로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과론적 입장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가 하나의 정책으로 결정된 것이다.

(1) 정부의 정책결정과 조정·협력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의회나 정당, 이익집단, 전문가 및 학자, 언론기관 등이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영향력은 정책의 종류에 따라 강·약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원봉사정책은 Lowi의 분류방법에 따르면 배분정책(Distribute Policy)으로 분류될 수 있고(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으로서 달리 요구충족정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분배정책의 경우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은 관료조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정정길, 1989, p. 141).

따라서 자원봉사정책은 의회나 이익집단, 전문가보다는 궁극적으로 관료조직인 정부가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정부 부처에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의 정책목표와 수단을 명료화하여야 한다.

즉, 정책문제로서의 청소년자원봉사는 청소년을 둘러 싸고 있는 사회·문화·교육적 환경, 즉 상업주의적 가치관의 팽배와 물질만능주의 사고, 유해환경 접촉의 개연성 등으로 청소년의 비행을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야기시키고 있고, 동시에 입시위주 교육제도 폐단으로 획일화된 인간양산과 인성의 황폐화 등을 초래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문제로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동시에 청소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이 내면화되고 생활화됨으로 해서 향후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국가사회의 제 영역들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참여할 수 있는 가용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도로 사전에 봉사활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정책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과론적 입장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가 하나의 정책으로 결정되고 이에 대해 관련부처 상호간의 정책목표나 수단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는 정책입안 공무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등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차원의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mega-policy)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정책의 틀속에서 세부정책으로 청소년자원봉사정책을 수립하여야 정책 상호간의 중복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즉, 문화체육부는 청소년육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처로서 청소년자원봉

사에 관한 세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전에 유관부처와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하여 입안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검토하고 협조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통하여 정책을 조정·확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리·검토·조정·확정과정에서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점은 유관부처의 자원봉사 정책상호간의 관계성을 명확히 규정하는 일이다. 예컨대 교육부의 기본정책으로서의 교육정책과 하위정책으로서 청소년자원봉사정책과의 관계, 문화체육부의 육성정책속에서 청소년자원봉사정책, 더 나아가 내부부의 공공정책속에서 청소년자원봉사정책,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과 청소년자원봉사정책의 관계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각각의 정책이 청소년자원봉사정책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동일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정책수단들에 대한 정책비용의 부담과 업무와 역할의 배분이 되고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상기의 역할배분과 협력체계가 어떠한 내용으로 구축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체육부의 경우, 청소년자원봉사를 청소년육성 지표의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자원봉사를 청소년의 인성개발 및 함양의 정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계량화하기 위해선 청소년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정책비용의 크기를 정하고 투입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예컨대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참가형태, 의미있는 활동, 참가시간, 활동 후 자신에게 있어서 변화된 상태 등을 최소한 격년주기로 추적하여야 하며 이러한 결과를 청소년비행이나 청소년실업과도 연계시켜 정책비용의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둘째로 청소년자원봉사 네트 워크 형성인데 이를 위해선 기존의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생활권 수련시설의 청소년 프로그램중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비중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자원봉사업무자체가 사업수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현상을 나타내거나 소극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들 청소년수련시설이 보다 능동적으로 자원봉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선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보완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해당지역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하여 자원봉사 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활동터전을 개발하여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선 재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자원봉사 지역협의회의 구성이다. 지역별로 청소년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하여 지역사회내에서 청소년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유관기관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지역사회내 환경, 복지, 문화, 언론, 교육 등의 관계분야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하여 지역사회내의 제 부문들이 청소년자원봉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기금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교육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첫째, 전임지도자의 양성과 배치라는 수단에 대하여 정책의 집행기관이 되는 각급 교육청이나 학교가 기존의 봉사활동 담당교사들로 하여금 전임지도자 양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와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들 기관이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센터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봉사활동 사전교육 등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문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이나 한국청소년개발원 등)들은 공동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유형과 활동터전에 관한 매뉴얼의 개발, 프로그램 기획과 실천방법, 평가방법, 학생들의 봉사활동 기록관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이를 학교나 센터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내무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센터의 종사자들에게 전임지도자 양성과정 참여, 센터내에 청소년자원봉사업무를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인지의 운영지침을 일선 집행기관인 각 센터에 시달하고, 시·도별로 각 센터가 해당지역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도록 하여 청소년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전교육, 프로그램의 공동운영 등을 도모하는 일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내 사회복지과를 통하거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하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가 청소년자원봉사자들과나 학교교사 등에게 자원봉사와 관련된 정보제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터전으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이, 또는 정보제공기관으로서의 사회복지관이나 단체가 청소년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조정이나 청소년자원봉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

영지침 등을 제정하여 일선집행기관에 시달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관련기관 상호간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책집행과 절차

다음으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점은 정책의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선정된 정책수단들을 추진하여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과정에서의 활동들의 하나 하나가 바람직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략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정책지침의 작성, 자원확보, 실현활동, 그리고 감시·감독의 4단계이다(정정길, 1989, p. 510).

첫째 단계인 정책지침작성은 정책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을 의미하며, 정책이 법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통령령, 부령 또는 집행책임자의 지시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법규, 규정, 명령, 지시 뿐만 아니라 안내서, 지침서 등의 명문화된 것도 있고 구두로 지시된 형태도 있다. 이러한 정책집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상에 필요한 표준 운영절차(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를 작성하여야 한다. SOP의 작성은 우선 중앙에 의하여 작성 개발될 때 하위 집행자들의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며, 개별 집행자는 SOP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복잡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침은 관련부처인 교육부, 내무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상호합의된 정책수단의 틀속에서 작성되어 각각의 집행기관에 시달되어야 한다.

둘째 단계인 자원의 확보와 배분은 정책실현을 위한 물적 인적자원을 말한다.

여기에는 자원봉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센터의 설치와 필요한 인력의 확보, 청소년들이 봉사활동할 수 있는 터전의 확보와 프로그램 개발, 지도자의 양성 및 배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산이 된다.

셋째 단계로 실현활동은 정책의 실현(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정책수단의 실현)을 위하여 행하는 물리적 활동을 의미한다. 예컨대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동터전을 개발한다든지, 지도자를 양성한다든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든지 하는 활동으로서 이는 확보된 자원을 이용하여 정책지침에 구체화된 내용을 SOP에 따라서 최하위 일선 집행요원이 행하는 활동이다. 다시 말하면 지침속에 밝혀진 정책내용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이다.

넷째 단계는 감독·통제단계인데 실현활동이 원래의 설계대로 지침에 밝혀진 내용을 충실하게 수행했는지를 점검·평가하여 이에 대해 시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크게 집행점검과 평가의 두가지가 포함되는데 이중에서 점검(monitor)은 실현성과나 실현활동을 점검하는 것으로 예컨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수 등을 점검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산출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 정책지침속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위의 4가지 단계에 있어서 첫째 단계는 주로 중앙 정부가 자원봉사정책집행에 관한 각종 지침을 개발,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둘째 단계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셋째 단계는 자원봉사센터나 학교 등이 넷째 단계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로 담당하게 된다.

정책은 이러한 4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종료되거나 다시금 수정되어 순환되어진다.

제 V 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 V 장 요약 및 정책제언

청소년자원봉사의 제도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자원봉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인들의 자원봉사 역사가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자리잡아 가야 하겠지만, 제도시행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특히 청소년자원봉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본이나 미국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개발과 여건조성을 위해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정책에 대한 본 연구진의 시각과 향후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의 입시위주로 인한 지식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성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있어 현행의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전문가 조사에서 73%로 나타남)

둘째,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시·도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수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침 등을 통하여 시·도간의 자율성은 보장 하되 최소한의 기본이수시간은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봉사활동을 점수화하고 상급학교 진학성적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지만 점수화 하는 자체에는 반대이며, 오히려 봉사활동을 제도화하되 졸업필수로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대학이나 사회진출시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적으로는 모든 시·도가 최소한의 봉사활동 시수를 적용하고 봉사활동내용이 고입반영비율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는 해도 상급학교 진학성적이나 사회진출시에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봉사활동 시수는 시·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통하여 인성교육의 효과를 제고시키고, 봉사활동을 일관성있게 생활화하기 위해선 봉사활동 시수가 최소한 연간 20시간 이상이 되도록 모든 시·도가 조정하여야 한다. 봉사활동 적용대상 교급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대상 학년도 모든 학년으로 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생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차원에서 도입·시행되어야 할 과제로는 가능한 기존 교과목에 연계시켜 추진하되 학습자의 요구(need)에 맞는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봉사활동은 일반 성인들이 행하는 봉사활동과는 달리 실천위주의 봉사학습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급별, 연령별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운영 시기에 따른 계절별 프로그램이나 지역(도시형, 농어촌형 등)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활동의 난이도나 학습효과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개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학교차원에서 보다는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등에서 현장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현행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대학에 따라 입학사정시 반영하기도 하고, 반영비율도 상이하다. 어쨌든 중·고등학교의 봉사활동을 대학입학사정에 반영하는 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가능한 많은 대학이 중·고등학교의 봉사활동을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통일된 평가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내에 보다 많은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하며 센터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연수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와 이들 센터가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를 구축하여 센터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공동 기획이나 학교의 연간 봉사활동계획에 대한 공동수립 등의 협조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덟째,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동기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이

필요한데 일차적으로 우수 봉사자들을 발굴하여 표창장 등을 수여하고 이들에 대해 선진지 연수기회나 국제간의 청소년자원봉사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이가 봉사활동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공적 보험을 개발·시행함으로써 봉사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아홉째, 학교내 봉사활동 전담교사나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자 연수이다.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지도하는 봉사활동 전임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의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나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지도자 연수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자원봉사는 일반성인들의 자원봉사와는 달리 활동자체가 교육적이어야 하며 인성개발과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 의하여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현장에서 지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교육재정 등의 어려움으로 학교내에 봉사활동이나 수련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의 신규채용은 어렵다. 따라서 봉사활동을 전담하여야 할 교사에 대한 연수과정운영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관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등을 교육청 차원이나 학교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향후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 정부적 차원의 자원봉사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와 관련되는 유관부처 공무원과 관계분야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 외국의 자원봉사정책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거시적인 자원봉사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청소년자원봉사의 경우 정책의 수립과정

에서 기존의 청소년육성 실무위원회에서 유관부처와 사전에 자원봉사정책을 조정하여 이를 상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에 반하여 특정 부처의 입장에서 법안을 제정하고, 독자적으로 부처마다 자원봉사정책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자원봉사 관련부처 상호간에 정책 내용이나 사업의 중복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정책대상과 집행기관의 업무 혼란과 예산의 낭비가 예상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동 위원회에서 는 자원봉사의 분야별 영역을 설정하고, 정책집행을 위한 책임 부처와 정책의 집행기관 등을 결정함으로써 자원봉사관련 재화나 서비스의 전달체계 확립을 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의 청소년육성활동과 관련된 제반 시책들을 면밀히 재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21세기를 대비한 청소년육성정책의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과 예산확보 및 할당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책추진과제의 우선 순위를 재 조정하여야 하는데, 예컨대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중에 봉사활동에 어느정도의 비중을 두고 정책비용을 투입해야 할것인가? 또 투입하여야 할 비용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제 활동에 비하여 어느정도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감한 정책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둘째, 자원봉사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과 전국적인 조직체의 구성이다.

자원봉사의 분야가 다양하고 활동의 주체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봉사활동을 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사회복지 분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은 정부 2장관실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문화체육부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공익부문(환경, 대국민 캠페인, 교통, 범죄예방 등)은 내무부에서 각각 전담을 하되 전체적으로는 연합체를 구성하여 사업의 조정과 협력,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능에 따라 사회복지·환경·교통·문화·보건의료분야 자원봉사로 구분되고, 대상에 따라 일반성인, 청소년, 고령자, 기업 등의 자원봉사영역이 구분되어 이에 맞는 프로그램들과 지원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심의와 결정, 예산의 확보, 집행체계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 차원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관련부처 차관급이상과 전국 규모의 자원봉사관련 단체의 장, 기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셋째, 자원봉사기금의 조성이다.

자원봉사가 궁극적으로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감안할 때, 자원봉사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사업운영, 자원봉사의 보험제도 운영, 다양한 사업의 개발, 자원봉사를 통한 국제간의 교류 등을 위해선 자원봉사 기금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자원봉사를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 활동자체가 위축될 수 있고 경직되기 쉽기 때문이다.

넷째, 봉사활동 동기부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개발이다.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참여동기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매년 5월중 한주간을 '청소년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하여 청소년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천하는 활동 등이 필요하다. 동시에 모범 청소년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 선진국 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포상과 선진연수기회제공 등의 동기유인책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현장에서 지도하는 교사나 무보수 지도자등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또다른 시책의 하나로서 요청되는 것이 청소년자원봉사보험이다. 이는 일본이나 불란서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청소년들의 봉사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사전, 사후조치로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나 실천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거나 청소년에게 유용한 봉사활동 계획서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책도 필요하다.

다섯째, 자원봉사 관련 법안의 제정이다.

자원봉사 법안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단순히 장

려한다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보다는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청소년자원봉사의 경우, 현재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자원봉사지원법안에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자원봉사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거나, 현행의 청소년기본법에서 보완하는 방안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컨대 활동중 안전사고에 대한 공적 보험적용이라든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자원봉사지도자에 대한 활동경비의 실비지급, 활동터전으로 개방하는 경우의 세제혜택,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산업체 취업에 있어 봉사활동 경력을 우선 고려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동기강화와, 특히 지도자와 봉사활동 경력자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육부에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방학동안이나 휴일은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봉사활동이 점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학기중에 적당한 시간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예컨대 연중 특별활동 시간중에서 일정시간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편성한다든지 토요일을 특별활동이나 봉사활동, 자율학습시간으로 신축성있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일곱째, 범 국민적인 자원봉사운동으로의 확산을 위한 언론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자원봉사는 정책결정기관이나 또는 집행기관인 민간기관이나 단체만의 몫만은 아니다. 자원봉사운동 전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보겠다. 특정 언론사만이 자원봉사를 집중 홍보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매체,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언론이 주도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 김 영 호, 1996, 복지사회와 자원복지활동, 강남대학교 자원복지센터
 한 승 희 외, 1994, 「지역사회 봉사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
 이 용 교, 1995, 「한국청소년정책론」 인간과 복지
 서울특별시 교육청, 1997, 「중 고등학교 학생봉사활동 운영방안」
 정 정 길, 1990, 「정책학 원론」 대명출판사
 서울시청개발원, 1995, 「서울시 자원봉사자 활용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시정 연구, 95-R-32,
 교 육 부, 1996,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봉사활동의 이론과 실제」
 장학자료 제113호
 내 무 부, 1997, 「자원봉사발전 정부지원방향」
 교 육 부, 1997, 「초 중 고등학교 학생봉사활동 현황 및 문제점, 대책」
 교 육 부, 1997, 「학생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이 용 교, 1995,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방안」: 교육개혁과
 청소년육성정책, 문화체육부
 교육개혁위원회, 1995,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이 대 회 역, 1984, 「정책분석론」(W.N.Dunn 저) 대영문화사
 현 승 일, 1989, 사회학, 박영사
 청소년백서, 1996, 문화체육부
 한승희 외, 「주요외국의 청소년활동정책」연구보고서 94-07 한국청소년개발원

〈 외국문헌 〉

- Leon Ginsberg, 1996, Understanding Social Problems, Policies, and
 Programs,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JaniePercy-Smith, 1996, Needs Assessments in Public Policy, Open
 University Press
 Expanding Boundaries, 1997, Corporation for National Service
 Answer The Call, 1994, Youth Service America

Young People Make a Difference, 1997,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

Annual Review 1995-96, The National Centre for Volunteering
Volunteering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 1997, The National
Centre for Volunteering

The Governments Action Plans, 1995. Make A Difference

ボランティア・コーディネーター研修体系とその考え方, 東京ボランティア・
センター

ボランティア・センター研究年報 '96, 東京ボランティア・センター
福祉活動への参加の推進について, 厚生省, 厚生省社会・援護局
厚生省におけるボランティア活動振興施策, 厚生省.

부록 1 델파이 조사지 및 조사대상자

부록 2 청소년자원봉사 정책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표

부록 3 공익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부록 4 볼런티어 활동 7개년 계획구상 - 일본

부록 5 대입전형 중 봉사활동 반영현황

〈 부 록 1〉 델파이 조사지 및 조사대상자

■ 델파이 조사지

No _____

청소년자원봉사 정책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1997. 6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자원봉사 정책모형개발을 위한

제 1 차 델파이(DELPHI)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21세기 우리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이론연구, 수련활동 개발 보급, 지도자 양성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지난 5.31 교육개혁조치로 학생 자원봉사활동이 강조되면서 자원봉사 관련 종합정보제공을 위하여 '96년 6월 27일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 센터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자원봉사의 올바른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청소년자원봉사 정책모형을 연구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 관련 정책입안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학계, 현장 지도자 등전문가의 고견을 수렴하여 분석하는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우리사회에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설문에 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하여 주시는 분들의 소속과 성명은 제시되지만 응답내용은 통계로 처리되오니 가능한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차 설문지에 대한 회신은 동봉한 회송봉투를 이용하여 '97년 6월 30일까지 저희 센터로 보내 주시거나, FAX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137-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전화 : 578-4104. FAX : 576-4104

연구책임자 : 김 정 배 (연구위원/활동개발부장)

설문응답을 위한 참고내용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의 개선,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 지도자의 양성 및 배치 등의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조성과 바른 청소년 육성 운동의 일환으로 부모교육 사업, 도덕성 회복운동 전개, 상담사업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에 의한 물질만능주의의 팽배, 상업적 대중매체와 유희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 비행과 탈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이의 해결책으로 신교육체제를 수립,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지난 '95년 5월 31일 제시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의 지식중심의 도덕 윤리교육을 실천중심의 교육으로 개선하며 학생의 모든 활동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학생 선발시 전형자료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개인 또는 단체 수련활동과 학내·외 자원봉사활동의 내용과 참가시간을 기재,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상급학교 진학시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육개혁 조치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봉사활동 운영지침을 마련, 시·도 교육청별 여건을 고려하여 봉사활동 이수시간, 내신 반영 점수 등을 정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문화체육부에서는 서울을 비롯하여 5대 광역시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활동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98년도까지는 전국 15개 시·도에 1개소씩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들에서도 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성인 자원봉사 관련업무와 더불어 청소년자원봉사 관련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내무부에서도 '96년 부터 시·군·구 단위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토록 지원하여 '97년말까지는 전국에 74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뒷받침 할 법적근거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고, 다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청소년수련활동 영역의 활성화 시책의 하나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1. 청소년자원봉사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

1) 5. 31 교육개혁 조치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학생자원봉사활동은 그동안의 지식중심의 도덕 윤리교육에서 벗어나 실천중심의 교육으로 개선함으로써 인성(도덕성, 사회성, 정서 등)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활동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봉사활동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함양이나 사회성 발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배양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봉사활동을 통해서 상기의 정책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가능할 것이다.
- ② 대체로 가능할 것이다.
- ③ 희박하다고 본다.
- ④ 불가능하다고 본다.

2) ③과④를 응답하신 경우 정책목표달성의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장애요인부터 순서대로 3가지만 기술하여 주십시오.

〈장애요인〉

① :

② :

③ :

3) 상기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나 수단이 중점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도적 장치나 보완책〉

① :

② :

③ :

2. 학생봉사활동제도

현행 학생봉사활동은 교육부의 봉사활동 운영지침에 따라 시·도 교육청 재량에 의하여 각기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연간 봉사활동 시간, 시간수에 따라 적용되는 점수의 차등화 폭, 봉사활동이 의무사항인가 또는 권장사항인가 등 통일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정책대상인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문제점이 야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1)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조정하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아래사항에 대해 찬반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할 최소한의 연간활동 시간수는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정하여 모든 시·도 교육청에 일률적으로 시행토록하고 그 이상의 봉사활동시간은 해당 교육청의 특성에 따라 시간수를 정하도록 한다.

○찬성이유:

○반대이유:

- ② 중학생 봉사활동의 고입반영비율도 시·도 교육청 마다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학년별 최고 8점으로서 고입반영시 최고 24점(300점 만점)이 반영되는 반면 타 시·도의 경우 고입반영 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봉사활동의 고입반영비율은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통일 되어야 한다.

○찬성이유:

○반대이유:

- ③ 학생 봉사활동 자체를 점수화하고 상급학교 진학성적에 반영하는 제도 자체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반영자체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권장사항이라고 했을 때 봉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지겠는가를 감안하여 선택하여 주십시오.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

○권장사항이어야 하는 이유:

2) 현행 학생봉사활동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년별 이수시간을 차등화하지않고 매학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성적의 고입내신 성적 반영비율이 높고,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대입 준비로 인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부족 등으로 학교 교급별 3학년때의 봉사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않을까 우려됩니다. 더군다나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학생수에 비해 봉사활동 수요처의 양이 부족한 실정이고, 교사들의 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도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봉사활동 대상학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의견에 ○표 하여 주십시오.

- ① 현행대로 학교교급별 모든 학년에게 봉사활동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고등학교에서는 봉사활

동을 폐지하여야 한다.()

- ③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학교급별 3학년때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 ④ 기타 의견

3) 상기 2)의 해당 의견에 대하여 선생님의 판단근거를 간단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판단근거〉:

4) 상기 2)의 응답하신 각항에 대하여 모든 시·도가 동일하게 최소한의 봉사활동시간을 적용한다고 할 때 해당 학년별 최소한의 교내봉사활동과 교외봉사활동시간은 각각 몇 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항의 응답 경우:
- ② 항의 응답 경우:
- ③ 항의 응답 경우:
- ④ 항의 응답 경우:

5) 현행 학생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도입 시행되어야 할 새로운 제도나 또한 기존의 운영방법상에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부터 순서대로 3가지만 기술하여 주시고 새로운 제도중 외국의 예인 경우 해당 국가 명을 명기하여 주십시오.

①

②

③

6) 학생자원봉사활동이 성인들의 자원봉사활동과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차이점:

② 제도적 장치 또는 노력:

3. 정책대안 개발

1) 현행 대학에서는 학교에 따라 중·고등학교의 봉사활동시간 등을 입학에 반영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학사정에 대하여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최소한의 봉사활동 경력을 모든 대학이 입학사정에 고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2) 1)항과 관련하여 중·고등학교의 봉사활동 경력이 모든 대학에서 최소한 반영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3) 학생자원봉사의 제도정착을 위하여 정부가 가장 시급히 마련하여야 정책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거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로 5가지만 기술하여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 예 시 〉

○봉사활동 교과목 설치 ○학교내 전담교사의 배치 ○지역사회내 학생자원봉사전담기관의 설치 ○봉사활동 수요처에 대한 세계혜택 ○대학입시 반영의무화 ○자원봉사 보험 도입적용 ○봉사활동 이수 대상학년의 폭소 조정 ○봉사활동 관련 포상 ○수요처 및 전담기관에 예산지원 ○활동이수 시간의 연중 참여시간 보장

4) 학생봉사활동이 실효성있게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활동에 앞서 필요한 소양교육 실시, 학생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적절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제공, 봉사활동 수요처의 안내, 지도자 배치 등 최소한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학생봉사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일차적 기관은 지역사회내에서 어떠한 기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 학교, 지역사회내 사회복지관, 청소년 회관(수련관), 시·군·구 단위 자원봉사센터, 시·군·구청, YMCA나 청소년 연맹 등 청소년단체, 기타 사회단체 등)

5) 문화체육부에서는 학생자원봉사활동 제도정착과 진흥을 위하여 시·도 단위에 1개소씩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주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부터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열거된 사항외에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을 기술하여 주시고 번호를 명기하여 주십시오.

- ① 해당 시·도내의 중·고등학교에 학생봉사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봉사활동 프로그램, 활동 수요처 등)를 제공하는 역할 ()
- ② 해당 시·도내 학생봉사활동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관, 청소년회관,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단체 등에 학생봉사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봉사활동 프로그램, 수요처 등)를 제공하는 역할 ()
- ③ 센터에서 직접 봉사활동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사전 소양교육 실시 및 지역사회내 활동 수요처에 직접 연결시켜 주는 역할 ()
- ④ 해당 시·도내의 학교 교사나 사회복지관, 청소년회관, 자원봉사센터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학생자원봉사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역할 ()
- ⑤ 학생자원봉사 관련 정책개발이나 연구,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자원봉사지도자 양성연수, 자원봉사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 ()
- ⑥ 기타 의견 ()

6) 학생봉사활동과 관련, 우수 학생봉사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포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포상을 하기위한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떠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포상평가 또는 심사는 어떠한 기관이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포상의 내용 :
- ② 포상대상자의 평가 또는 심사기관 :

7) 포상 대상자의 평가 또는 심사는 어떠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8) 현재 학교차원의 봉사활동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봉사 활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량 과다, 적절한 처우부족 등이 있습니다. 학교 내 봉사활동, 수련 및 단체활동,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 상담 등을 전담하는 교사를 두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

② 현행대로 환경부나 학생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9) 문항 8)의 ①항을 응답하신 경우 전담교사는 해당분야의 자격취득과정이나 연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떠한 자격이나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없다 ()

② 해당 자격 또는 연수과정 :

10) 학생봉사활동은 성인봉사활동과는 달리 활동과정에서 위험이 뒤따를 수 있으며, 부주의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도, 또는 상해를 입을 수도 습니다. 이러한 예상되는 위험과 피해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조치로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11) 특정 활동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아니냐가 종종 시비가 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나 장치가 마련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안이나 장치 :

12) 현행 제도에 의하여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로부터 봉사명령을 받은 비행청소년 대상 봉사활동이 있고, 학교로부터 퇴학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에게 징계대신 봉사활동을 명령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는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기관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실효성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어떠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담기관이나 단체 :

○필요한 인력(2개까지 복수 표시 가능) :

(예시 :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학교교사, 사회교육전문지도자, 성직자 등)

13) 학생봉사활동 업무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 회관(수련관), 종교기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도자의 확보나 배치, 지역별 중복업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 미 구축 등으로 인한 인력과 운영의 비효율성, 이로 인한 예산의 낭비 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를 지양하고 효율적이며, 상호 협력적이면서도 역할과 기능이 분명하고 보다 체계적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중단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지금까지 까다로운 문항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응답하여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델파이 조사대상 전문가 명단 (총 45 명)

번호	성 명	소 속	직위	주 소	비 고
1-1	권현수	대구광역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대리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1동 776-8번지	
1-2	김두현	문화체육부 청소년기획과	서기관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전문가회의 참석
1-3	김범수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111	
1-4	김석산	한국복지재단	회장	서울. 중구 무교동 95 동민빌딩 11층	
1-5	김영호	강남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산 6-2	
1-6	김옥라	한국자원봉사 능력개발 연구회	회장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42	
1-7	김용일	카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서울. 종로구 혜화동 90-12	
1-8	김조영	교육부 중등장학관실	장학관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1-9	김종량	한양대학교	총장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1-10	김창배	수서 청소년수련원	원장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산66	
1-11	김동원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53	전문가회의 참석
1-12	김현록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서울. 송파구 삼전동 62-2 송파구민회관 2층	
1-13	도형기	한동대 사회봉사활동본부	교수	경북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	
1-14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서울. 관악구 신림동 56-1	
1-15	백경희	한국여성개발원	교육 3과장	서울. 은평구 불광동 1-363	
1-16	백창근	정신여중	교사	서울. 송파구 잠실 7-50	

번호	성명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1-17	서재익	삼성사회봉사단	부장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 삼성생명빌딩 16층	
1-18	성민선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43-1	
1-19	송정부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산41	
1-20	옥정도	삼성사회봉사단	이사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 삼성생명빌딩 16층	
1-21	유주영	한국청소년연맹	사무총장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6 보라매공원내	
1-22	윤홍중	공향고등학교	선생님	서울. 강서구 방화2동 541	
1-23	이강현	볼런티어 21	소장	서울. 마포구 풍덕2동 404	
1-24	이광호	한국청소년개발원 수련활동실	실장	서울. 서초구 양재동 60	
1-25	이문용	동작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서울. 동작구 방배동 5-1	
1-26	이수옥	대전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	대전. 중구 문화2동 583-7	
1-27	이영태	대구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교육개발 부장	대구. 달서구 송현1동 702 청소년수련원 2층	전문가회의 참석
1-28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광주. 남구 진월동 592	
1-29	이종균	한국자원봉사 연합회	이사장	부산. 동구 초량3동 1195-2	
1-30	이창호	중앙일보사 자원봉사 사무국	전문 위원	서울. 중구 순화동 7	전문가회의 참석
1-31	이하중	미성중학교	교사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745-24	
1-32	임창순	서울시 교육청 생활지도 장학과	장학사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2-77	
1-33	장옥주	보건복지부 보지자원과	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제 2청사	전문가회의 참석

번호	성명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1-34	정규준	부서울중학교	교사	서울. 도봉구 도봉1동 585	전문가회의 참석
1-35	조난심	교육개발원 교육과정연구본부	팀장	서울. 서초구 우면동 92-6	전문가회의 참석
1-36	조명우	내무부 사회진흥과	서기관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전문가회의 참석
1-37	조휘일	서울여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서울. 노원구 공릉2동 126	
1-38	주정미	보건복지부 복지자원과	서기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제 2 종합청사	
1-39	차광선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사무 총장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343-7 세종빌딩 5층	
1-40	최일섭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 관악구 신림동 56-1	
1-41	최윤진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서울. 동작구 후석동 221	전문가회의 참석
1-42	최충욱	경기대 교육학과	교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이외동 산 94-6	
1-43	한근홍	자원봉사정보 안내센터	소장	서울. 마포구 도화동 73 삼창빌딩 704호	
1-44	한명섭	녹번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서울. 은평구 녹번동 산 28-6	
1-45	한정자	한국여성개발원	사업 본부장	서울. 은평구 불광동 1-363	

(이상 가,나,다 순)

〈부록 2〉 청소년자원봉사 정책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표

청소년자원봉사 정책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표

자원봉사센터 귀하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이론연구, 수련활동 개발·보급, 지도자 양성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지난 5. 31 교육개혁조치로 학생자원봉사활동이 강조되면서 자원봉사 관련 종합정보 제공을 위하여 '96년 6월 27일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 센터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자원봉사의 올바른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청소년자원봉사 정책모형을 연구·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 관련 정책입안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학계, 현장 지도자 등 전문가의 고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자원봉사 일선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현황도 파악하여 이를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정책모형을 개발하는데 반영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우리사회에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설문에 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본 연구의 자료에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리며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된 조사표는 가능한 '97.10.25일까지 FAX로 송부하여 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8층

문의 및 송부처 : ☎ 578-4104, FAX 576-4104

청소년자원봉사 정책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표

1. 귀 기관에 대하여

○ 기관명 :

○ 귀기관의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구체적으로)

예) 지방자치단체직영(: ○○○시 · 군 · 구)

· 지방자치단체 직영(:)

· 기타 : 위탁단체명(:)

○ 설치 년,월,일 : 년 월 일

○ 시설규모 : · 독립건물(: 평) · 임차건물(: 평)

○ 연간예산 : (총액 : 원)

· 국 고(원) · 도비(원)

· 지방비(원) · 자체(원)

○ 인력

○ · 상근직원(명) · 자원봉사자(명)

○ 사업

· '96년도 주요사업 및 실적(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 '97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2. 귀 기관에서 학생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특별히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3. 현재 시 · 도단위에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1개소씩 설치 ·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당 시 · 도청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부터 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 있다() 청소년자원봉사자 사전교육 관련()
- 청소년자원봉사지도자 연수 관련()
- 자원봉사 수요기관(활동장소)안내()
- 기타 ()
- 없다()

4. 해당 시·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확립되기를 원하십니까?

- 원한다() · 원하지 않는다()

만약, 원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협력되어지길 바라십니까?

.....

.....

.....

.....

.....

.....

.....

.....

.....

.....

질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송부처 :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주 소 :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8층

☎ (02)578-4104, FAX(02)576-4104 담당 : 정 화 수

〈 부록 3 〉 공익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公益自願奉仕活動支援法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公益分野의 自願奉仕活動을 振興함으로써 國民 개개인의 건전한 市民精神을 함양하고 地域社會發展과 福祉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自願奉仕活動”이라 함은 公益增進을 目的으로 營利的 反對給付없이 自發的으로 役務 등을 提供하는 것을 말한다.
2. “自願奉仕者”라 함은 第1號에 規定된 自願奉仕活動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3. “自願奉仕團體”라 함은 第1號에 規定된 自願奉仕活動을 行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設立된 非營利 法人 또는 團體(각각의 下部組織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自願奉仕需要者”라 함은 第1號에 規定된 自願奉仕活動을 필요로 하는 公共機關과 非營利 法人·團體 및 개인을 말한다.

第3條(自願奉仕活動의 範圍) 이 法의 적용을 받는 自願奉仕活動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地域社會開發에 관한 奉仕活動
2. 社會福祉 및 國民保健增進에 관한 奉仕活動

3. 環境保全 및 自然保護에 관한 奉仕活動
4. 敎育 및 靑少年善導에 관한 奉仕活動
5. 犯罪豫防에 관한 奉仕活動
6. 交通 및 基礎秩序啓導에 관한 奉仕活動
7. 災害·災難管理 및 救助에 관한 奉仕活動
8. 文化·藝術·體育振興에 관한 奉仕活動
9. 消費者保護에 관한 奉仕活動
10. 기타 地域社會發展과 住民福祉增進에 필요한 奉仕活動

第4條(自願奉仕理念 및 活動守則)① 自願奉仕活動은 참된 奉仕精神을 바탕으로 이웃과 社會問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奉仕함으로써 奉仕者 개인의 自己實現과 社會 전반의 公同이익을 增進하는 理念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自願奉仕者와 自願奉仕團體는 奉仕活動遂行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政黨이나 政治團體 또는 政治人을 支持·反對하기 위한 목적으로 輿論을 조성하거나 選舉運動에 관여하는 행위
2. 自願奉仕活動의 代價로 金品이나 財産上の 收益을 요구하는 행위
3. 自願奉仕活動遂行중에 알게 된 自願奉仕需要者の 公務上 秘密 및 私生活의 秘密을 정당한 사유없이 公開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4. 社會의 公共秩序를 侵害하거나 건전한 美風良俗을 해하는 행위

5. 自願奉仕需要者の 意思에 反하여 自願奉仕需要者에게 不利益을 주는 행위
 ③ 自願奉仕需要者は 自願奉仕者나 自願奉仕團體가 第2項의 각호의 規定을 위반한 때에는 自願奉仕活動을 中止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第5條(國家 등의 責任)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自願奉仕振興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여 國民의 자발적인 奉仕活動을 勸奨·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第6條(기본시책 등의 수립) ① 內務部長官(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은 自願奉仕活動의 振興에 관한 基本施策을 수립·施行한다.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基本施策에 따라 地域自願奉仕振興計劃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第7條(自願奉仕振興委員會 등의 設置)① 自願奉仕活動의 振興에 관한 基本施策 기타 重要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自願奉仕振興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② 第1項의 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地方自治團體의 自願奉仕振興計劃의 수립 기타 重要사항을 協議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 地域自願奉仕振興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第3項의 協議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 2 章 自願奉仕財團

第8條(自願奉仕財團의 設立)① 自願奉仕活動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自願奉仕財團(이하 “財

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 財團은 法人으로 한다.

③ 財團에 理事長 1人과 常任理事 1人을 포함한 10人 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두며, 理事長과 常任理事는 理事會에서 互選한다.

④ 理事는 自願奉仕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하고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自願奉仕振興委員會의 委員長이 위촉하되, 國會議長이 추천한 자 5人을 포함하여 야 하며, 監事는 理事會의 提請으로 主務部長官이 위촉한다.

⑤ 財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9條(財團의 事業) 財團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自願奉仕振興을 위한 調査·研究·弘報 및 國際交流事業
2. 자원봉사센터의 設立·운영 및 지원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프로그램의 開發·普及· 및 그 운영을 위한 사업
4. 自願奉仕者의 資質向上 및 士氣振作을 위한 사업
5. 自願奉仕基金의 造成·관리를 위한 사업
6. 기타 自願奉仕活動의 振興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第10條(자원봉사센터)① 財團이나 地方自治團體 또는 自願奉仕團體 기타 非營利 法人·團體는 地域社會의 自願奉仕活動을 支援·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호의 事業을 수행한다.

1. 自願奉仕者와 自願奉仕需要者의 發掘을 위한 사업
2. 自願奉仕活動의 需給管理를 위한 募集·配置·教育事業
3. 自願奉仕團體의 活動을 支援하기 위한 사업
4. 地域社會 자원봉사프로그램의 開發·普及을 위한 사업
5. 기타 地域社會 自願奉仕振興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③ 財團은 財團이외의 者가 設置한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指導와 助言을 할 수 있으며 事業費를 支援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의 設立·運營 및 事業費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自願奉仕基金)① 自願奉仕振興에 소요되는 費用 기타 經費에 充당하기 위하여 自願奉仕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 基金은 財團이 管理·運用하며 財團은 基金의 運用에 관한 重要사항을 審議·決定하기 위하여 基金管理委員會를 둔다.

③ 基金의 運用과 基金管理委員會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基金의 財源) 基金은 다음 각호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 및 政府이외의 자의 出捐金

2. 內務部長官이 승인하는 屋外廣告事業의 收益金
3. 主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基金의 부담으로 借入한 資金
4. 基金의 運用으로 발생하는 收益金
5. 기타 收益金

第13條(政府出捐金등)① 政府는 財團의 設立·운영에 소요되는 經費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財源에 充당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대하여 필요한 出捐金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地方自治團體는 당해 行政區域을 事業區域으로 하는 自願奉仕센터의 設立·운영 등에 필요한 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第14條(屋外廣告物事業) 財團은 基金의 造成에 소요되는 費用에 充당하기 위하여 屋外廣告物등 管理法의 規定에 따라 屋外廣告를 통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다만, 屋外廣告物의 種類·規格 및 設置場所에 관하여는 屋外廣告物등 管理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財團의 豫算 및 決算) ① 財團은 每會計年度의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를 당해 會計年度 開始 1月전까지 主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 ② 財團은 每會計年度 종료후 2月末까지 前會計年度의 決算書를 主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16條(國·公有財産 使用)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自願奉仕振興을 위하여 財團 또는 自願奉仕센터가 國·公有財産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貸與하거나 使用·收益하게 할 수 있다.

第17條(租稅減免)① 財團의 基金이나 財團 및 自願奉仕센터가 소유하는 不

動産으로서 設立目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 및 地方稅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 ② 財團의 基金造成을 目的으로 出捐한 金錢 기타 財産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 또는 기타 稅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計算의 特例를 適用할 수 있다.

第 3 章 自願奉仕者 및 自願奉仕財團 支援

第18條(自願奉仕活動 需給管理)① 自願奉仕活動을 하고자 하는 者나 團體는 財團 또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알선을 要請할 수 있다.

- ② 自願奉仕活動을 필요로 하는 者나 團體는 財團 또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自願奉仕者の 配置를 요청할 수 있다.

第19條(自願奉仕證書 交付)① 自願奉仕者を 배치한 財團이나 자원봉사센터 또는 自願奉仕團體는 일정기간이상 自願奉仕活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이를 證明하는 奉仕證書를 교부할 수 있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願奉仕證書를 교부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自願奉仕者の 奉仕活動經歷을 公正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奉仕證書를 허위로 작성·기재하거나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0條(自願奉仕者の 날등) ① 自願奉仕에 관한 國民의 參與를 增進하고 自願奉仕者の 士氣를 振作시키기 위하여 自願奉仕者の 날 및 自願奉仕週間을 定한다.

- ② 自願奉仕者の 날과 自願奉仕週間 및 그 行事に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1條(褒賞)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自願奉仕活動에 관하여 顯저한 功勞가 있는 個人이나 法人·團體에 대하여 褒賞할 수 있다.

第22條(就業등의 惠澤)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또는 法人·團體등은 自願奉仕活動의 擴散 및 定着을 위하여 일정기간이상의 自願奉仕活動從事者에 대하여 就業. 公職任用. 進學 등에 있어서 惠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國家등은 自願奉仕者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이상 지속적으로 奉仕活動을 수행한 經歷에 대하여는 유사분야에서의 勤務經歷으로 인정할 수 있다.

第23條(保險加入) 財團이나 자원봉사센터 또는 自願奉仕需要者는 自願奉仕者의 奉仕活動遂行중 발생하는 災害·死亡 등에 대비하여 保險에 가입할 수 있다.

第24條(實費支給) 自願奉仕需要者는 自願奉仕者와 自願奉仕團體에 대하여 奉仕活動에 필요한 物品 또는 費用을 自願奉仕者에게 지급할 수 있다.

第25條(事業費支援) 財團은 豫算의 범위내에서 自願奉仕團體의 活動과 사업에 필요한 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第 4 章 補則

第26條(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舉運動을 한 者
2. 第4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願奉仕活動의 代價로 金品이나 財産上의 收益을 요구한 者
3. 第4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家등의 公務上 秘密 또는 自願奉仕 需要者の 私生活의 秘密을 公開 또는 누설한 者

- ②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願奉仕證書를 허위로 교부하거나 이를 偽造 또는 變造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7條(施行令등)①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地方自治團體는 地域自願奉仕振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條例로 정할 수 있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財團의 設立準備)① 國務總理는 이 法 公布日로부터 6月이내에 財團을 設立하기 위하여 5人이내의 設立委員會를 위촉한다.

- ② 設立委員會는 定款을 작성하여 內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 設立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款을 認可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設立登記를 한 후 財團의 理事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④ 設立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에 116.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16. 公益自願奉仕活動支援法

〈 부록 4 〉 불런티어 활동 7개년 계획구상 -일본

「불런티어 활동 추진 7개년 계획 구상」에 대해

1993년 8월 /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1. 7개년 계획의 성격

1.1 책정의 목적 · 과정

불런티어 활동 추진 7개년 계획은 1993년 4월 14일에 고지되었던「국민의 사회 복지에 관한 활동에의 참가의 촉진에 관한 처치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복지 활동 참가 지침)」을 받고, 널리 사회적인 불런티어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1세기 중에 달성해야할 목표, 과제, 전략등을 밝힌 것이다.

7개년 계획은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전국 불런티어 활동진흥센터 운영 위원회등의 의논을 거쳐 만들어졌다. 전사협에서는 7개년 계획을 중앙사회복지심의회, 지역복지전문분과회에 대한 전사협의 제안으로 보고하며(1993년 5월 6일). 그 내용은 같은해 7월 29일의 심의회 의견서「불런티어 활동의 중·장기적인 진흥 방책에 대해서」에서 크게 취급하고 있다.

1.2 7개년 계획의 성격과 앞으로의 전개

7개년 계획은 불런티어 활동을 사회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 가라고 하는 시점에서 불런티어 활동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단체, 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는 청사진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구성되고 제안된 것이다.

이 계획의 구체화에 있어서는 불런티어 활동자는 물론 경제, 노동 관계자, 학교 관계자, 메스컴 관계자등 불런티어 활동 추진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조직, 관계자와 협동해 추진, 구체화를 꾀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런티어 활동 진흥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가 달성해야 할 문제에 대해 같은 시기에 전국 사회복지협의회가 작성한 「만남의 네트워크 계획 21 기본 구상」에도 7개년 계획의 취지를 많이 포함 하고 있다. 이것을 기본으로 전사협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로써의 활동, 추진의 노하우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급을 꾀하고 있다.

2. 7개년 계획의 내용

2.1 7개년 계획의 구조

7개년 계획은 그 기본 목표인 3가지 중점 과제와 4가지의 기본 구상과 구상 실현을 위한 시책,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2 기본 목표와 3가지 중점 과제

시민이 사회 복지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스스로 활동에 참가하는 속에서 학습하고 자신의 손으로 복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민의 참가를 기본으로 하는 복지 활동에 의한 참가형의 복지사회 만들기 는 사회복지협의회회 의 가장 기본적인 원점이며 또한 목표로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장기간에 걸쳐 활동해 온 것이다.

복지활동 참가 지침이 목표하는 것은 진정한 참가형의 복지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그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과반수가 자발적으로 복지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국민의 과반수가 자발적으로 복지활동에 참가하는 참가형 사회의 실현」을 기본 목표로 하고 (1)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부담 없이 활동에 참가 할 수 있는 환경, 계기 만들기 (2) 불런티어 활동에의 여론의 형성,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 만들기 (3) 추진 거점으로써의 불런티어 센터 만들기의 3가지를 큰 중점 과제로 했다.

2.3 4가지의 기본 구상과 실현을 위한 시책 · 사업

(1) 불런티어 어드바이서, 코디네이터 구상

어드바이서, 코디네이터 구상은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이 가까운 주위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드바이서로 추진, 접수 기관에서 중핵이 되는 일을 하는 코디네이터를 양성해 가는 구상이다. 불런티어 센터의 네트워크 정비 구상이 골격이라고 한다면 어드바이서, 코디네이터는 그것들을 받치고 더 나아

가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신경, 정보에 해당되는 사람의 네트워크이다.

앞으로의 볼런티어 활동은 사회복지시설, 사회교육, 민간 볼런티어 단체 등은 물론 기업, 노조, 학교, 생협, 농협 등 모든 기관이 각각 주체적으로 활동을 추진해가야 한다. 어드바이서, 코디네이터구상은 이러한 다양한 단체의 주체적인 활동을 촉진·지원하는 한편,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 연대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시점에서 착상되었다. 지역, 단체 등의 독자의 활동은 그곳의 코디네이터, 어드바이서가 담당하는 한편 볼런티어센터는 코디네이터, 어드바이서에의 지원이나 협동활동을 하는 것으로 여러가지 단체와 협력·연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 어드바이서

어드바이서는 언제나, 부담없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볼런티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하고 활동의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까운 주위에서 언제든지 부담없이 상담에 응해주며, 정보제공, 활동의 어드바이스를 한다. 학교, 직장, 노조, 볼런티어 그룹, 병원, 시설 그외 모든 지역사회 또는 공동 지역에서 활동한다.

볼런티어 센터에서는 어드바이서에 대한 등록·지원 시스템을 설치, 어드바이서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제공, 연수, 어드바이서 연합협의회의 운영 등을 하며 일상적인 활동의 지원이나 동료간 교류의 지원을 한다.

■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는 볼런티어 활동의 추진을 하는 중핵적인 기관(볼런티어 센터 등), 단체(기업 사회 공헌 추진실, 주민 참가형 단체, 사회교육시설·학교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볼런티어 활동 추진을 위한 기획, 어드바이서에의 상담·지원, 조사·연구, 연락·조정, 개발업무 등을 한다. 그 신분은 상근으로 설치 될 경우와 비상근의 볼런티어에 의한 경우가 있다.

볼런티어 센터는 코디네이터에 대한 등록·지원 시스템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정보 제공, 단계적 향상을 위한 연수, 코디네이터 연합협의회 등의 운영을 맡고 활동을 지원한다.

모두다 연수 교과과정·교재의 개발, 등록·지원 시스템의 개발과 활동의 조성 등을 검토하고 구체화시켜 나간다.

(2) 볼런티어 생활 원조 프로그램 구상

볼런티어 생활 원조 프로그램의 구상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부담없이, 즐겁게 참가할 수 있도록 생활 공간, 생활 방식, 활동 의욕, 활동의 단계에 대한 다양한 활동·학습의 기회를 개발해 제공해 가는 것이다.

아동, 청년, 노동자층, 연장자층 등 세대별로 또는 휴일·야간, 반나절의 활동, 장기의 휴가를 이용한 활동 등의 생활 방식에 따른, 또는 처음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을 향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이나 일상적·계속적인 서비스 활동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활동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 정신장애자 지원, 등교 거부 아동이나 가정의 지원, 에이즈, 재일 외국인 지원활동 등 사회적인 요구에 대응한 새로운 활동 영역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누구나, 부담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의 메뉴를 풍부하게 해 나가는 것(계기 만들기)과 동시에 활동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욕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의 체험을 넓혀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과 지원이라는 시점도 중요하다.

(3) 여론 형성에 의한 평가의 향상과 사회적 지원체제 수립

복지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당연히 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활동을 하는 자나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활동의 측면 지원이나 자금조달·조성의 확대가 필요하다.

먼저 평가에 대해서는 활동의 경제·사회적 효과의 측정이나 PR등도 포함한 볼런티어 활동 전체의 사회적인 의의를 침투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의의의 인식과 활동하는 개인이나 활동 추진 단체에의 평가·지원은 표리 일체이기 때문이다.

또 활동하는자나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써는 「복지활동 참가지침」에 기초를 둔 公金, 지역 복지 기금 등의 도입을 꾀함과 동시에 기업, 재단 등의 민간 자원의 조성, 공동 모금의 활용, 개인의 기부, 그 외의 여러가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 추진 단체의 조직화, 볼런티어 센터에 기금 설치, 민간 자금 등의 조달 또는 기부금의 수납과 알선의 추진, 활동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정, 기업에서의 볼런티어 휴가, 기증 등 지원의 추진,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볼런티어 보험의 충실 등이 문제가 된다. 특히 후에 센터 네트워크 구상에서 살펴 보겠지만 지원을 하는 쪽과 지원을 원하는 쪽을 연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볼런티

어 센터의 등록과 알선 기능의 충실이 중요하다.

이것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볼런티어 활동 단체, 활동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회적인 조직, 메스컴등과 협력, 공동의 조사·연구에 기반을 둔 제언, 철저한 PR활동의 전개등이 필요하다.

(4) 각 시·구·동 및 각 도와 전국을 잇는 볼런티어 센터 네트워크의 정비
볼런티어 센터의 전국적 정비와 중점 사업의 추진, 볼런티어 센터 기능의 확충이 주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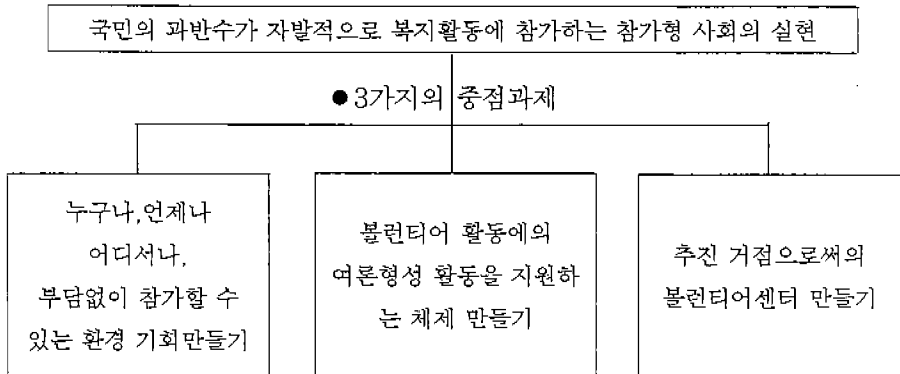
현재, 시·정·촌에는 약 1600개의 센터가 있으나 이것을 전체 시정촌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도·도·부·현, 전국의 센터들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거점으로써의 설비와 건물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복지 교육 또는 학습 활동, 기업 또는 노조의 사회공헌활동, 근로자의 볼런티어 활동, 주민 참가형 재택 복지 서비스 활동등은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맞춰 전개해 나가는 기본적인 중점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복지교육·학습 활동은 유소년기부터의 볼런티어 활동의 체험과 동시에 청년기, 장년기, 고령기까지 계속적으로 활동에 참가 하는 참가형 사회를 지탱하는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다. 기업·노조의 사회 공헌 활동이나 근로자의 볼런티어 활동은 지금까지 활동에의 참가가 가장 낮은 층의 조직화라는 점과 커다란 지원 또는 추진자로써의 기업 또는 노조와의 협동 관계만들기라고 하는 점에서 새로이 개척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주민 참가형 서비스는 참가의 폭을 크게 넓힌다는 의미와 새로운 형태의 민간의 비영리 활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 도시나 마을 단위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형태로 강력한 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

볼런티어 센터의 기능의 확충에는 볼런티어 어드바이저, 코디네이터에의 연수, 등록과 지원 기능의 개발, 정비, 볼런티어 활동을 하는자와 지원을 원하는 자를 정확하게 연결시키기 위한 등록 기능의 확대와 충실이 필요하다.

〈볼런티어 활동 추진 7개년 계획 구상도〉

■ 기본 목표 ■



〈부록 5〉 대입전형 중 봉사활동 반영현황

'97, '98학년도 대입전형 중 봉사활동 반영현황

선립별	대학명	97학년도	비고	98학년도	비고
국공립	강릉대	4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 포함	7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 포함
국공립	강원대	10		1.47	
국공립	경북대	1		10	
국공립	목포대	10		20	
국공립	목포해양대	10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 포함	4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 자격증 수상경력 포함
국공립	부경대	10			
국공립	부산대				
국공립	서울대				
국공립	서울시립대	10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 포함	5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 자격증 수상경력 포함
국공립	인천대	6		1.4	
국공립	충북대	1.1		5	
국공립	한국교원대	10		7.3587	
국공립 평균		7.21		5	
교육대	광주교대	10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 자격증 수상경력 포함	10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 자격증 수상경력 포함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 포함
교육대	광주교대			10	
교육대	서울교대			2.5	
교육대	인천교대	1.56		5	
교육대	전주교대	5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 포함	10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 자격증 수상경력 포함
교육대	제주교대				
교육대	청주교대	10		10	
교육대	춘천교대	18.75		7.9166	
교육대 평균		9.062		7	
사립대	카톨릭대	20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 자격증 수상경력 포함	5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 자격증 수상경력 포함
사립대	감리교신대	3.33		3.33	
사립대	건국대	5		5	
사립대	건양대	1		10	
사립대	경기대	10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 자격증 수상경력 포함	5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 자격증 수상경력 포함
사립대	경성대	5		5	
사립대	경희대	0.36		5	
사립대	고려대			10	
사립대	한양대	2.5	민점에 포함	0.13	민점에 포함
사립대	광주카톨릭			10	
사립대	그리스도신	20			

설립별	대학명	97학년도	비고	98학년도	비고
사립대	나사렛대	5		20	
사립대	대전카톨릭	10	특별활동포함		
사립대	동국대	3		0.5	
사립대	동서대	5		5	
사립대	농신대	10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포함	10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포함
사립대	동양대	10		20	
사립대	동희대			5	
사립대	명지대	2.22		2.22	
사립대	배재대			5	
사립대	부산여대	10	행동발달상황포함		
사립대	부신외대	5		10	
사립대	삼육대	1	면접에 포함		
사립대	상지대	3.33		4.55	
사립대	서강대	4.65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포함	1.39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포함
사립대	시경대	4			
사립대	서울신대	12.5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포함	12.5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포함
사립대	서울여대	10			
사립대	서원대	12.5		12.5	2,3학년 합산
사립대	성신여대	10		5	
사립대	수원카톨릭	10		10	
사립대	순신대	10		10	
사립대	아세아연합	10			
사립대	아주대	8		7.5	면접에 포함
사립대	아양대	10			
사립대	영남신대	10	면접에 포함		
사립대	윤산대	1.25		12.5	
사립대	위덕대	3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포함		
사립대	이화여대	1		3	
사립대	인천카톨릭	10		10	
사립대	장로회신대	1	면접에 포함됨		
사립대	중앙대	10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포함	10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포함
사립대	정주대	10		10	
사립대	충신대	3.75		4.75	
사립대	한국기술교대	2		5	
사립대	한남대	5		5	
사립대	한림대			10	
사립대	한영신학대			2	
사립대	한일신학대	5			
사립대	협성대	10		10	
사립대	호남대				
사립대	호남신대	10			
사립대	호서대	10			
사립대 평균		7.1974			
국립개방	삼척산업대	10		10	
국립개방 평균		10		10	
사립개방	동명정보대	10		16.65	
사립개방	우송산업대	8	가산점	4	가산점
사립개방 평균		9		10.32	
전제생관		7.3562		7.5471	
		5		4	

〈 '97, '98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실질반영비율 대비표〉

선립별	대 학명	98학년도 학생부 외형상 반영비율(%)	97학년도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	98학년도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	전년도 대비 증감현황
교육대	공주교대	45	10.2	14.6	4.4
교육대	광주교대	40	10.2	10.2	0
교육대	대구교대	45	7	7	0
교육대	부산교대	40	8.75	8.75	0
교육대	서울교대	40	10.2	8	-2.2
교육대	인천교대	40	5.25	7	1.75
교육대	전주교대	40	24.65	13.45	-11.2
교육대	제주교대	40	10.2	10.2	0
교육대	진주교대	45	9.4	8.75	-0.65
교육대	청주교대	45	9.1	9.6	0.5
교육대	춘천교대	40	8.69	9.72	1.03
교육대 평균	11교	41.81818182	10.33090909	9.751818182	-0.579090909
국공립	강릉대	40	9.36	9.36	0
국공립	강원대	40	9.92	7.7	-2.22
국공립	경북대	42.5	9.2	10.5	1.3
국공립	경상대	40	6.39	6.26	-0.13
국공립	공주대	40	6.8	8.2	1.4
국공립	군산대	40	10.2	9.2	-1
국공립	금오공대	40	10.2	10.2	0
국공립	목포대	40	8.6	8.8	0.2
국공립	목포해양대	40	9.8	9.8	0
국공립	부경대	40	10.2	9.2	-1
국공립	부산대	40	5	8	3
국공립	서울대	40	8.43	8.43	0
국공립	서울시립대	40	3.2	8	4.8
국공립	순천대	40	3.5	8.4	4.9
국공립	안동대	40	8.6	10	1.4
국공립	여수수산대	40	10.24	10.24	0
국공립	인천대	40	10.2	8.6	-1.6
국공립	전남대	40	4	8	4
국공립	전북대	40	8.6	8.6	0
국공립	제주대	40	8.6	8.6	0
국공립	창원대	40	7	8.4	1.4
국공립	충남대	40	7.2	8.6	1.4
국공립	충북대	40	7.88	10.48	2.6
국공립	한국교원대	40	8	9.6	1.6
국공립	한국체대	35	7.4	10.08	2.68
국공립	한국해양대	40	8	8	0
국공립 평균	26교	39.90384615	7.943076923	8.894230769	0.951153846

설립별	대학명	98학년도 학생부 외형상 반영비율(%)	97학년도 학생부 실적 반영비율(%)	98학년도 학생부 실적 반영비율(%)	전년도 대비 증감현황
사립대	가야대	40	9	9	0
사립대	카톨릭대	30	6.914	5.12	-1.794
사립대	감리교신대	30	9.4	5	-4.4
사립대	강남대	40	10.56	7.28	-3.28
사립대	건양대	50	11.6	6.75	-4.85
사립대	경기대	36	7.3	6.6	-0.7
사립대	경남대	50	6.8	6.8	0
사립대	경동대	40	신설대	6.2	
사립대	경산대	40	5	10	5
사립대	경성대	40	5.7	5.7	0
사립대	경원대	30	12	8.6	-3.4
사립대	경일대	50	신설대	8.75	
사립대	경주대	50	7	7	0
사립대	경희대	40	4.1	6.2	2.1
사립대	계명대	40	7.2	8	0.8
사립대	고려대	40	2.93	5.3	2.37
사립대	고신대	40	10	8.4	-1.6
사립대	관동대	40	9.5	9.6	0.1
사립대	광신대	60	신설대	10	
사립대	광운대	40	4.2	7.2	3
사립대	광주카톨릭대	50	10.1	10.1	0
사립대	광주여대	45	신설대	6.4	
사립대	광주예술	40	신설대	7	
사립대	국민대	40	2.1	5.09	2.99
사립대	그리스도신	40	7.5	5.5	-2
사립대	나사렛대	40	12.2	11	-1.2
사립대	단국대	40	8.4	8.4	0
사립대	대구대	40	7.5	5	-2.5
사립대	대구예술	30	신설대	7.108	
사립대	대구효성	40	4.5	4.5	0
사립대	대불대	50	7	10.5	3.5
사립대	대신대	40	신설대	8	
사립대	대진카톨릭	40	10.2	15.6	5.4
사립대	대전대	50	17	8	-9
사립대	대진대	40	10.2	10.2	0
사립대	덕성여대	40	2.2	5	2.8
사립대	동국대	40	7.36	8.09	0.73
사립대	동덕여대	30	6.6	5.4	-1.2
사립대	동서대	40	4.2	4	-0.2
사립대	동신대	40	12.75	10.2	-2.55
사립대	동아대	48	4.9	7.4	2.5
사립대	동양대	40	13.8	5.7	-8.1
사립대	동외대	40	9.24	5.3	-3.94
사립대	명지대	45	10.5	7.5	-3

설립별	대학명	98학년도 학생부 외형상 반영비율(%)	97학년도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	98학년도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	전년도 대비 증감현황
사립대	목원대	40	8.6	8.6	0
사립대	베재대	40	5	8	3
사립대	부산카톨릭	30	16	16	0
사립대	부산여대	35	7.7	7.2	-0.5
사립대	삼육대	40	3.3	7	3.7
사립대	상명대	40	4.16	5.6	1.44
사립대	상지대	55	15.5	14.6	-0.9
사립대	서강대	45	7.9	5	-2.9
사립대	서경대	40	15.38	8	-7.38
사립대	서남대	40	7	7	0
사립대	서울신대	40	7.3	7.3	0
사립대	서울여대	40	12	5	-7
사립대	서원대	40	5.6	7.2	1.6
사립대	선문대	40	7.8	7.8	0
사립대	성결대	40	7	7	0
사립대	성공회대	40	10	8	-2
사립대	성균관대	40	3.68	5.2	1.52
사립대	성신여대	40	8.8	7.2	-1.6
사립대	세명대	40	9.24	9.24	0
사립대	세종대	40	2.2	5.1	2.9
사립대	수원카톨릭	30	16	12	-4
사립대	수원대	40	2.8	5.6	2.8
사립대	숙명여대	40	2.6	5.8	3.2
사립대	순신대	40	11	8	-3
사립대	순천향대	40	7.8	7.8	0
사립대	숭실대	30	3.5	5.925	2.425
사립대	아세아연합	40	18.8	13.6	-5.2
사립대	아주대	40	4.54	5	0.46
사립대	안양대	40	6.4	7.8	1.4
사립대	연세대	40	4.4	7.2	2.8
사립대	영남대	50	10.6	6.7	-3.9
사립대	영남신대	40	9.4	9.4	0
사립대	영동공대	50	10.5	9	-1.5
사립대	영산원불교	40	신설대	5	
사립대	용인대	30	8.6	7.2	-1.4
사립대	우석대	40	5.8	5.8	0
사립대	울산대	40	8	5.4	-2.6
사립대	원광대	40	3.04	5	1.96
사립대	위덕대	38	8.2	6.2	-2
사립대	울지외과	50	신설대	5.375	
사립대	이화여대	40	2.6	5.1	2.5
사립대	인제대	40	2	8	6
사립대	인천카톨릭	40	10.2	10.2	0
사립대	인하대	30	2.8	5.6	2.8

설립별	대학명	98학년도 학생부 외형상 반영비율(%)	97학년도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	98학년도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	전년도 대비 증감현황
사립대	장로회신대	30	8.4	9.8	1.4
사립대	전주대	40	5.8	5.8	0
사립대	조선대	40	1.4	7	5.6
사립대	중앙대	40	7.124	5.1	-2.024
사립대	중앙승가	40	신설대	20.8	
사립대	천안대	40	10	14	4
사립대	청주대	40	26.4	14	-12.4
사립대	충신대	40	9.8	9.8	0
사립대	추계예술	20	신설대	8	
사립대	침례신대	89	10	18.67	8.67
사립대	칼빈대	30	신설대	6.3	
사립대	평택대	40	10	10	0
사립대	포천중문 외과대	40	신설대	5	
사립대	포항공대	50	4	5	1
사립대	한국기술교	40	8.4	5	-3.4
사립대	한국성서	40	신설대	5.3	
사립대	한국외대	40	3.4	5.2	1.8
사립대	한국항공대	40	5.6	5.6	0
사립대	한남대	40	9.8	9.84	0.04
사립대	한동대	40	9.7	20	10.3
사립대	한라공과	50	신설대	5.5	
사립대	한림대	40	4.3	10.2	5.9
사립대	한서대	40	5.3	6.4	1.1
사립대	한성대	30	4.2	5.1	0.9
사립대	한신대	40	32	14	-18
사립대	한양대	40	2.2	5.2	3
사립대	한영신학	40	신설대	26.6	
사립대	한일신대	99	25.25	22.8	-2.45
사립대	협성대	30	6.56	6.56	0
사립대	호남대	40	5.8	5.8	0
사립대	호남신대	40	5.1	5.1	0
사립대	호서대	40	9.8	9.4	-0.4
사립대	홍익대	40	3.28	5.15	1.87
사립대 평균	124교	41.08870968	8.081925926	8.130870968	0.048945042
전체평균	161교	40.94720497	8.227641379	8.36489441	0.137253031

(자료 : 대학의 사회봉사와 종교생활원봉사협력방안, 1997, 한국자원봉사포럼)

- ◆ 실질반영을 전년 대비 동일 : 38개 대학
- ◆ 전년 대비 증가 : 61개 대학
- ◆ 전년 대비 감소 : 46개 대학
- ◆ 97학년도 신설대학 16개 제외